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평가와 시사점

김준동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평가와 시사점

김준동

연구자료 22-04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평가와 시사점

인 쇄 2022년 10월 18일
발 행 2022년 10월 25일
발행인 김흥종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크리커뮤니케이션

©20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7,000원
ISBN 978-89-322-2486-2
978-89-322-2064-2(세트)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08년 7월 이후 중단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을 정리·평가하고, 저자가 수석대표로서 활동하면서 취득한 공식·비공식 정보를 분석·기록한 일종의 사료이다. 이를 기초로 향후 협상 재개 시 우리나라의 제2차 수정양허안의 작성 방향과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과 관련해서는 우선 다자회의인 서비스교역이 사회의 특별 세션에서 주로 논의된 서비스교역 평가, 협상 진전 검토,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방식(LDC Modalities)에 대해 평가하였다. 그다음으로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하였던 복수국간 협상 대상인 총 22개 분야 가운데 19개 분야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그 뒤로 산하기구 회의 등에서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 다음 향후 협상 재개 시 우리 측의 제2차 수정양허안의 작성 방향과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서비스교역 평가와 관련해서는 개도국들은 GATS 제4조(개도국의 참여 증대)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교역 평가에서 의미 있는 결론을 낸 이후에야 본격적인 양허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 결론을 조속히 도출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한편으로는 개도국이 점진적으로 자유화를 시도하려는 뜻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도국들이 이를 개도국들의 수출 이해가 큰 분야인 Mode 4에 대해 선진국들의 양허 확대를 촉구하는 데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다.

협상 진전 검토와 관련해서는 주요 회원국들이 협상의 전반적인 진전과 함께 주요 관심 분야의 진전을 논의하였는데, 분야별 제안서의 발표 및 논의도 이루어

졌다. 이 자리에서 주로 개도국들이 Mode 4의 협상에서의 진전이 부진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왔다. 아울러 2005년에는 기존의 양자협상에 의존하던 협상 방식을 보완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다수의 개도국들은 이 의제하에 농업 분야와 NAMA에서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 서비스협상 분야에서만 야심적인 양허 계획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였다.

2003년 9월 3일에 열린 특별 세션에서 채택된 LDC 모델리티는 우선 회원국들이 LDC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이 양허를 추구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에 LDC 모델리티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LDC에 수출 이해가 있는 분야와 공급 형태, 즉 Mode 4에서 유효한 시장접근을 제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한편 분야별 복수국간 협상은 최혜국 대우 면제, Mode 1 및 Mode 2, Mode 3, Mode 4 등 수평적 이슈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 통신서비스, 컴퓨터관련서비스 등 총 22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분야별 협상은 뜻을 같이하는 회원국들끼리 모인 프렌즈 그룹을 중심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협상 담당자와 규제 당국 간에 격의 없는 토론을 거쳐 양허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즉 서비스 분야별로 양허의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규제 당국의 참여자들이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해 협상 담당자들이 이러한 규제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면서 양허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총 22개 분야 중 복수적 양허 요청서가 인터넷에 유출된 15개 분야와 기타 제안서를 중심으로 그 주요 쟁점을 파악할 수 있는 4개 분야 등 총 19개 분야를 정리·분석하였다.

산하기구 회의는 크게 긴급세이프가드조치, 보조금, 정부조달 관련 규범 제정 작업을 논의하는 규범작업반, 양허표 기재 방법상 기술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양허위원회, 금융서비스 분야에 특화되어 건전성 규제 등 기술적인 사안을 논의하는 금융서비스위원회, 그리고 UR 타결 시 후속이행과제로 남겨 둔 것으로 GATS 제6.4조에 따라 규범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국내규제작업반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동 산하기구 회의 중 특히 규범작업반의 경우는 관련 규범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회원국과 반대하는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향후 협상이 재개되어도 그 진전이 불투명하다.

양자협상은 회원국 양자간에 서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전통적인 양허 요청 및 양허(R/O) 방법에 의존하여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는 우리 측에서 먼저 양자협상을 제안하지 않고, 상대국에서 요청하면 수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우선 Mode 4 같은 수평적 이슈와 법률서비스, 환경서비스 등 분야별로 협상이 재개되면 우리 측 제2차 수정양허안의 작성 시 참고할 만한 사항과 기타 협상 전략을 제시하였다. 우리의 경우 DDA 서비스협상 초기와는 달리 각 분야의 서비스산업이 상당히 발전한 상태이고 이미 선진국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선언하였으므로, 전향적으로 제2차 수정양허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혜국 대우 면제 조치가 남아 있지 않아 이로부터 자유로우므로, 이를 협상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우리 측 양허표 중 건축설계서비스의 추가적 약속

란에 기재한 자격인정 관련 사항은 다른 어떤 WTO 회원국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도 여타 회원국에 자국의 양허표에 반영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아울러 통신, 건설, 유통, 금융, 해운 등 5대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들 서비스 분야에서의 양허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국문요약	3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2. DDA 서비스협상의 경과	12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17
4. 연구의 구성	20
제2장 다자협상 회의	21
1. 서비스교역 평가	21
2. 협상 진전 검토	26
3.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방식	38
제3장 분야별 복수국간 협상	40
1. MFN 면제	42
2. 국경 간 공급(Mode 1 및 Mode 2)	44
3. Mode 3	47
4. Mode 4	47
5. 법률서비스	49
6. 건축설계서비스 및 엔지니어링서비스	51
7. 컴퓨터관련서비스	52
8. 통신서비스	53
9. 우편/쿠리어/특급배달서비스	54
10. 시청각서비스	55

11. 건설서비스	59
12. 교육서비스	60
13. 유통서비스	61
14. 환경서비스	61
15. 금융서비스	63
16. 해운서비스	64
17. 항공운송서비스	67
18. 물류서비스	69
19. 에너지서비스	71

제4장 산하기구 회의 74

1. 규범작업반	74
가. 긴급세이프가드조치	74
나. 보조금	77
다. 정부조달	80
2. 양허위원회	82
3. 금융서비스위원회	83
4. 국내규제작업반	83

제5장 양자협상 85

1. 미국	85
2. EU	86
3. 일본	87
4. 중국	87
5. 기타	88

제6장 결론 89

1. 제2차 수정 양허안 작성 방향 89

가. 수평적 양허 89

나. 분야별 양허 90

2.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 95

가. MFN 면제 조치 95

나. 건축설계서비스 분야의 자격인정 관련 AC 95

다. 5대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 분야 양허 요청 96

참고문헌 97

부록. DDA 서비스협상 수석대표 주요 발언문 모음 105

1. 서비스교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105

2. 복수적 협상(Plurilaterals) 132

3. 산하기구(Subsidiary Bodies) 회의 135

Executive Summary 141



표 차례

표 1-1. GATS 서비스 공급 형태	13
표 1-2. 홍콩 각료선언문 부속서상 양허 개선 목표	14
표 2-1. WTO 주요 회원국의 DDA 서비스협상에서의 관심 분야 및 공급 형태	36
표 3-1. 우리나라의 복수적 R/O 협상 참여 현황	41
표 3-2. 국경 간 공급의 복수적 양허 요청의 범위	45
표 3-3. 국경 간 공급 분야 복수적 양허 요청의 주요 내용	47
표 3-4. Mode 4의 범주	48
표 3-5. 홍콩 각료선언문 부속서상 Mode 4 관련 양허의 목표 수준	48
표 3-6. 법률서비스 분야 복수적 양허 요청의 주요 내용	50
표 3-7.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 복수적 양허 요청의 주요 내용	51
표 3-8. 컴퓨터관련서비스 분야 복수적 양허 요청의 주요 내용	52
표 3-9. 통신서비스 분야 복수적 양허 요청의 주요 내용	53
표 3-10. 우편/쿠리어/특급배달서비스 분야 복수적 양허 요청의 주요 내용	54
표 3-11. 시청각서비스 분야 복수적 양허 요청의 주요 내용	55
표 3-12. 건설서비스 분야 복수적 양허 요청의 주요 내용	59
표 3-13. 교육서비스 분야 복수적 양허 요청의 주요 내용	60
표 3-14. 환경서비스 분야 복수적 양허 요청의 주요 내용	62
표 3-15. 금융서비스 분야 복수적 양허 요청의 주요 내용	63
표 3-16. 해운서비스 분야 복수적 양허 요청의 주요 내용	65
표 3-17. 항공운송서비스 분야 복수적 양허 요청의 주요 내용	68
표 3-18. 물류서비스 분야 복수적 양허 요청의 주요 내용	69
표 3-19. 에너지서비스 분야 복수적 양허 요청의 주요 내용	7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서비스협상은 2008년 7월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농업 등을 포함해 일괄 타결이 실패함에 따라 현재까지 교착 상태이다. 기존 보고서에서 주요국의 양허안을 분석하였으나, 홍콩 각료회의 이후 진행된 분야별 복수국간 협상 및 산하기구 회의에서 저자가 DDA 서비스협상의 수석대표로서 비공식 접촉으로 관찰 및 평가 등을 파악하였으나, 이를 기록한 것이 없어 그 배경 관련 자료가 사장될 위기에 있다.

이에 저자가 DDA 서비스협상 수석대표로서 활동하면서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파악한 정보¹⁾를 기초로 분석·평가한 제반 사항을 정리·기록하여 일종의 사료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협상 재개 시 제2차 수정양허안의 제출에 대비하여 우리 측의 입장 마련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보고서에서 기술한 사안 이외에 저자가 DDA 서비스협상 수석대표로서 비공식 접촉 등을 통해 파악한 관찰 및 평가를 분석·기록하고자 한다. 또한 비공개 협상 문건들이 공개 문건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들 문건에 대한 분석·평가도 수행하고자 한다. 이에 기초하여 향후 DDA 협상이 재개될 때 우리 측의 제2차 수정양허안의 작성 방향과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복수적 양허요청서나 주요국의 양허안, 각종 GATS 회의기구의 회의록, 회원국들의 제안서, 선언문 등 공개된 정보 이외에 협상 회기 중 서비스교역 이사회 특별회의 의장 주재 만찬 간담회, 주요국 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 주요국 협상대표와 WTO 카페테리아에서의 티타임, WTO 사무국 고위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등에서 취득한 정보를 가리킨다.

2. DDA 서비스협상의 경과²⁾

WTO 서비스협상은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제19조 제1항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UR: Uruguay Round)의 후속 의제(built-in-agenda)로 2000년 초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³⁾ 이후 협상 방식과 절차에 관하여 각 회원국의 제안서가 제출되어 논의되었는데, 우리나라도 2000년 11월에 통신, 건설, 유통, 금융, 해운 등 5대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infrastructure services)⁴⁾에 중점을 두고 이 서비스의 자유화를 촉구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였다.⁵⁾

2001년 3월에 서비스교역이사회(CTS: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는 「서비스교역에 관한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절차」를 채택한 바 있다.⁶⁾ 동 가이드라인은 협상의 주요 방식으로 양허 요청과 양허(R/O: request-offer)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2001년 11월에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무역자유화 협상으로서 도하개발어젠다가 출범함에 따라 2000년부터 별도로 진행되어 오던 농업과 서비스협상도 DDA 협상의 틀 안에 편입되었다.⁷⁾ 동 도하 각료선언문에서는 2001년 3월에 채택된 「서비스교역에 관한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절차」를 추인하고, 1차 양허요청서(initial request)의 제출 시한을 2002년 6월 30일로, 1차 양허안(initial offer)의 제출 시한을

2) DDA 협상 전반에 걸쳐 2012년까지의 경과는 김준동 외(2012), pp. 25~50 참고.

3) UR 협상에서는 서비스교역 분야가 처음으로 다자간체제에 편입됨에 따라 관련 규범 제정에 집중하였지만, 시장개방을 위한 양허협상 측면에서는 UR 협상은 미흡하였다. 이에 GATS 제19조 제1항에서는 WTO 협정이 발효된 후 5년 이내에 협상을 재개하기로 명문화하였고, 이에 따라 2000년 2월에 서비스 분야 후속 협상이 개시되었다.

4) 서비스교역이 확대되고 다수의 하위 분야로 구성되고 있어, 서로 간에 더욱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다. 이에 특정 서비스의 공급 제한은 여타 서비스의 공급에 심각하게 영향을 준다. 이러한 특징은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의 양허는 여타 분야의 양허를 상업적으로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든다(WTO 2000, p. 3, 제16항 참고).

5) WTO(2000) 참고.

6) WTO(2001b) 참고.

7) WTO(2001c), p. 3, 제15항 참고.

2003년 3월 31일로 설정하였다.⁸⁾ 그 후 2004년 8월 1일 일반이사회에서 채택된 소위 ‘7월 패키지(July package)’에서 수정양허안의 제출 시한이 2005년 5월 말로 결정되었다.⁹⁾

2005년 12월 홍콩에서 개최된 제6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네 가지의 공급 형태(Mode), MFN 면제 조치, 양허표 기재 방식(scheduling of commitments)에 대해 양허 개선 목표(objectives)를 설정하였고(표 1-1, 표 1-2 참고),¹⁰⁾ 아울러 양자간 R/O 협상 외에 복수국간 협상을 추구하는 것에도 합의하였다.¹¹⁾

표 1-1. GATS 서비스 공급 형태			
형태	주요 내용		예
Mode 1	국경 간 공급	한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그 밖의 회원국의 영토 내로의 서비스 공급	원격교육 원격진료
Mode 2	해외 소비	한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그 밖의 회원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해외유학 해외치료
Mode 3	상업적 주재	그 밖의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해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 공급	국내분교 설립 자회사 설립
Mode 4	자연인 주재	그 밖의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해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 공급	자회사 임원 기술사 등의 이동

자료: 김준동 외(2008), p. 32, [표 2-1], 재인용.

8) WTO(2001c), p. 3, 제15항 참고.

9) WTO(2004f), p. 3, 제1.e항 참고.

10) WTO(2005n), p. C-1, Annex C 제1항 참고.

11) *Ibid.*, p. C-3, Annex C 제7항 참고.

표 1-2. 홍콩 각료선언문 부속서상 양허 개선 목표

형태	주요 내용
Mode 1	(i) 비차별적 기초에서 현존 시장접근(MA: Market Access) 수준 양허 (ii) 기존 상업적 주재 요건 철폐
Mode 2	(i) 비차별적 기초에서 현존 MA 수준 양허 (ii) Mode 1에 대해 양허를 한 경우 Mode 2에 대해서도 양허
Mode 3	(i) 외국인 자본 참여 수준 증대 양허 (ii) 경제적 수요심사(ENT: Economic Needs Tests)의 철폐 또는 상당한 감축 (iii) 기업의 법적 형태와 관련해 보다 높은 수준의 유연성(flexibility)을 허용하도록 양허
Mode 4	(i) 상업적 주재로부터 분리된 계약서비스 공급자(Contractual Services Suppliers)와 독립전문가(Independent Professionals)에 관한 신규 양허 또는 양허 개선 - ENT의 철폐 또는 상당한 감축 - 규정된 체제기간 및 갱신 가능성의 표기 (ii) 기업 내 전근자(Intra-corporate Transferees)와 사업방문자(Business Visitors)에 관한 신규 양허 또는 양허 개선 - ENT의 철폐 또는 상당한 감축 - 규정된 체제기간 및 갱신 가능성의 표기
MFN 면제 조치	(i) MFN 면제 조치의 철폐 또는 상당한 감축 (ii) 적용범위와 존속기간 측면에서 잔존 MFN 면제 조치의 명확화
양허표 기재 방식	(i) 2001년 3월 21일 채택된 양허 기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양허의 기재 및 분류에 있어서 명확성, 확실성, 비교성, 일관성 등 보장 (ii) 양허 기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잔존 ENT 기재

자료: WTO(2005n), p. C-1, 제1항.

여기에서 복수적 요청(plurilateral requests)은 특정 분야(sector)와 공급 형태에 유사한 공격적(offensive) 이해가 있는 국가 그룹이 하고, 대상국('targeted' countries)들은 공동의(collective) 회의에서 이러한 양허 요청을 논의하도록 초청을 받았기에 그들의 개별 양허가 수정될 것이 기대되었다. 당초 이러한 복수국간 협상의 목적은 규제 담당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기술적 이슈의 이해를 더 명확히 하고 여러 회원국들의 협상 입장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었으나, 그 결과로 양허가 개선되지는 않았다.¹²⁾

12) Gari(2016), p. 583 참고.

홍콩 각료선언문에서는 복수적 양허 요청의 시한을 2006년 2월 28일, 제2차 수정양허안의 제출 시한은 2006년 7월 31일, 최종 양허표의 제출 시한은 2006년 10월 31일로 설정하였다.¹³⁾

이후 DDA 서비스협상은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분야에서 진전되지 않아 답보 상태에 머무르다가, 2008년 7월 26일 소규모 각료회의를 계기로 열린 소위 ‘신호 회의(signaling conference)’에서 주요국들이 신규 양허와 양허 개선 계획(indication)을 서로 교환하였다. 그러나 2008년 7월에 미국과 인도가 농산물 관련 특별세이프가드 메커니즘(special safeguard mechanism)에 합의하지 못하자, 전체 DDA 협상이 중단되었고, 그 결과 회원국들의 양허 개선 신호들도 구체적으로 개선된 양허안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그 후 2011년에 제네바에서 열린 제8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DDA 협상이 교착 상태(impasse)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교착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투명성 및 포용성(inclusiveness)을 존중하면서 상이한 협상 접근방법을 탐색’하는 데에 합의하였다.¹⁴⁾ 그 결과 2012년 내내 서비스에 관한 복수국간 협상(plurilateral negotiations)을 시작할 가능성을 논의하였고,¹⁵⁾ 2013년 초부터는 그러한 논의가 ‘서비스교역협정(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을 위한 협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¹⁶⁾

한편 2013년에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 협정을 채택하자, 회원국 간에 DDA 협상에 대해 어느 정도 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다.¹⁷⁾ 이에 따라 2014년 초에 회원국들은 소위 ‘포스트-발리 정신(post-Bali spirit)’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원칙에 합의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원칙은 ① 현실

13) WTO(2005n), p. C-4, 제11항 참고.

14) WTO(2011b), p. 3 참고.

15) Joint press release by Australia *et al.*(2012. 7. 5), “Advancing Negotiations on Trade in Services”(검색일: 2022. 2. 11) 참고.

16) TiSA 논의에 관한 분석 및 평가는 후속 연구로 추진하고자 한다.

17) WTO(2013), p. 2, 제1.8항 참고.

(realism)과 야망(ambition) 간에 균형을 맞추고 ② 할 수 있는(doable) 것에 초점을 두며 ③ 창의적이면서도 개방적(open-minded)이고 ④ 이슈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함께 다루어야 하며 ⑤ 포용적(inclusive)인 동시에 투명하고 ⑥ 긴박감(sense of urgency)이 있어야 하며 ⑦ 개발을 노력의 중심(hearts)에 계속 둘 것을 요구하였다.¹⁸⁾

이러한 원칙을 염두에 두고 2014년 말까지 DDA 협상을 타결하려는 계획을 마련할 목적으로 각 관련 협상 기구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식량안보용 공공비축보조를 합의하지 못한 결과, 그러한 논의는 순탄하게 출발하지 못하였다.¹⁹⁾ 특히 서비스교역 이사회의 논의는 핵심(core) 요구('demandeur') 회원국²⁰⁾과 핵심 대상('targeted') 회원국²¹⁾ 간에 현황 진단과 그것을 다루기 위한 적절한 전략 마련에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 후 2015년 12월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10차 각료회의 선언문에서는 DDA 협상과 관련하여 농업, 면화, 최빈개도국(LDC: Least Developed Countries) 이슈들만 언급하였을 뿐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²²⁾

이에 지난 20여 년간의 협상 이후 무역 외교(trade diplomacy)는 점진적으로 자유화 수준을 더 높이려는 GATS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²³⁾

18) WTO(2014a), p. 2, 제1.5항 참고.

19) WTO(2014b) 참고. 동 결정문은 발리 각료선언문의 작업계획(work program)에 대한 합의 시한을 2015년 7월로 연장하였다.

20) 공개된 문건 정보를 기초로 핵심 규모(critical mass) 측면에서 WTO 회원국들을 요구('demandeur') 회원국과 대상('targeted') 회원국 그룹으로 양분할 수 있다. 요구국 그룹에는 선진국(호주, 캐나다, EU, 일본, 미국 등)과 소위 '서비스 핵심 프렌즈국(RGFS: really good friends of services)'에 속하거나 TiSA의 회원국인 중소득국(예: 칠레, 대만, 홍콩, 멕시코, 한국, 터키 등)이 포함된다. RGFS에는 우리나라와 함께 미국, EU, 일본, 캐나다,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 등이 속해 있다. Gari(2016), p. 585, 각주 28 참고.

21) 이들 그룹에는 다수의 복수적 양허요청(plurilateral requests)을 받은 회원국들이 포함되며,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콜롬비아, 페루, 파키스탄 등이 속해 있다. Gari(2016), p. 585, 각주 29 참고.

22) WTO(2015) 참고.

23) Gari(2016), p. 585 참고.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와 유사한 선행 연구로 우선 김준동 외(2002)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DDA 서비스협상에서 민감한 분야인 법무, 시청각, 교육서비스 분야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정책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 정책 대응방향과 관련해 우선 법무서비스 분야에서 외국법자문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미국의 유한책임조합과 같은 형태의 도입이 필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률책임보험에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시청각서비스 분야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독립제작사에 대한 지원과 공동제작 활성화 등의 방안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내외 대학의 질 보증 및 인증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낙균 외(2002)에서는 서비스협상의 각 분야별로 2002년 6월 30일에 우리나라가 주요 교역상대국에 제출한 1차 양허요청서와 2002년 11월 25일 현재 25개 WTO 회원국들이 우리나라에 접수한 1차 양허요청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서비스산업의 개방, 특히 Mode 3 형태의 서비스교역은 기술이전 및 경쟁제고 등 외국인투자가 일으키는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감안하여, DDA 서비스협상을 한국 경제가 도약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준동 외(2003)에서는 보건의료 서비스협상에 대비하여 의료인력의 자격 인정 및 면허관리 관련 제도의 선진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외국 의료기관의 진출 형태인 영리법인의 허용 문제는 외국처럼 다양한 형태 중에서 소비자나 지역사회 공동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민간 의료보험과 관련하여 이제는 이를 도입할 것인가를 논의하기보다는 어떤 형태가 적절한가를 논의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서진교 외(2007)에서는 우리나라가 중점을 두는 5대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를 포함하여 총 15개 분야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으나, 주요국의 DDA 양허안을 기초로 한 분석만 하였고 복수적 양허 요청서에 기초한 분석은 하지 못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브라질 등 개도국들이 서비스분야의 양허 개선의 정도를 농업협상의 진전과 연계함으로써 실제 양허 개선으로 연결되지는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김준동 외(2008)에서는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분야인 Mode 4 중 특히 독립전문가(IP: Independent Professionals)와 관련한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독립전문가의 양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기술지도(E-4) 비자 체류인력의 활용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해당 기업의 인사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응답이 가능한 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수행하였으며, IP 양허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문직들을 양허대상 분야로 선정하여 302개 업체에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건축설계서비스, 도시계획, 조경 분야 등에서는 외국 전문인력이 내국민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엔지니어링서비스와 컴퓨터관련서비스의 경우에도 IP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일정 부분 존재하므로, IP 양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경영컨설턴트 분야도 IP 양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만 통번역사의 경우 제한적 양허를 주장하는 의견이 과반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 연구에서는 도급계약이 고용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IP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반면 쿼터와 같은 엄격한 수량제한은 적절하지 않고, 경제적 수요심사(ENT: Economic Needs Test)의 경우 ENT의 적용에 사용되는 정의, 기준, 조건을 명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준동 외(2012)에서도 주요국의 서비스 분야별로 양허 현황과 DDA 협상

에서의 개선내용을 중심으로 주요국별 입장을 분석하였으나, 서진교 외(2007)에서와 마찬가지로 복수적 양허 요청서에 기초한 분석은 하지 못하였다. 다만 DDA 서비스협상의 지연요인으로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접근(MA: Market Access), 내국민대우(NT: National Treatment), 추가적 약속(AC: Additional Commitment) 간에 중요성의 차이를 부여하지 않아 이들 간에 주고받기 협상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욱이 각각의 하위분야를 관할하는 관련 부처가 이해단체 및 시민단체의 압력을 받아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어렵고,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로 다자간 서비스협상에 관심을 갖지 못하며,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을 서비스협상의 부진요인으로 지적하였다.

가장 최근의 연구라고 할 수 있는 Gari(2016)에서는 다자간 서비스협상의 부진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방법을 모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공개된 문헌 정보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서비스교역 장벽은 상품교역 장벽과 같은 방법으로 협상할 수 없고, 브라질,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협상력 신장과 회원국수의 증가, 복잡한 의제의 등장 등이 일괄 타결 및 합의의 관행을 어렵게 하며, 그 해결 방안으로서 복수국간 협상, R/O 협상 방법에 대한 대안 마련, 투명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와 비교하며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인터넷에 유출된 복수적 양허 요청서를 입수하여 분석하고, 저자가 DDA 서비스협상 수석대표의 자문역을 수행하면서 그리고 직접 수석대표직을 수행하면서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분석하여 주요 쟁점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 향후 DDA 서비스협상 재개 시 또는 다른 형태로²⁴⁾ 협상이 전환되어 시작할 때를 대비하여 우리 측의 입장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그동안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다자협상을 위한 특별 세션(Special Session)의 주요 의제인 서비스교역 평가(Assessment

24) 다른 형태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복수국간 협정이고, TiSA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of Trade in Services), 협상 진전 검토(Review of Progress),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방식(LDC Modalities)에 대해서도 분석을 시도하고, 규범작업반, 양허위원회, 금융서비스위원회, 국내규제작업반 등 산하기구 회의의 논의 사항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또한 저자가 수석대표의 자문역 및 실제 수석대표로 활동하면서 각종 회의에서 작성·발언한 발언문도 기록에 남김으로써 협상사 측면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4.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서비스교역 평가, 협상 진전 검토,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방식(LDC Modalities: Least Developed Countries Modalities) 등 특별 세션에서 이루어지는 다자협상 회의의 주요 의제들을 분석·평가한다. 제3장에서는 복수적 양허 요청서를 기초로 5대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를 포함한 19개 분야별 복수국간 협상(plurilateral negotiations)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을 평가한다. 제4장에서는 긴급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 등 서비스 관련 규범 제정을 논의하는 규범작업반, 양허위원회, 금융서비스위원회, 국내규제작업반의 주요 쟁점들을 평가하고, 제5장에서는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 및 기타 회원국과의 양자 협상을 평가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에서 평가한 바를 기초로 향후 협상이 재개되면 우리 측 제2차 수정양허안 작성 시 참고할 만한 사항과 기타 협상 관련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저자가 각종 회의를 위해 작성·발언한 발언문들은 부록으로 기록에 남기고자 한다.

제2장 다자협상 회의

다자협상 회의는 CTS의 특별 세션(Special Session)에서 진행되며, 논의되는 주제는 크게 서비스교역 평가(Assessment of Trade in Services), 협상 진전 검토(Review of Progress),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방식(LDC Modalities)의 채택 및 이행 등 세 가지이다.

1. 서비스교역 평가

서비스교역 평가는 GATS 제19조(구체적 양허협상: Negotiation of Specific Commitments)²⁵⁾와 협상 가이드라인 및 절차의 제14항²⁶⁾에 따라 이루어졌다. 주로 주요 개도국을 중심으로 서비스교역 자유화의 경험과 그 효과에 관한 제안서가 제출되어 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개도국들은 GATS 제4조(개도국의 참여 증대)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교역 평가에서 의미 있는 결론을 낸 이후에야 본격적인 양허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 결론을 조속히 도출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한편으로는 개도국들이 점진적으로 자유화를 시도하려는 뜻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도국들이 이를 개도국들의 수출 이해가 큰 분야인 Mode 4에 대해 선진국들의 양허 확대를 촉구하는 데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다.

우선 2002년 3월 14~15일에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각 회원국의 전문가와

25) GATS 제19조 제3항은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목적을 포함한 동 협정의 목적을 참고하여 CTS에서 서비스교역 평가를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6) WTO(2001b), p. 2, 제14항 참고.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각 국가, 지역, 그리고 분야별 차원에서 서비스교역 자유화의 성장과 개발 관련 효과에 초점을 두고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²⁷⁾ 한편 심포지엄 직후 개최된 특별회의에서 각 회원국은 심포지엄의 결과를 평가하였는데, 특히 리투아니아는 신규 가입국이 기존 회원국에 비해 Mode 3의 경우는 2배, Mode 1의 경우는 거의 75% 이상 완전 양허를 했다는 심포지엄의 결과를 두고 신규 가입국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양허를 하였음을 지적하였다.²⁸⁾

그 후에는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쿠바 등 주요 개도국을 중심으로 서비스교역 자유화의 경험과 그 효과에 대한 제안서가 제출되었고 그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태국의 경우 유통서비스의 Mode 3와 금융서비스의 국경 간 교역(cross-border trade)의 사례에 기초하여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는 점진적으로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하며, 적절한 규제 조치의 이행을 통해 경쟁적 환경 조성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²⁹⁾

중국의 경우 자국의 제안서에 법률, 광고, 유통, 보험, 은행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기회와 도전의 사례를 설명하였다. 특히 은행서비스 분야에서는 국영은행의 개혁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점진적인 자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³⁰⁾

말레이시아도 금융서비스 분야의 자유화 경험을 소개하면서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신용 위험 관리 분야의 기술격차로 더 자유화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하는 능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의 효과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소비자 보호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27) 관련 발표와 토론 자료는 WTO(2002), "Programme and Background Materials"(검색일: 2022.

2. 16) 참고.

28) WTO(2002b), p. 6, 제25항 참고.

29) WTO(2002e) 참고.

30) WTO(2002i) 참고.

를 구축하기 위한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³¹⁾

대만의 제안서는 통신서비스 분야의 자유화 사례연구를 토대로 적절한 규제 체계(regulatory framework) 아래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경쟁을 시장에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규제 기구는 어떤 통신사업자와도 분리되어야 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²⁾

쿠바는 서비스교역의 자유화가 질서 있게 해당 국가의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조건에서 추진될 때 이득이 될 수 있고 분야별로 그 영향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저개발국의 경우 국내 산업을 대체하지 못하는 정도의 경쟁만 일어나는 환경에서 정책 목표를 보장하는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³³⁾

한편 우리나라는 2000년 10월에 서비스교역 평가 관련 비공식 문서를 회람하여 우리나라 서비스교역 자유화의 결과 특히 운송서비스, 통신서비스, 유통서비스 분야에서 생산성이 증대하였던 반면, 자유화가 부진하였던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총 요소 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이 감소하였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³⁴⁾ 아울러 유통서비스를 개방한 결과 대규모 할인점의 수가 증가하였고, 이들 업체의 증가된 구매력이 가격 결정권을 제조업체에서 유통업체로 이전시켜 유통업체가 가격 경쟁을 이끌어 왔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해외 유통기업이 판매시점정보관리(POS: Point of Sales) 시스템과 같은 신기술을 도입하고 상품과 재고 관리에서 선진적인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욱이 통신서비스의 자유화 사례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자금제 공뿐만 아니라 이사회 기능 강화를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도 기여하였다는 점을 소개하였다. 2004년도에는 유통서비스의 개방 경험을 구두로 다시 설명하였는데,³⁵⁾ 여기에서는 개방의 결과 국내 업체들이 해외 업체들과 성공

31) WTO(2003d), p. 2, 제9-10항 참고.

32) WTO(2004b) 참고.

33) WTO(2005h) 참고.

34) Kim and Kim(2000); 부록 [발언문 1] 참고.

35) 부록 [발언문 3]; WTO(2005a), p. 12, 제35항 참고.

적으로 경쟁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자체 소매점과 프랜차이즈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대구시 소재 소매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일부 소규모 소매업체가 폐점을 하게 된 것은 시장 개방 자체가 원인이라기보다는 업체들이 시장변화에 늦게 적응한 탓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³⁶⁾ 우리나라는 또한 2005년 2월 21일에 개최된 특별 세션에서 구두 발언을 통해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제약하는 요인 중 하나로 불공정 무역 관행(unfair trade practices)을 들었고 이러한 불공정 관행이 시장 자체의 기능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화를 저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³⁷⁾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이 유일하게 서비스교역 평가 관련 공식 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제안서에서 미국은 서비스 산업의 생산 증가율뿐만 아니라 국경 간 교역과 계열사를 통한 수출 증가율에서 중저소득국 및 개도국보다 낮다고 1995~2001년의 통계치를 근거로 설명하였다.³⁸⁾

한편 국제기구들도 서비스교역 평가와 관련하여 발표를 하였는데,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개도국에 의한 서비스 수출의 구체적 사례와 서비스 자유화로 의 이득을 정량화하는 연구를 소개하였다. 성공적인 분야의 사례로 항만서비스, 건설서비스, 의료서비스, 시청각서비스, 관광 등을 들었다. 또한 결합된(bundled) 분야에서 발전이 있었는데, 컴퓨터관련서비스, 아웃소싱, 후방사무(back-office) 서비스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정량적인 효과 추정과 관련하여서는 연산가능일반균형분석(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analysis)을 사용하였는데, 시나리오 가정에 따라 후생효과가 1,330억 달러에

36) 참고로 대구시 소재 371개의 소매업체에 대해 2002년 7~8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35%가 시장 수요에 맞추어 경영전략을 변경하고 노후 매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투자했다고 답하였고, 그중 25%가 그러한 변화 이후 10% 이상의 매출 증가를 경험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김준동, 김종일, 강준구(2003), pp. 112~143 참고.

37) 부록 [발언문 4]; WTO(2005f), p. 6, 제18항 참고.

38) WTO(2003b) 참고.

서 4,140억 달러 정도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단기 및 중기 이득은 적응비용(adjustment costs)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대다수 개도국들에 적절한 규제 체계의 확립과 능력 배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³⁹⁾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의 경우 개도국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제공한다고 하며, 크게 ① 개별국의 서비스교역 평가 ② 현지의 성공사례 발굴 ③ 각 회원국을 연결하는 웹 포털 창설 ④ 정부, 무역지원기관(예: 상공회의소 및 분야별 협회), 기업들에 연수 제공 ⑤ 협회들을 위한 지역 네트워킹 회의 조직 ⑥ 국가적인 수출전략에 서비스 수출을 포함하는 실행계획(action plan)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 등 여섯 가지의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⁴⁰⁾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는 서비스의 특정성(specificity), 서비스교역의 자유화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민감성에 대한 도전을 지적하였다. 또한 서비스 자유화와 개발 이득 간의 평가 관련 기준(criteria)을 마련하였고, 개도국들의 서비스 자유화와 개혁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⁴¹⁾

개도국들은 GATS 제4조(개도국의 참여 증대)⁴²⁾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교역 평가에서 의미 있는 결론을 낸 이후에야 본격적인 양허협상에 임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결론을 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⁴³⁾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한편으로는 개도국들의 경우 적절한 규제체계의 확립과 맞물려서 점진적으로 자

39) Nielson and Taglioni(2004); WTO(2004a), pp. 1-4, 제6-9항 참고.

40) WTO(2004a), pp. 10-11, 제29항 참고.

41) UNCTAD(2006); WTO(2006d), pp. 12-14, 제66-77항 참고.

42) 구체적으로 GATS 제4조의 제1(c)항은 개도국들의 수출이해가 있는 분야와 공급 모드에서 시장접근의 자유화와 관련한 양허 확대를 촉구한다.

43) WTO(2002d), p. 2, 제7항(쿠바), 제9항(짐바브웨), p. 3, 제16항(말레이시아); WTO(2002f), p. 5, 제21항(베네수엘라), 제22항(인도); WTO(2003c), p. 1-2, 제5항(파키스탄) 참고.

유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도국들이 수출 이해가 있는 분야인 Mode 4에 대해 선진국들의 양허 확대를 촉구하는 데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⁴⁴⁾

2. 협상 진전 검토

협상 진전 검토와 관련해서는 주요 회원국들이 협상의 전반적인 진전과 함께 주요 관심 분야의 진전을 논의하였는데, 분야별 제안서의 발표 및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주로 개도국들이 Mode 4의 협상에서의 진전이 부진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왔다. 아울러 2005년에는 기존의 양자협상에 의존하던 협상 방식을 보완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다수의 개도국들은 동일한 의제하에 농업 분야와 NAMA에서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 서비스협상 분야에서만 야심적인 양허 계획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주로 양허안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협상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에 대한 회원국들의 평가, 협상 방식, ENT, 중소기업(SM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등 수평적 이슈(horizontal issue)를 논하고자 한다.⁴⁵⁾ 논의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분야별 이슈(sectoral issue)에 대해서는 다음 장의 분야별 복수국간 협상의 논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우선 ENT는 GATS 제16조에 따라 MA상의 제한사항 중 하나로서 양허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 적용기준이 없거나 모호하다는 문

44) 예를 들어 개도국들의 경우 자국의 서비스 수출에 심각한 장벽이 많다고 주장하면서, 국적, 거주, 비자 요건과 비자 수수료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 WTO(2002c), p. 2, 제4항 참고. 또한 직접적으로 Mode 4의 양허 확대를 거론한 회원국들도 있다. WTO(2003d), p. 5, 제13항(태국), p. 6, 제15항(모로코). 특히 LDC의 경우 Mode 4가 대단히 중요하므로 이에 더 많은 시간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WTO(2005f), p. 7, 제20항(세네갈) 참고.

45) 협상 진전 검토에서 국내규제작업반 및 규범작업반 등과 관련된 논의가 진전되었는지도 검토했는데, 이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제5장의 산하기구 논의에서 다루고자 한다.

제점이 계속 있었다. 특히 개도국들은 일부 선진국들의 양허표에서 자국의 수출 이해가 큰 Mode 4에 ENT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주목하며 이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일례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소수 선진국의 양허표에서 ENT가 기재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⁴⁶⁾ 개도국들의 수출 이해가 있는 분야들과 공급 형태들에서 이를 철폐할 것을 촉구하였다.⁴⁷⁾ 이에 대해 멕시코, 칠레, 케냐 등도 동조하며, ENT가 차별적이고 자의적으로 집행된다면 양허가 예측 불가능해지고 무효화되면서 결국에는 양허를 하지 않은 수준(non-binding)에 이를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ENT의 정당한(legitimate) 사용과 MA를 침해할(undermine) 가능성 간에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⁸⁾ 일본도 ENT가 GATS 제6조(국내규제)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⁴⁹⁾

한편 각종 규제 장벽이 특히 SME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이들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데 논의가 집중되었다. 우선 모리셔스는 동 이슈가 자국과 같은 소규모 경제에 직접적인 이해가 걸린 일이라고 언급하며, ‘중소규모 서비스 공급업체’라는 용어가 실제 이 용어에 해당하는 업체에 효과적으로 이득을 줄 수 있는 방법이란 의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⁰⁾ 헝가리도 이에 동의하면서 규모가 다른 기업 간에 차별을 두어 SME를 위한 특별한 규범을 제정할 필요는 없고, 불투명한 규제제도, 관료주의적인 자격 및 면허 절차 등 특히 소규모 공급업체들의 서비스교역 관련 장벽을 파악하여 이를 제거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⁵¹⁾

인도는 GATS 제4조가 개도국의 이익을 위해 핵심적인(central) 조항이라

46) 즉 선진국의 양허표상 Mode 3에 28개, Mode 4에 25개 등 총 53개가 기재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경우 ENT의 적용기준이 없거나 모호하다고 지적하였다. WTO(2002a), p. 2, 제4항 참고.

47) *Ibid.*, p. 2, 제7항 참고.

48) WTO(2002b), p. 42, 제237-239항 참고.

49) *Ibid.*, pp. 43-44, 제246항 참고.

50) *Ibid.*, p. 45, 제254항 참고.

51) *Ibid.*, p. 45, 제256항 참고.

고 하며, 이것의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best endeavours)’을 기울이는 것을 넘어서 개도국들의 수출 이해가 있는 분야와 공급 형태에서 양허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⁵²⁾

미국은 자국 제안서에서 SME 수출업체가 직면하는 다섯 가지의 장벽을 지적하였는데, △ 차별적이고 불투명한 국내규제 △ 거주요건 및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요건 등 상업적 주재 관련 요건 △ 비자 처리의 지연 △ 전자상거래 관련 부담스러운(burdensome) 면허 요건 △ 금융, 통신, 유통, 특급배달, 컴퓨터, 광고, 교육 및 연수, 법률, 회계서비스와 같은 SME의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관련 서비스의 장벽 등이다.⁵³⁾

캐나다도 2005년 2월에 제출한 제안서에서 회원국들이 GATS를 통해 SMEs에 이득이 될 분야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파악하였다. △ 서비스 SMEs가 가장 큰 수출 잠재력이 있는 컴퓨터관련서비스, R&D 서비스, 마케팅 및 기타 사업서비스 등 △ SME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핵심 분야인 운송, 금융, 통신서비스 등 △ SMEs를 위해 비용 효과가 가장 높은 공급 형태인 Modes 1, 4 △ 상업적 주재 요건, 현지 파트너십 요건, 외국 공급자에 특정한 조세, 거주 및 국적 요건 등 SMEs의 해외 진출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 조치 △ SMEs는 복잡한 규제 환경을 헤쳐 나가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 많지 않으므로, GATS가 단순하고 투명하며 안정적인 규제 환경을 육성하는 역할을 하도록 각 회원국이 노력하는 것 등이다.⁵⁴⁾

한편 협상 진전 검토와 관련하여서는 GATS 제4조에서 규정하는 개도국의 참여 확대를 위해 주요 개도국들은 특히 개도국의 수출 이해가 있는 Mode 4 관련 협상이 부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2005년 후반기에는 기존의 양자협상이 부진하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접근방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또한 동 의제하에서 브라질 등 농업 강국들은 서비스협상에서의 진전을 농업협상에

52) WTO(2002b), p. 46, 제258항 참고.

53) WTO(2002g), pp. 2-4, 제7-18항 참고.

54) WTO(2005e), pp. 2-3, 제8항 참고.

서의 진전과 연계해서 농업협상에서 특기할 만한 진전이 없을 경우 서비스협상에서도 더는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우선 콜롬비아 등 중미 8개국은 2002년 10월 28일에 제출한 공동제안서에서 특별 세션이 GATS 제4조의 목적이 구체적 양허에서 어느 정도 이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협상의 진전 정도를 검토해야 하고, 또한 특별 세션은 협상 타결 이전에 제4조에 포함된 목적과 관련하여 파악한 결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⁵⁾ 이와 관련하여 온두라스는 GATS 제19조 2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개도국들이 분야를 더 적게 개방해야 하고, 거래(transactions)를 더 적게 자유화해야 하며, 그들의 개발 상황과 보조를 맞추어 점진적으로 시장접근을 확대하는 등 유연성(flexibility)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⁵⁶⁾

한편 우루과이는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협상 분야에서 야심(ambition)의 정도가 일관성이 있어야 함을 지적하며, 일부 회원국은 자신들이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에서는 야심적인 양허안을 제출하는 반면, 농업 분야와 같이 보호수준이 높은 분야에서는 보통(modest) 수준의 제안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⁵⁷⁾ 이와 관련하여 파라과이도 협상의 초석(cornerstone)이 되는 농업 분야의 자유화 정도와 연계를 강조하며, 협상의 모든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⁸⁾

중국은 선진국을 상대로 개도국들이 경쟁력이 있는 분야, 특히 Mode 4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양허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⁹⁾ 인도도 금번 라운드에서 Mode 4의 균형 있는 결과와 의미 있는 자유화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도하라운드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회원국들이 Mode 4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⁶⁰⁾

55) WTO(2002h), p. 1, 제6항 참고.

56) WTO(2003a), p. 27, 제126항 참고.

57) WTO(2003c), pp. 30-31, 제146항 참고.

58) *Ibid.*, p. 35, 제157항 참고.

59) *Ibid.*, p. 34, 제154항 참고.

60) *Ibid.*, p. 38, 제163항 참고.

홍콩의 경우는 어떤 분야나 공급 형태도 사전에(a priori) 협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청각서비스에 관해 특정 회원국들이 왜 자유화를 논의하기를 주저하는지에 대해 전혀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반응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⁶¹⁾ 이와 관련하여 미국도 시청각서비스에 양허 요청서를 제출한 일부 개도국들과 양자간 접촉에서 그들의 교역상대국들이 이 분야의 자유화 이슈를 논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소개하며, 특정 서비스 분야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그 분야를 사전에 제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⁶²⁾

한편 필리핀과 태국은 긴급세이프가드조치(ESM: Emergency Safeguard Measures)에서 진전이 미진한 점에 주목하면서, 적절한 ESM 관련 규범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고 ESM의 바람직함(desirability)을 왜 의심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였다.⁶³⁾

2003년 7월과 9월에 열린 특별 세션에서는 9월 3일 현재 제출된 30여 개의 1차 양허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우선 MERCOSUR을 대표하여 우루과이는 DDA 협상에서 전반적인 균형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하여 개도국의 관점에서 볼 때 MERCOSUR는 농업을 포함한 다른 분야에서 진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⁶⁴⁾

주요 개도국들은 다른 공급 형태에 비해 Mode 4가 거의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도국에게 수출 이해가 있는 분야와 공급 형태(특히 Mode 4)에 대한 양허와 선진국에게 수출 이해가 있는 분야와 공급 형태에 대한 양허 간에 비대칭성(asymmetry)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금번 협상 라운드에서 이러한 비대칭성이 적절히 해소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⁶⁵⁾

61) WTO(2003c), p. 35, 제156항 참고.

62) *Ibid.*, p. 39, 제168항 참고.

63) *Ibid.*, p. 36, 제159항 및 160항 참고.

64) WTO(2003g), p. 38, 제159항 참고.

65) *Ibid.*, p. 38, 제160항(멕시코), p. 41, 제166항(인도), p. 44, 제169항(필리핀), pp. 44-45, 제170항(인도네시아), p. 53, 제187항(태국), pp. 53-54, 제189항(파키스탄) 참고.

한편 페루, 중국, 콜롬비아, 태국 등은 규범 협상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는데, ESM, 보조금 및 국내규제 등의 규범 제정 관련 협상의 부진함을 지적하였다.⁶⁶⁾

홍콩은 MFN 면제 조치도 협상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양자간 R/O 협상에서 MFN 면제 조치들의 철폐와 관련하여 진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⁶⁷⁾

중국의 경우는 1차 양허안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들의 양허안에 아직 많은 ENT와 특히 상호주의에 기반한 MFN 면제 조치가 남아 있음을 지적하고, Mode 4에 관해서도 실질적인 개선이 없다고 지적하였다.⁶⁸⁾

미국은 성장과 개발의 핵심인 서비스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이와 관련하여 협상의 범위에서 어떤 분야도 사전에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⁶⁹⁾ 또한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의 성장과 개발에 핵심이 되는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그러한 분야의 예로 통신, 유통,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에너지서비스, 환경, 관광, 시청각, 금융서비스 등을 제시하였다.⁷⁰⁾

2004년 3월에는 콜롬비아를 포함한 18개 개도국들이 GATS 제4조의 이행과 관련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Mode 4의 자유화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진단하였다. 동 제안서는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MA 및 NT 양허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⁷¹⁾ △ Mode 3과 분리된 분야의 양허 확대 △ 양허에 부수된 제한 조치 △ 취업 허가과 비자 절차 △ 양허의 예측 가능성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자국의 1차 양허안에 Mode 3과 분리된 독립전문가를 포함했다는 점을 들면서, 단순히 종이에 나타난 내용으로 1차 양허안을 평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⁷²⁾

66) WTO(2003g), p. 45, 제172항, p. 48, 제178항, p. 50, 제182항, p. 53, 제187항 참고.

67) *Ibid.*, pp. 47-48, 제177항 참고.

68) *Ibid.*, pp. 49-50, 제181항 참고.

69) 이는 EU와 캐나다 등이 시청각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70) WTO(2003g), pp. 56-57, 제193항 참고.

71) WTO(2004c), pp. 2-3, 제6항 참고.

한편 2005년 5월 말의 수정양허안 제출 시한에 앞서 2004년 8월 말에 스위스는 양허표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과 관련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법적 명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였다. 스위스는 동 제안서에서 양허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구체적인 방안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W/120 분류체계를 따르고 △ 이와 관련하여 산출물분류(CPC: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를 체계적으로 참고하며 △ 금융서비스의 양허는 금융서비스 부속서의 분류에 따라야 하고 △ ENT와 노동시장테스트(LMTs: Labor Market Tests)는 그 기준이 투명하며, 예측 가능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 Mode 1 및 Mode 2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분야에서 모호성을 극복하려면 그 두 가지 Mode에 대해 동일한 양허를 해야 한다.⁷³⁾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현재 기재된 대부분의 MFN 면제 조치들이 명확성, 확실성,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스위스의 제안이 MFN 면제 조치들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⁷⁴⁾ 중국도 분류 문제를 강조하면서 회원국의 상당수가 기술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새로운 분류를 적용하여 양허안에 기재하는데, 이런 행위가 그 양허안의 명확성, 비교가능성, 법적 확실성(legal certainty)을 저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⁷⁵⁾

반면 미국은 CPC 분류가 원래 양허표 작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통계 목적을 위해 개발된 것이므로 양허안 작성에 사용하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컴퓨터관련서비스, 에너지서비스, 특급배달서비스 및 물류서비스, 시청각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CPC 분류가 현재의 시장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⁷⁶⁾

2005년 5월 말의 수정양허안 제출 시한을 지나서 6월 27일, 6월 30일, 그리고 7월 1일에 개최된 특별 세션에서 의장은 당시까지 68건의 1차 양허안과

72) WTO(2004e), p. 31, 제105항 참고.

73) WTO(2004g), p. 3, 제8-A 및 8-B항 참고.

74) WTO(2004h), pp. 25-26, 제65항 참고.

75) *Ibid.*, p. 26, 제66항 참고.

76) *Ibid.*, p. 30, 제80항 참고.

21건의 수정양허안이 제출되었고, LDC를 제외하면 24건의 양허안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대다수의 양허안이 개선 사항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⁷⁷⁾ 또한 400여 개의 MFN 면제 조치가 잔존하고 10% 이하만이 감축될 예정이라고 하였다.⁷⁸⁾ 아울러 명확한 기준이 없는 ENT도 다수 있어 회원국들이 양허표 기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실망이라고 언급하였다.⁷⁹⁾ 그러면서 의장은 몇몇 회원국이 양자간 R/O 방식 외에 협상 가이드라인 아래에서 이용 가능한 다른 협상 방식을 모색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점을 밝혔다.⁸⁰⁾

이와 같은 일부 회원국과 의장의 요청에 대해 우리나라는 2005년 9월 29일에 보완적 접근방법(complementary approach)과 관련하여 양허 범위의 확대(widening)와 시장진입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양허의 심화(deepening)를 동시에 달성하는 소위 '이차원적 접근방법(Bi-dimensional Approach)'을 주장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동 제안서에서 양허 범위의 확대는 다차 차원을 기초로 하여 미양허 분야 중 상업적으로 의미가 있는 분야에 'x' 퍼센트만큼 공급 형태별로 현재의 시장 개방 수준을 보장하는 양허를 하자는 제안이다. 여기에서 수량적 목표(quantitative target)인 'x'는 서비스협상에서 공동의 야심 수준(collective level of ambition)을 나타낸다. 한편 양허의 심화와 관련해 복수적 기초에서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를 중심으로 협상 과정 동안 자발적으로 형성된 비공식 프렌즈 그룹들이 현재의 자유화 수준을 넘어 최소한의 질적 벤치마크(qualitative benchmark)나 모델 스케줄을 개발하고 핵심적 다수(critical mass)가 이를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다.⁸¹⁾ 우리나라는 특히 다차적 차원의 수량적 목표 제안의 배경으로 시장접근 양허 수준이 어느 정도 중요한(critical) 지점에 이르면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강력한 보호주

77) WTO(2005i), p. 33, 제152항 및 제154항 참고.

78) *Ibid.*, p. 33, 제161항 참고.

79) *Ibid.*, p. 33, 제162항 참고.

80) *Ibid.*, p. 98, 제312항 참고.

81) 부록 [발언문 14]; WTO(2005j), pp. 2-3, 제8-13항 참고.

의적 이해 그룹이 반대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복수적 접근방법으로 이러한 정치적 저항을 극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⁸²⁾ 따라서 이러한 제안의 이면에는 EU 및 캐나다의 시청각서비스 분야와 미국의 해운서비스 분야를 겨냥한 측면이 있다.

EU도 2005년 10월 27일에 제출한 보완적 접근방법 요소에 관한 제안서에서 금융서비스 부속서와 W/120의 전체 163개 하위 분야 가운데 선진국은 85%에 해당하는 139개 하위 분야에서 신규 또는 개선된 양허를 포함할 것과 개도국은 선진국의 139개 중 2/3에 해당하는 93개의 하위 분야에서 신규 또는 개선된 양허를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차별화된 목표를 제시하였다.⁸³⁾

이러한 보완적 접근방법이 브라질, 필리핀, 태국, 케냐, 이집트, 쿠바,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루과이, 인도 등 다수의 개도국은 협상 가이드라인과 GATS 제19조 제2항에 명시된 유연성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또한 이 접근이 회원국들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수량적 또는 질적 변수(parameter)와 조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였다.⁸⁴⁾

반면에 노르웨이, EU, 캐나다, 홍콩, 미국, 칠레 등은 기존의 양자간 R/O 협상이 원하던 결과를 내지 못했고 제출된 양허안의 전반적인 수준도 낮으므로, 복수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한 보완적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지지하였다.⁸⁵⁾ 그러나 이들도 시청각서비스 및 해운 등 각자의 민감한 분야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안한 미양허 분야 중 일부를 일정 비율로 점진적 양허를 해 나가자는 다자적 차원의 수량적 목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다.

2005년 11월 3일에 열린 특별 세션에서 우리나라는 상업적 의미(commercial

82) WTO(2006a), p. 30, Annex I 제19항 참고.

83) WTO(2005k), pp. 1-2, 제5-A항 참고.

84) WTO(2005l), p. 39, 제151항(브라질), p. 42, 제159항(필리핀), p. 43, 제161항(태국), p. 48, 제170항(케냐), p. 48, 제171항(이집트), p. 49, 제173항(쿠바), p. 52, 제178항(필리핀), p. 54, 제184항(인도네시아), p. 62, 제200항(우루과이), p. 74, 제228항(인도) 참고.

85) *Ibid.*, p. 65, 제207항(노르웨이), p. 66, 제210항(EU), p. 68, 제213항(캐나다), pp. 69-70, 제217항(홍콩), pp. 72-73, 제223항(미국), pp. 73-74, 제226항(칠레) 참고.

meaningfulness)가 분야, 회원국, 시기를 걸쳐서 연속적이고(continuous)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앞서 9월 29일에 제출한 제안서에서 사용한 상업적 의미의 용어를 제3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허 요청을 받는 회원국의 시장 발전 정도에 대한 고려와 양허 요청을 하는 회원국의 상업적 이익 사이에서 조건을 맞추어 결정해야 함을 강조하였다.⁸⁶⁾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다수 회원국들의 반대로 다자적 차원에서 의무적인 수량적 목표는 채택되지 못하였고, 각료선언문의 부속서 C에서 복수적 과정(plurilateral process) 관련 지침이 채택되었다. 그 후 2006년 2월 16일에 개최된 특별 세션에서 우리나라는 복수적 협상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 간에 쌍방향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뿐만 아니라, 회원국들 간 공동의(collective) 노력 면에서도 장점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⁸⁷⁾ 즉 양허안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점차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관련된 분야를 접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이해관계는 회원국들의 단결된 지지 없이 개별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극복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이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는 국내 이해관계자들이 일방적 조치에 의존하려는 유혹이 있다는 점과 경제 활동에 있어서의 다양성에 관해 외국 공급자의 지배에 대한 우려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였다.⁸⁸⁾

한편 2006년 4월 7일에 개최된 특별 세션에서 의장은 2006년 3월 초까지 22개의 공동 양허 요청서(collective requests)가 제출되었고,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야심(ambition)이 반영되었다고 설명하였다.⁸⁹⁾ 우리나라는 동 세션에서 어느 특정 분야에 사전에 금지선(a priori red lines)을 설정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⁹⁰⁾

86) 부록 [발언문 15]; WTO(2006a), p. 5, 제23항 참고.

87) 부록 [발언문 18]; WTO(2006b), pp. 9-10, 제48항 참고.

88) 일방적 조치는 미국의 해운서비스를 암시적으로 가리키는 것이고, 다양성에 관한 외국의 지배에 대한 우려는 EU와 캐나다의 시청각서비스를 암시하는 것이다.

89) WTO(2006c), pp. 7-8, 제27항 참고.

90) *Ibid.*, p. 22, 제69항 참고.

2006년 7월 14일에 열린 특별 세션에서 브라질은 서비스협상이 부진하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며, 향후 양허안은 DDA 협상의 여타 분야의 진전에 달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였다.⁹¹⁾ 케냐도 2007년 4월 27일에 개최된 특별 세션에서 서비스협상에서 향후 진전은 농업과 NAMA에서 진전과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이러한 점에서 서비스협상에서 개선된 수정양허안의 제출은 농업과 NAMA에서의 모델리티(modalities)에 대한 합의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다.⁹²⁾

한편 2007년 3월 2일에 열린 특별 세션에서 주요 회원국은 자국의 관심 분야 및 공급 형태를 소개하였는데, 그 내용은 [표 2-1]과 같다.

표 2-1. WTO 주요 회원국의 DDA 서비스협상에서의 관심 분야 및 공급 형태

회원국명	관심 분야
미국	금융, 통신, 컴퓨터관련서비스, 에너지서비스, 특급배달서비스, 유통, 환경서비스, 시청각서비스
노르웨이	해운, 통신, 에너지서비스, 금융
EU	금융, 통신, 컴퓨터관련서비스, 해운, 유통, 우편/쿠리어, 건설, 환경서비스, 에너지서비스, 법률, Mode 3
칠레	사업서비스(특히 전문직서비스,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컴퓨터서비스), 건설, 물류, 운송
호주	금융, 통신, 전문직서비스, 교육, 광업관련서비스, 환경서비스
대한민국	인프라스트럭처서비스(해운, 건설, 통신, 유통, 금융), MFN 면제 조치 감축
대만	컴퓨터서비스, 해운, 물류, 통신, 환경서비스, MFN 면제 조치 감축
캐나다	금융, 통신, 컴퓨터관련서비스, 에너지서비스,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건설, Mode 4
우루과이	전문직서비스(특히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건설, R&D, 컴퓨터관련서비스, 유통, 관광
중국	Mode 4, 건설, 해운, 보건의료서비스
인도	Mode 4, Mode 1
홍콩	해운, 물류, 통신, 금융, 시청각서비스, MFN 면제조치 철폐
스위스	Mode 4(기업 내 전근자, 유지보수자), 금융, 물류
파키스탄	Mode 4, MFN 면제 조치 철폐

91) WTO(2006d), pp. 2-3, 제12항 참고.

92) WTO(2007c), p. 2, 제6항 참고.

표 2-1. 계속

회원국명	관심 분야
CARICOM*	Mode1, Mode 4
아프리카그룹	Mode 4
싱가포르	컴퓨터관련서비스, 건설, 통신, 국경 간 공급
콜롬비아	Mode 4

주: * 앤티가 바부다, 바베이도스, 도미니카, 그레나다, 자메이카,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이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트리니다드 토마고.

자료: WTO(2007b), pp. 2-15, 제10-63항 참고.

2007년 7월 13일에 개최된 특별 세션에서 다수 회원국이 농업과 NAMA에서 돌파구(breakthrough)가 마련될 시점에 서비스 분야에서도 협상의 진전이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미국, 노르웨이, 우리나라, EU,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각 회원국이 현재의 자유화 수준과 양허 수준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⁹³⁾

2008년 7월 소위 7월 패키지(July package) 합의가 실패한 후 2009년 4월 6일에 처음 열린 공식 특별 세션에서 서비스협상의 완결 요소를 정리한 2008년 7월의 보고서⁹⁴⁾를 기초로 협상을 지속하여야 한다는 선진국의 입장과 동문서는 합의된 것이 아니므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개도국의 입장으로 나뉘었고, 그 이후로 현저한 진전은 없었다.⁹⁵⁾

93) WTO(2007d), pp. 3-8, 제13항(미국), 제22항(노르웨이), 제23항(우리나라), 제24항(EU), 제31항(캐나다), 제36항(노르웨이) 참고.

94) 동 보고서에서는 제2차 수정양허안의 제출 시한이 2008년 10월 15일, 최종 양허표의 제출 시한이 2008년 12월 1일이라고 괄호로 처리되어 제시되었다. WTO(2008), p. 3, 제7항 참고.

95) WTO(2009), pp. 1-13, 제6-82항 참고.

3.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방식

GATS 제19조 제3항은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방식(LDC Modalities)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DC 모델리티는 협상 초기부터 전체 다자회의에서 논의되어 2003년 9월 3일에 열린 특별 세션에서 채택되었다.⁹⁶⁾ LDC 모델리티는 우선 회원국들이 LDC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이 양허를 추구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LDC는 분야를 더 적게 개방하고, 거래 형태를 더 적게 자유화해야 하며, 개발 상황에 맞추어 시장접근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유연성을 LDC에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LDC에 완전한 내국민대우 양허나 추가적 약속도 기재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LDC 모델리티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LDC에 수출 이해가 있는 분야와 공급 형태에서 유효한 시장접근을 제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특히 LDC에 Mode 4가 잠재적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회원국들은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LDC에 Mode 4의 접근을 보장하는 양허를 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LDC 모델리티에 LDC의 국내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LDC의 인적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과 역량 배양(capacity building)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필요시 LDC 모델리티의 이행을 서비스교역이사회 특별 세션에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후 특별 세션에서 LDC 모델리티의 이행을 검토한 결과 2011년 12월 17일에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LDC의 서비스와 서비스공급자에 대해 GATS 제16조(시장접근)에 기재된 조치의 적용과 관련하여 GATS 제2.1조의 최혜국 대우

96) WTO(2003e) 참고.

의무를 15년의 시한을 두고 면제하는 시한부 웨이버(waiver)를 채택하였다.⁹⁷⁾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동 사안에 대한 입장 개진에 일체 반응하지 않고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그러나 LDC 모델리티의 핵심 내용은 Mode 4의 양허 확대와 기술지원에 있으므로, 이제 선진국에 진입하였다고 대외적으로 선언한 우리나라는 Mode 4의 양허 확대 외에도 개도국을 대상으로 KOICA의 IT 인력 교육 및 파견 사례를 소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97) WTO(2011c) 참고.

제3장 분야별 복수국간 협상

분야별 복수국간 협상(plurilaterals)은 최혜국(MFN: Most Favored Nation) 대우 면제, Mode 1 및 Mode 2, Mode 3, Mode 4 등 수평적 이슈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 통신서비스, 컴퓨터관련서비스 등 총 22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분야별 협상은 뜻을 같이하는(like-minded) 회원국들끼리 모인 프렌즈 그룹(friends group)⁹⁸⁾을 중심으로 제안서(proposal)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협상 담당자와 규제 당국 간에 격의 없는 토론을 거쳐 양허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즉 서비스 분야별로 양허의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제 당국의 참여자들이 설명하고, 이에 대해 협상 담당자들이 이러한 규제의 애로 사항을 해소해 나가면서 양허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005년부터 프렌즈 그룹별로 제안서를 제출하여 논의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고, 2005년 12월에 개최되었던 홍콩 각료회의에서 기존의 양자간 협상(bilaterals)과 다자간 협상(multilateral negotiations)뿐만 아니라 복수국간 협상까지 하도록 지침(mandate)이 주어져서 복수로 양허 요청(collective request)을 하는 등 본격적으로 분야별 협상을 하게 되었다. 홍콩 각료선언문에 따라 복수적 양허 요청서(plurilateral or collective requests)⁹⁹⁾의 제출 시한은 2006년 2월 28일, 2차 수정양허안의 제출 시한은 농업과 NAMA

98) 프렌즈 그룹과 논의를 주도하는 조정국 리스트는 아래와 같다(Leal-Arcas 2006, p. 7 참고).

1. 시청각서비스(대만), 2. 항공운송(뉴질랜드), 3. 컴퓨터관련서비스(칠레), 4. 건설서비스(일본), 5. 에너지서비스(EU), 6. 환경서비스(EU), 7. 특급배달서비스(미국), 8. 금융서비스(캐나다), 9. 법률서비스(호주), 10. 물류서비스(스위스), 11. 해운서비스(일본), 12. Mode 3(스위스), 13. Mode 4(캐나다), 14. 통신서비스(미국).

99) 복수적 양허요청서는 관련국 간에만 공유되던 것이었으나, 이후 인터넷을 통해 유출되어 15개의 복수적 양허 요청서가 European Services Forum의 사이트에 공개되었다(ESF 2006 참고). 복수적 양허 요청서가 유출되어 공개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에 대한 접근도 제한되어 있으므로, 특별 세션에서 있었던 요청국들의 발언, 공동 제안서, 공동 성명서 등을 토대로 그 내용을 평가하고자 한다.

의 모델리티(modalities) 채택 시한의 3개월 후인 2006년 7월 31일, 최종 양허표의 제출 시한은 2006년 10월 31일로 설정되었다.¹⁰⁰⁾

이러한 복수국간 협상은 협상만 그룹별로 복수국간에 이루어지고, 이 협상 결과로 최종 양허표에 기재한 사항을 모든 회원국에 MFN 의무를 기초로 하여 적용한다는 점에서 정부조달협정과 같은 여타 복수국간 협정과는 차이가 있다.

2006년 2월에 주요 프렌즈 그룹을 중심으로 20여 개의 복수적 양허 요청서를 교환하며 복수적 R/O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후 복수적 협상에서 분야별로 요청국과 요청대상국 간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양허 요청 사항의 명료화, 양허 요청 내용과 관련된 규제방안 등을 주로 논의하였다.¹⁰¹⁾ 우리나라는 총 22개 분야 가운데 10개 분야에서 양허 요청국으로 참여하였고, 8개 분야에서는 요청대상국으로 협상에 참여하였다(표 3-1 참고).

표 3-1. 우리나라의 복수적 R/O 협상 참여 현황

양허 요청국으로 참여한 분야(10)	양허 요청을 받은 분야(8)	양허 요청을 하지도 받지도 않은 분야(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엔지니어링, - 컴퓨터관련서비스 - 통신 - 건설 - 환경 - 금융 - 해운 - 에너지 - MFN 면제 -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 우편/쿠리어 - 시청각 - 교육 - 항공운송 - 물류 - 국경 간 공급 (Mode 1 및 Mode 2) - 상업적 주재(Mode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인 이동(Mode 4) - 농업관련서비스 - 관광 - 회계

주: 단, 우리나라가 양허요청국으로 참여한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양허요청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자료: 외교통상부 온라인 보도자료(2006. 3. 27), 「WTO/DDA 서비스 복수적 협상 개최」(검색일: 2022. 2. 16), 서진교 외(2007), p. 69, [표 3-2]에서 재인용; WTO(2007c), p. 2, 제6항과 WTO(2010), pp. 2-12, 제15-82항 참고.

100) WTO(2005n), p. C-4, 제11항 참고.

101) 이 과정에서 브라질과 인도는 상대국으로 받은 양허요청에 대해 양허개선을 하면서 자국의 공격적 이해가 큰 서비스 분야(농업관련서비스, Mode 4) 및 농업협상과 같은 여타 협상의제에서의 협상 진전과 연계시키기도 하였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복수적 협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농업관련서비스, 관광서비스, 회계서비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19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주로 2008년 신호회의(Signaling Conference)와 2011년 4월 특별 세션의 의장이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s Committee)에 보고서를 제출한 시점까지의 상황을 중심으로 분야별 주요 쟁점을 평가하고자 한다.¹⁰²⁾ 즉 본 연구에서 총 22개 분야 중 복수적 양허 요청서가 인터넷에 유출된 15개 분야와 기타 제안서를 중심으로 그 주요 쟁점을 파악할 수 있는 4개 분야 등 총 19개 분야를 정리·분석하고자 한다.

1. MFN 면제

MFN 의무는 WTO 회원국 간에 차별을 두지 말라는 것이고 이는 WTO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 중의 하나이다. 또한 GATS에서 이 의무에 대한 면제 조치는 「MFN 면제 조치에 관한 부속서」 제6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10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¹⁰³⁾

우리나라는 2005년 2월 22일에 열린 서비스교역이사회 정규 세션(Regular Session)에 앞서 2004년 11월 30일에 개최된 MFN 면제 조치 검토회의에서 MFN 면제 조치의 철폐를 시장접근 양허의 진전과 연계하려는 일부 회원국의 태도를 비판하고, 규범에 기초한 협상(negotiations based on rules)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MFN 면제 조치의 철폐를 촉구한 바 있다.¹⁰⁴⁾ 이어서 우리나라는 2005년 6월 27일에 개최된 특별 세션에서 중국, 홍콩, 일본, 멕시코, 대만 등을 대표하여 MFN 면제 조치에 관한 공동 성명서를 소개하였는데, 동 성명서

102) 자연인 이동(Mode 4) 분야에서도 우리나라는 복수적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관련 제안서나 홍콩 각료선언문의 부속서상의 양허 목표 수준에 의거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103) MFN 면제 조치는 GATS 출범 당시 기존 양자간, 지역 협정과 상충 문제를 잠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타협책으로, 모든 조치가 일시에 철폐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104) 부록 [발언문 17] 참고.

에서 공동 서명국들은 더는 필요하지 않고 유지되지 않는 MFN 면제 조치들, GATS와 불일치하고 점진적 자유화 원칙에 맞지 않는 면제 조치들, GATS의 여타 조항에 이미 포함된 면제 조치의 철폐를 요구하였다. 또한 수량적 목표(numerical target)를 설정하여 상당히 많은 면제 조치를 철폐할 것을 촉구하였고,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MFN 면제 조치를 더욱 명확히 하고, 그 범위를 한정하거나 축소하며, 그 존속기간을 구체화할 것도 촉구하였다.¹⁰⁵⁾

복수적 협상의 양허 요청서는 38개 회원국을 상대로 총 165개의 특정 MFN 면제조치에 대해 철폐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2008년 신호회의(Signaling Conference)에서 단 6개 회원국만이 11개의 면제 조치에 대해 개선 의향을 나타내었을 뿐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¹⁰⁶⁾

MFN 면제 조치의 철폐는 중국 등 여타 회원국들이 미국 및 EU를 주요 타깃으로 해 일종의 협상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분야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미국이 자국을 상대로 취한 금융서비스 자유화 요구에 대응하여 미국 측 금융서비스 분야 MFN 면제 조치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여 왔다.¹⁰⁷⁾

스위스도 미국과 FTA 추진이 결렬된 이후에는 금융서비스 분야의 차별적 대우를 해소하고자 미국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분야 MFN 면제 조치의 철폐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또한 EU의 시청각서비스 분야 중 상대국의 불공정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와 같은 MFN 면제 조치는 그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유사한 MFN 면제 조치들의 철폐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시청각서비스 분야의 MFN 면제 조치 관련 복수적 양허요청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EU를 비롯한 주요국을 상대로 하는 양자적 양허 요청에 모든 MFN 면제 조치의 철폐가 포함되어 있고, 상대 회원국들이 이를 철폐할 의사를

105) 부록 [발언문 12] 참고.

106) WTO(2011c), p. 10, 제67~68항 참고.

107) 미국 금융서비스 분야의 MFN 면제 조치는 주로 상호주의에 기반을 둔 조치들로서 GATS의 MFN의 무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밝힌 적이 없으므로, 법적 근거가 미진한 조치에 대해 우선적인 철폐를 요구할 근거는 충분하다.

2. 국경 간 공급(Mode 1 및 Mode 2)

국경 간 공급, 즉 Mode 1 및 Mode 2는 인도가 주도국으로서 사업서비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일부 회원국이 금융서비스와 교육서비스 등에도 관심을 두고 중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복수적 양허 요청서에서는 [표 3-2]에 정리된 분야에 대해 [표 3-3]에서와 같이 홍콩 각료선언문상의 Mode 1 및 Mode 2 관련 목표 수준에 맞추어 양허를 해 주길 요청하였다.

양허 요청국들은 복수적 양허 요청에 비해 상당한 격차가 있는 대상국들로부터 어떠한 구체적인 개선 계획도 듣지 못하였다고 평가하며, 특히 Mode 1에 대한 다수의 양허안이 상업적 주재 요건, 국적 요건, 거주 요건과 함께 지리적, 지역적 제외와 연계된 점을 우려한다.¹⁰⁸⁾

사업서비스 중에서 주로 콜센터를 포함한 후방 사무 지원서비스(back-office supporting service)가 주요 관심사항이나,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소관 규제 당국의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금융서비스 등 소관 규제 당국이 명확한 분야에 우선 접근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인도 측과 양자 협상 시 이 서비스에 다자적 양허를 할 경우 언어 구사 능력 면에서 유리한 조선족이 많은 중국에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피력한 바 있다.

108) WTO(2011c), p. 9, 제59항 참고.

표 3-2. 국경 간 공급의 복수적 양허 요청의 범위

W/120	분야/하위 분야	CPC 코드
1A	전문직 서비스	
b.	회계, 감사, 부기 서비스(법적 의무 감사 제외)	862
c.	세무서비스	863
d.	건축설계서비스	8671
e.	엔지니어링서비스	8672
f.	통합엔지니어링서비스	8673
g.	조식계획 및 조경 건축설계서비스	8674
h.	의료 및 치료 서비스	9312
i	수익사서비스	932
B.	컴퓨터관련서비스	84
C.	연구개발서비스	
a.	자연과학 관련 연구개발서비스	851
b.	사회과학 및 인문학 관련 연구개발서비스	852
c.	융합 연구개발서비스	853
D.	부동산서비스	
b.	수수료 또는 계약 기초	822
E.	운영자 없는 임대/리스서비스	
a.	선박 관련	83103
b.	항공기 관련	83104
c.	기타 운송기기 관련	83101+83102+83105
d.	기타 기계 및 기기 관련	83106+83109
F.	기타 사업서비스	
b.	시장조사/여론조사서비스	864
c.	경영컨설팅서비스	865
d.	경영컨설팅관련서비스	866
e.	기술시험 및 분석서비스	8676
h.	광업부수서비스	883+5115
i.	제조업부수서비스	884+885(88442 제외)
j.	에너지유통부수서비스	887
m.	과학/기술컨설팅 관련서비스	8675
n.	기기의 유지 및 보수	633+8861-8866
k.	인력 배치 및 공급서비스	872
p.	사진서비스	875
	"기타 지원서비스"	
	신용보고서비스	CPC 1.1-8591
	수집대리서비스	CPC 1.1-8592
	전화기초지원서비스	
	▶ 전화콜센터서비스	CPC 1.1-85931
	▶ 기타 전화기초지원서비스	CPC 1.1-85939
	복사서비스	CPC 1.1-8594
	우편목록취합 및 발송서비스	CPC 1.1-9595
	무역박람회 및 전시회 주관 서비스	CPC 1.1-9597
	기타 지원서비스	CPC 1.1-8599

표 3-2. 계속

W/120	분야/하위 분야	CPC 코드
2C	통신서비스	
f.	팩시밀리서비스	7521**+7523**
h.	이메일	7522**+7523**
i.	음성메일	7523**
k.	전자데이터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7523**
j.	온라인정보 및 DB 복구	7523**
l.	항상된/부가 팩시밀리서비스	7523**
n.	온라인 정보/데이터 처리(거래 처리 포함)	843**
4.	유통서비스	
A.	커미션대리인서비스	621
B.	도매서비스	622
D.	프랜차이즈	8929
6.	환경서비스	
A-C	(건설링)	9401+9402+9403
7.	금융서비스(금융부속서에 의거)	
A.	보험 및 보험관련서비스	
5(a)(ii)	재보험 및 재재보험	
5(a)(iv)	보험보조서비스	
B.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	
5(a)(xvi)	자문 및 기타 보조금융서비스	
5(a)(xv)	금융정보의 제공 및 이전, 금융데이터 처리 “기타 금융중개에 대한 보조서비스”	8133
9.	관광 및 여행관련서비스	
A.	호텔 및 식당(케이터링 포함)	641-643
B.	여행 대리 및 관광 운영	7471
10.	오락, 문화, 스포츠서비스	
C.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 서비스	9631
11 H.	모든 운송형태에 대한 보조서비스	
c.	화물운송대리서비스	748
d.	기타	749

자료: ESF(2006).

표 3-3. 국경 간 공급 분야 복수적 양허 요청의 주요 내용

조정국 (coordinator)	동조국 (co-sponsors)	주요 양허 요청 내용	
인도	칠레, 홍콩, 인도, 멕시코, 뉴질랜드, 파키스탄, 스위스, 싱가포르, 태국	Mode 1	회원국의 관심분야에 걸쳐 비차별적 기초 위에 현재 수준의 시장접근 양허 상업적 주재 요건 철폐
		Mode 2	회원국의 관심분야에 걸쳐 비차별적 기초 위에 현재 수준의 시장접근 양허 Mode 1 양허가 존재하는 분야에서의 양허

자료: WTO(2010), p. 10, 제70항; ESF(2006); WTO(2005n), p. C-1, 제1(c)항.

3. Mode 3

EU가 Mode 3의 주도국인데, 복수적 요청 사항이 급진적이라¹⁰⁹⁾ 선진국 중에서도 캐나다 측이 이의를 강력히 제기하여 향후 협상 진전이 불투명한 분야이다.

우리의 경우 일부 공기업에 적용하는 일인당 지분 제한과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 시 적용할 지분제한 가능성 등이 있어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다.

한편 필리핀, 파키스탄 등 일부 개도국은 헌법 및 법률개정을 통해 수평적으로 적용되는 지분 제한의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그 진전 상황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4. Mode 4

Mode 4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복수적 협상에서 요청국으로도, 대상국으로

109) 모든 분야의 Mode 3에 대해 제한조치를 전부 철폐할 것을 요청하였다.

도 참여하지 않아서 복수적 양허 요청서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표 3-4]에 정리된 Mode 4의 범주와 관련하여 [표 3-5]에서 정리한 홍콩 각료선언문 부속서상 양허의 목표 수준에 따라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3-4. Mode 4의 범주		
구분	범주	주요 사례
Mode 3과 연계된 Mode 4	기업 내 전근자	임원, 관리자, 전문가
	사업상 방문자	기업설립관련자
Mode 3과 연계되지 않은 Mode 4	사업상 방문자	서비스판매자
	계약서비스 공급자(CSS)	본국 법인소속
	독립서비스 공급자 (독립 전문가: IP)	자가고용(self-employed)

자료: 김준동 외(2008), p. 34, [표 2-2]에서 재인용.

표 3-5. 홍콩 각료선언문 부속서상 Mode 4 관련 양허의 목표 수준	
범주	목표 수준
계약서비스공급자(CSS)와 독립전문가(IP)	신규 양허 또는 양허 개선 - ENT의 철폐 또는 상당한 감축 - 규정된 체제 기간과 갱신 가능성의 명시
기업내전근자(ICT)와 사업상방문자(BV)	신규 양허 또는 양허 개선 - ENT의 철폐 또는 상당한 감축 - 규정된 체제 기간과 갱신 가능성의 명시

자료: WTO(2005n), p. C-1, 제1(d)항.

Mode 4는 DDA 서비스협상의 개발 측면에서 최대 쟁점 분야 중 하나이므로, 섬세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동안 선진국과 개도국 간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여 왔는데, LDC나 주요 개도국과 양자협상 시에는 다자적 양허보다 양자간 교류 협정 또는 FTA를 통한 접근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일례로 2005년 LDC와 양자협상 시 다자적 차원에서 Mode 4 양허를 확대할 경우 혜택 대부분을 언어 구사 능력에서 유리한 조선족이 많이 있는 중국이

독점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국내 노동조합과 대내 협상 측면에서 우리는 GATS Mode 4 부속서 제2항에 따라 고용시장에 접근하는 경우는 배제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서비스공급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명확히 설명하면 국내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 실제로 2005년 5월 당시 민주노동당 주최 ‘DDA 수정양허안 관련 설명회’에서 노동조합 측에 이러한 점을 설명하였고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점에 그들도 동의하였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UR 당시 자국의 이민법 체계에 따라 자국 업체가 고용하는 인력도 포함해 양허를 한 탓에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협상이 재개되어 제2차 수정양허안을 제출해야 한다면 제1차 수정양허안에 들어간 계약서비스공급자(CSS: Contractual Service Suppliers)의 양허 범위 확대와 독립전문가(IP: Independent Professionals) 범주를 새로 포함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주로 전문직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활성화 여부, 국내 자격인정 체계 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 분야로 건축설계서비스, 엔지니어링, 경영컨설팅, 자동차설계디자인, 컴퓨터관련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다만 이 경우 국내 전문직 인력수급 정책상 수량적 상한(numerical ceiling)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입장이다.

5. 법률서비스

법률서비스 분야의 복수적 양허 요청서의 주요 내용은 [표 3-6]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3-6. 법률서비스 분야 복수적 양허 요청의 주요 내용

조정국 (coordinator)	동조국 (co-sponsors)	범위	주요 양허 요청 내용		
호주	호주, 캐나다, 칠레, EU,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미국	외국법 및 국제법	제한 없이 완전 양허		
			법적 중재, 조정예의 참여 허용		
		외국법, 국제법, 국내법	파트너십 및 다른 형태의 상업적 제후 허용		
			국내 변호사 고용 허용		
			AC	외국 로펌의 명칭 사용 선택권 허용	
		외국법 및 국제법	Mode 1	상업적 주재 요건 및 거주 요건 철폐	
			Mode 2		
		외국변호사/로펌과 국내 변호사/로펌 간의 파트너십 및 다른 형태의 상업적 제후에 대한 제한 철폐			
		국내 변호사의 고용에 대한 제한 철폐			
		모든 형태의 ENT 철폐			
		특히 외국법 및 국제법	국적 요건 및 사전 거주 요건 철폐		
		외국 자본 제한 철폐			
		외국법 및 국제법	사전 경력 요건 철폐		
		외국 로펌의 설립 금지 및 제한 철폐, 설립 형태에 대한 제한 철폐			
외국 변호사에 관한 수직 상한을 포함하여 사무소 개수에 관한 수량적 제한 철폐					

자료: WTO(2010), p. 5, 제30항; ESF(2006).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향후 DDA 서비스협상 재개 시 미국과 FTA 차원에서 이루어진 외국법자문사역(FLC: Foreign Legal Consultancy)에 대해 합작 및 고용 관련 개방 약속을 다자 차원의 DDA에 반영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수평적 양허의 Mode 4 분야에서 CSS 또는 IP에 법률서비스, 즉 FLC를 포함하지 않으면, 현재 양허표상의 Mode 4에 기재한 상업적 주재 요건은 중복기재 사항이 되어서 삭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법무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주요 개도국을 대상으로 국적요건 및 거주요건 대신에 대리인 임명과 책임보험을 활용하는 양허를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건축설계서비스 및 엔지니어링서비스

건축설계서비스 및 엔지니어링서비스 분야의 복수적 양허 요청서의 주요 내용은 [표 3-7]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3-7.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 복수적 양허 요청의 주요 내용				
조정국 (coordinator)	동조국 (co-sponsors)	범위	주요 양허 요청 내용	
캐나다	호주,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EU, 인도,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페루, 스위스, 미국	건축설계서비스 엔지니어링서비스 통합엔지니어링 서비스	Mode 1	상업적 주재 요건 철폐,
			Mode 2	국적 요건 및 거주 요건 철폐
			Mode 3	차별적 법적 형태 관련 제한 철폐 합작 설립 관련 제한 철폐 국적 요건 및 거주 요건 철폐
			Mode 4	특히 계약서비스공급자(CSS) 및 독립전문가(IP)를 강조하여 전 범주에 걸쳐 양허 ENTs의 철폐 또는 상당한 감축 잔존 ENTs의 명확화 보장
			MFN 면제 조치의 철폐	

자료: WTO(2010), p. 9, 제61항; ESF(2006).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는 비교적 늦게 프렌즈 그룹이 형성되어 복수적 양허 요청서(plurilateral request)가 작성되었다.

우리 측은 당시 건설교통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 Mode 1의 상업적 주재 요건은 기존 추가적 약속(AC: Additional Commitment)란의 자격요건 관련 기재 사항¹¹⁰⁾과 연계하여 대응하고, Mode 4의 경우 IP를 포함하는 방안도 여타 분야(예: 경영컨설팅, 자동차설계디자인 등)가 포함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관계 부처 대책회의에서 밝힌 바 있다.

110) 우리의 양허표에는 한국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받은 건축설계사와 공동계약을 통해 외국 건축설계자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이 허용된다고 AC란에 기재되어 있다. WTO(2005g), p. 15 참고.

따라서 주요국을 대상으로 우리 측 AC란에 기재한 자격요건의 인정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캐나다 측이 복수적 협상에서 자국의 규제상황을 설명하면서 자국에서도 실제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한 사항이기도 하다.

7. 컴퓨터관련서비스

컴퓨터관련서비스 분야의 복수적 양허 요청서의 주요 내용은 [표 3-8]에 정리된 바와 같이 CPC 84 전부에 대해 양허를 하자는 것이다. 이는 컴퓨터관련 서비스의 범위 관련 양해(Understanding)¹¹¹⁾에도 나온 것으로 우리 측은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 이후 그에 대한 규제 도입 필요성을 확신하지 못해 아직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CPC 849의 ‘기타 컴퓨터관련 서비스’ 범위를 포함하여 양허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규제 도입의 우려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최종 양허표에서 CPC 84 전부에 대해 양허를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표 3-8. 컴퓨터관련서비스 분야 복수적 양허 요청의 주요 내용

조정국 (coordinator)	동조국 (co-sponsors)	범위	주요 양허 요청 내용	
칠레	호주, 캐나다, 칠레, EU, 콜롬비아, 인도, 이스라엘,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홍콩, 파키스탄, 페루, 싱가포르, 스위스, 미국, 대만	CPC 84	Mode 1	완전 양허
			Mode 2	완전 양허
			Mode 3	완전 양허
			Mode 4	계약서비스공급자(CSS)와 독립전문가(IP)와 관련 신규 또는 양허 개선 - ENT의 철폐 또는 상당한 감축 - 규정된 체제기간과 갱신 가능성의 명시 기업내전근자(ICT)와 사업상방문자(BV)와 관련 신규 또는 양허 개선 - ENT의 철폐 또는 상당한 감축 - 규정된 체제기간과 갱신 가능성의 명시

자료: WTO(2010), p. 6, 제38항; ESF(2006).

111) WTO(2007a) 참고.

8. 통신서비스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2008년 신호회의(Signaling Conference)가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대상국들이 현재 자유화 수준도 양허 안에 반영하지 못하자 실망한 상태이다.¹¹²⁾ 통신서비스 분야의 복수적 양허 요청서의 주요 내용은 [표 3-9]에 정리되어 있다.

향후 DDA 서비스협상이 재개될 경우 협상의 최종단계에서 미국이나 EU 등이 양자적 FTA에서 약속한 것을 여타 개도국에 전시효과 내지 유도책으로 사용하기 위해 DDA 서비스협상에서도 다자적 차원으로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즉 기간통신서비스(facilities-based services) 분야에서 간접투자(Indirect ownership)에 대해 외국인투자지분 80% 상한(대주주의 경우 15%)의 철폐를 반영할 것을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 3-9. 통신서비스 분야 복수적 양허 요청의 주요 내용

조정국 (coordinator)	동조국 (co-sponsors)	범위	주요 양허 요청 내용	
미국	호주, 캐나다, EU, 홍콩, 일본, 한국, 노르웨이, 싱가포르, 미국, 대만	음성 및 데이터 송신서비스, 임차회로 서비스	Mode 1	‘unbound’ 없이 양허, 특정 공급자의 네트워크 이용 요건 철폐, 상업적 주재 요건 철폐, 상업적 주선 요건 철폐
			Mode 2	완전 양허
			Mode 3	쿼터, 독점적 서비스공급자 또는 지역적 제한 등 서비스공급자의 설립 또는 수에 관한 제한 철폐, ENT의 철폐, 법적 형태에 관한 제한 철폐, 국적 요건 또는 거주 요건 철폐, 다수 자본 참여 및 효과적 통제 허용
		부가 서비스	Mode 1~3	완전 양허
		재판매서비스	Mode 1~3	완전 양허
		전체	Mode 4	기업내전근자(ICT) 및 사업상방문자(BV)에 대한 신규 양허 또는 양허 개선
			AC	통신 참고문서의 모든 조항 양허
				모든 MFN 면제 조치의 철폐

자료: WTO(2010), p. 7, 제44항; ESF(2006).

112) WTO(2011c), p. 8, 제50~53항 참고.

9. 우편/쿠리어/특급배달서비스

특급배달서비스를 포함한 우편 및 쿠리어서비스 분야의 복수적 양허요청서의 주요 내용은 [표 3-10]에 정리되어 있다. 특급배달서비스를 포함한 우편 및 쿠리어서비스 분야는 2008년 이후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요청국들이 실망한 상태이다. 일례로 어떤 대상국도 요청국들의 AC란 기재 요구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¹¹³⁾

표 3-10. 우편/쿠리어서비스/특급배달 분야 복수적 양허 요청의 주요 내용

조정국 (coordinator)	동조국 (co-sponsors)	범위	주요 양허 요청 내용
미국	EU, 일본, 미국, 뉴질랜드	CPC 7511, 7512 (특급배달서비스 포함)	완전한 MA와 NT를 향해 의미 있는 진전을 반영하도록 신규 양허 및 양허 개선 - MA: 실질적으로 제한 없는 MA 제공 - 유효한 NT 제공 - AC: 지배적 사업자의 비합리적 관행 개선, 투명하고 합리적인 면허 요건 보장, 독립적인 규제기관 보장

자료: WTO(2010), p. 6, 제41항; ESF(2006).

우리나라의 경우 특급배달서비스의 처리가 관건이다. 사실상 쿠리어서비스와 특급배달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동일하므로, 미국이 요청하는 바와 같이 이를 명시적으로 양허 범위에 포함해 양허를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EU의 경우 AC란에 반경쟁적 행위의 금지를 기재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 예상되므로, 우정사업본부의 회계분리 등 국내 제도개혁 상황의 진전에 맞추어 대응이 필요하다.

113) WTO(2011c), p. 7, 제42~44항 참고.

10. 시청각서비스

시청각서비스 분야의 복수적 양허 요청서의 주요 내용은 [표 3-11]에 정리되어 있다. 영상음향서비스라고도 불리는 시청각서비스(AV: Audio Visual)는 미국과 EU·캐나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로 MFN 면제 조치도 가장 많은 분야이다. 프랑스와 캐나다 등은 UNESCO에서 문화적 다양성(CD: Cultural Diversity) 협약의 제정을 달성함으로써 AV 협상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인상을 주고 있다.¹¹⁴⁾

AV는 UR 당시에도 특별 부속서나 일반적인 문화적 예외를 도입하는 시도를 통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할 필요를 두고 대립하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¹¹⁵⁾

표 3-11. 시청각서비스 분야 복수적 양허 요청의 주요 내용				
조정국 (coordinator)	동조국 (co-sponsors)	범위	주요 양허 요청 내용	
멕시코	홍콩, 일본, 대만, 멕시코, 싱가포르, 미국	홍보 및 광고서비스 영화제작서비스 비디오제작서비스 영화배급서비스 비디오배급서비스 영화 및 비디오 제작과 배급에 연계된 기타서비스 영화상영서비스 음향녹음서비스	Mode 1	현재(de facto) 자유화 수준을 반영 양허
			Mode 2	현재(de facto) 자유화 수준을 반영 양허
			Mode 3	컨텐츠 쿼터 철폐
				외국인지분 제한 철폐
				공급자 수 및 기타 수량적 제한 철폐
				국적요건 및 거주요건 철폐
				ENTs 철폐
				법적 형태 관련 제한 철폐
				차별적 조세 대우 철폐
				차별적 면허 요건 철폐
				차별적 현지생산, 고용, 후원 요건 철폐
			MFN 면제 조치의 철폐 또는 감축, 잔존 MFN 면제 조치의 명확화	

자료: WTO(2010), p. 12, 제82항; ESF(2006).

114) 한편 WTO에서는 문화서비스의 구체적인 정의나 범주에 대해 논의가 없는 상태이다.

115) Croome(1999), p. 212.

UNESCO CD 협약 제정을 주도한 캐나다의 경우 UNESCO CD 협약 이전에는 문화와 관련된 서비스 양허를 전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그 수석대표가 2006년 1월 하순에 개최된 Group 6+1 회의¹¹⁶⁾ 이후 비공식 만찬에서 CD 협약이 채택된 후에는 어느 부분에서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의향이 있음을 비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6년 6월에 개최된 DDA 서비스협상의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캐나다 측은 관광안내업의 양허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UNESCO CD가 일종의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와 AV 프렌즈(미국, 일본, 홍콩, 멕시코 등)의 입지가 축소되고, 복수적 양허 요청에서도 방송이 제외되는 등 목표 수준이 하향 조정되었다. 2011년 2월에 개최된 복수적 협상에서도 29개의 대상국 중 2개 회원국만이 양허 개선 의향을 표명하였다.¹¹⁷⁾

그러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개발 등 여타 분야와의 연계가 단일 합의(single undertaking) 차원에서 고려될 막바지 단계에 가서는 양자적으로 분야 간 주고받기(trade-off)에 관한 논의가 진전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시청각서비스가 논의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UR 당시에도 서비스 분야의 양보가 농업과 섬유 등 다른 주요 의제와 관련한 최후의 주고받기(bargain)를 위해 보류되기도 하였다는 주장이 있다.¹¹⁸⁾¹¹⁹⁾

116) 미국, EU, 캐나다, 일본 등의 QUAD와 호주, 한국, 인도가 참석한 비공식 회의로서 2006년 2월의 복수적 협상의 진행방향에 대한 논의를 주로 하였다.

117) WTO(2011a), p. 3, 제17항 참고.

118) Croome(1999), p. 214.

119) UR 당시 EC 측 서비스협상을 맡았던 한국 주재 EC 대사는 2006년 5월 우리나라에 대한 요구(demarche) 과정에서 UR 당시 농업과 서비스(특히 AV) 간의 연계를 부인하였으나, 주요 회원국 간에 명시적이지는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연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일부 학자의 논문에서 이러한 연계 가능성이 언급되었다. DDA 협상에서는 EC와 브라질 등 주도국들이 단일 합의(single undertaking)상 목표 수준과 관련하여 농업과 서비스 간의 연계 내지는 상응한 수준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상황이므로, UR 당시보다도 그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시청각서비스 분야에서 국내적으로는 홍보 및 광고서비스(CPC 96111), 영화 및 비디오 제작과 배급 관련 기타서비스(96114)가 이미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고, 영화제작서비스(96112), 영화배급서비스(96113)의 케이블티브이(CATV) 관련 제외도 폐지된 상태이다.

영화상영업의 경우 국내적으로 개방된 상태이나, 콘텐츠 규제(screening time 관련 제한, 즉 스크린쿼터)가 내국민대우 관련 제한인지 국내규제(DR: Domestic Regulation) 관련 사항인지가 불명확한 상태이다. 따라서 향후 DDA 서비스협상이 재개되어 동 업종의 양허가 필요할 경우 멕시코의 양허표에서처럼 NT란에 스크린쿼터를 기재하거나, 그 대신에 '투명성 목적을 위한 노트(notes for transparency purposes)'를 활용하는 방안 중 어느 방안을 채택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방안 중에서 NT란에 기재를 한다면 지속적으로 그 철폐를 요청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이행의무 차원에서 국내 규제의 하나로써 '투명성 목적을 위한 노트'로 기재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시청각서비스 분야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는 분야인 만큼, 관련 부처 이외에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미리 접촉하여 양해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참고로, 시청각서비스 분야의 개방 확대에 대한 반대 시위를 조직하고 있는 스크린쿼터 연대의 핵심 관계자는 2004년에 외교통상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주관으로 개최된 시청각서비스 분야의 간담회 이후 비공식 만찬에서 농업 분야에서 우리가 양보해야 할 상황에 이를 경우 시청각서비스를 반대급부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용의를 표명한 바 있다.

미국 측은 영화상영업에 만족하지 않고 방송서비스 분야도 DDA 차원에서 양허를 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복수적 양허 요청서에 없다고 해서 양자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기도 하고, 또 마지막 단일 합의 단계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양보의 반대급부로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미 FTA에서와 같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or) 보다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Program Provider)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며, 한·미 FTA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거나 그 이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PP에 대해서는 현재 대기업의 자회사 채널 비중이 과도하여 독과점화되는 현상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국 시장에 비해 국내시장의 광고료 대비 수신료 수입이 미미한바, Discovery 및 Disney와 같은 채널의 성공 사례가 확산되어 PP 수입구조의 정상화 내지는 선진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PP 중에서도 뉴스채널, 쇼핑채널, 종교채널, 교양채널, 영화·드라마채널 등 그 성격에 따라 차별적 접근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UNESCO의 문화적 다양성 협약의 채택과 관련해 2005년 10월 총회에서 투표에 대한 설명을 조건으로(Explanation Of Vote) 다는 것으로서 일 단락되었고, 우리나라는 2010년에 비준을 한 바 있다.

반면 우리 측은 시청각서비스 분야에서 EU,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와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2002년 7월의 1차 양허 요청서(initial request)에 우리의 UR 양허 수준에 상응하는 양허 요청을 할 것을 포함한 바 있다. 그동안 ‘양허 요청도 하지 말고 양허도 하지 말자’는 국제적 시민단체(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요구에 편승한 국내 NGO 측의 요구에 영향을 받은 문화부의 입장에 따라 양자협상 시 적극적으로 제기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DDA 협상이 재개될 경우 협상의 최후 단계에서 활용하려면 시청각서비스 분야가 우리의 1차 양허 요청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대상국들에 점진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2005년경에 국내 NGO 측의 압력에 의해 당시 문화부는 한때 양허 요청을 철회하는 방안도 언급하였으나, 시청각서비스의 양허 요청을 문화부 소관

인 뉴스제공업에 대한 EU 측의 양허 요청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저지한 바 있다.

11. 건설서비스

건설서비스 분야의 복수적 양허 요청서의 주요 내용은 [표 3-12]에 정리되어 있다. 건설서비스 분야는 2008년 신호회의(Signaling Conference) 이후 더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다.¹²⁰⁾

우리의 경우 건설서비스에서 하도급 의무제가 2008년도에 철폐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쟁점 사항이 없다.

반면 건설서비스는 우리나라가 중점을 두는 5대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 분야 중 하나이자 우리 측 양허 요청(request)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동남아 국가나 중동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의 양허 요청 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표 3-12. 건설서비스 분야 복수적 양허 요청의 주요 내용				
조정국 (coordinator)	동조국 (co-sponsors)	범위	주요 양허 요청 내용	
일본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대만, EU,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터키, 미국	CPC 511-518	Mode 2	완전 양허
			Mode 3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
				상업적 주재 제한 및 합작과 공동운영 요건 철폐
				차별적인 등록 요건 및 면허 절차 철폐
				프로젝트 총액에 의해 평가되는 프로젝트의 규모를 포함하여 외국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수행되는 프로젝트의 형태에 관한 제한 철폐
				부담이 되는 자산 요건 철폐

자료: WTO(2010), p. 2, 제15항; ESF(2006).

120) WTO(2011c), p. 4, 제21항 참고.

12. 교육서비스

교육서비스 분야의 복수적 양허 요청서의 주요 내용은 [표 3-13]에 정리되어 있다. 교육서비스는 복수적 양허 요청을 한 요청국에서 주요 수출국인 캐나다가 제외됨으로써 우리 측이 이익을 제기한 바 있다. 캐나다의 경우 교육, 의료, 문화 분야 등은 양허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어, 호주 등이 요청국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호주 측이 이 제안을 거부하며 그 배경에 대해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우리 측은 요청국에서 제외할 경우 요청대상국에라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무임승차(free-ride)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호주 측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문제 제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다.

표 3-13. 교육서비스 분야 복수적 양허 요청의 주요 내용

조정국 (coordinator)	동조국 (co-sponsors)	범위	주요 양허 요청 내용	
뉴질랜드	뉴질랜드, 호주, 미국, 대만, 말레이시아	고등교육 (CPC 923****) 및 기타 교육 (CPC 929****)	Mode 1	완전 양허 (“none”)
			Mode 2	완전 양허 (“none”)
			Mode 3	완전 양허 (“none”) 또는 외국자본 참여/지분보유 측면에서 시한을 둔 제한만 기재하여 양허

자료: WTO(2010), p. 4, 제27항; ESF(2006).

고등교육 중 호주 측이 양자협상 시 관심을 보인 이른바 ‘on-shore program’의 공동설립 건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대학으로 이미 1차 양허안에 포함한 사항이다. 그런데 호주 측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같은 질의를 되풀이하는 문제가 있어 이 내용을 문서로 명확히 남기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차 양허안에 기타교육 분야가 제외된 이유는 초중등 학원서비스가 초중등 교육에 미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 때문이다. 즉 이미 국내적으로 개방은 되어 있으나, 양허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경우 전교조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동 분야에서는 주요 교역상대국이 관심을 갖는 테스트서비스, 어

학교교육서비스, 무술교육서비스 등 특정 분야로 제한하여 삽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13. 유통서비스

유통서비스 분야에서도 회원국들의 현재 자유화 수준과 양허 수준의 격차가 큰 상태이다.¹²¹⁾

우리의 경우 유통서비스 분야에서 우선 ENT 기재사항의 명확성 제고가 필요하다. 중고차도소매와 가스연료제품도소매업 분야에 기재된 ENT의 주요 기준을 분리하여 기재하되, GATS 제6.4조 관련 국내 규제 사항은 제외하고 거시경제 수급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국내 상업적 주재요건이 있는 경우(예: 안경소매업) 이를 내국민대우 제한으로 해석하는 접근방법과 국내 규제로 해석하는 접근방법이 있는데,¹²²⁾ 우리 양허안의 통일성을 기하려면 NT란에 제한사항으로 기재하는 대신에 ‘투명성 목적을 위한 노트(notes for transparency purposes)’로 기재하는 방안이 더 적절할 것이다.

14. 환경서비스

환경서비스 분야의 복수적 양허 요청서의 주요 내용은 [표 3-14]에 정리되어 있다.

121) WTO(2011c), p. 4, 제25항 참고.

122) S/L/92상에는 사안별(case-by-case)로 접근하도록 되어 있다(WTO 2001a, p. 6, 제14항).

표 3-14. 환경서비스 분야 복수적 양허 요청의 주요 내용

조정국 (coordinator)	동조국 (co-sponsors)	범위	주요 양허 요청 내용	
EU	호주, 캐나다, EU, 일본,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미국	CPC 94 (9401-06, 9409)	Mode 1	가능한 서비스에서 완전 양허 (자문 및 모니터링 서비스 등)
			Mode 2	완전 양허
			Mode 3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
				공동운영 요건 철폐
				합작과 같은 법적 형태 관련 제한 또는 요건 철폐
			Mode 4	서비스공급자의 이동을 보장하도록 양허*

주: * Mode 4와 관련하여 미국은 양허 요청국이 아님.

자료: WTO(2010), p. 8, 제52항; ESF(2006).

환경서비스와 관련해 향후 제2차 수정양허안 작성 시 기본입장은 공공부문 서비스는 양허 협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며, 이를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즉 EU의 양허표에서와 같이 ‘contracted by private industry’라고 명시하여 민간 산업에 의해 계약된 경우로 양허 범위를 국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병존하는 서비스(예: 폐기물, 폐수 서비스)의 경우, 양허 범위에서 공공부문을 제외함으로써 이중장치를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위생 및 유사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양허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

반면 토양오염복원업의 경우 하드웨어적인 복원 부문은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외국 기업의 참여폭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 부문에 대해서는 국내 고용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이고, 선진 기술 이전 등의 긍정적 효과를 고려할 때 더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양허안에 반영하는 입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¹²³⁾

환경컨설팅 부문의 경우도 국내 환경컨설팅 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123) 강상인(2022), p. 36 참고.

에서 시장 개방의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미 엔지니어링서비스 부문이 전면 개방되어 있다는 점과 국내 환경컨설팅 관련 법제에 외국 기업의 국내시장 진출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서비스의 양허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¹²⁴⁾

15.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분야의 복수적 양허 요청서의 주요 내용은 [표 3-15]에 정리되어 있다.

표 3-15. 금융서비스 분야 복수적 양허 요청의 주요 내용				
조정국 (coordinator)	동조국 (co-sponsors)	범위	주요 양허 요청 내용	
캐나다	호주, 캐나다, EU, 홍콩, 일본, 한국, 노르웨이, 파나마, 대만, 미국	GATS 금융서비스 부속서에 기재된 분야	Mode 1 Mode 2	해상, 항공 및 운송 보험, 재보험, 보험 중개, 보험 부수서비스, 금융자문서비스, 금융정보 및 데이터처리서비스 양허 증권서비스의 기관소비자와 같이 정교한 소비대리인의 경우 추가적 자유화
			Mode 3	단독 자회사, 합작, 지사 형태의 신규회사 설립 및 기존회사 인수 권한 포함 양허
			Modes 1, 2, 3	법규의 적용과 관련 NT 보장 독점, 수량 쿼터 또는 ENTs 및 강제적 양도와 같은 제한 제한 철폐
			법규의 제정과 적용 시 투명성 보장	

자료: WTO(2010). p. 9. 제65항; ESF(2006).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현재 제출된 양허안들이 현재의 자유화 수준보다도 떨어지고, 포괄 범위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¹²⁵⁾

우리의 경우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당시 소관부

124) 강상인(2022), p. 36 참고.

125) WTO(2011c), p. 5, 제30항 참고.

처인 재정경제부(현재 기획재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응해 왔다. 단 미국의 경우 한·미 FTA 차원에서 우리가 약속한 바를 DDA, 즉 GATS에서도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우리 측은 이에 대해 미온적인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03년 1차 양허안 제출 시 금융서비스 분야의 건전성 규제 사항에 대해 향후 삭제계획을 기재하였다가 2005년 5월 수정양허안 제출 시에는 이러한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주요 선진국들이 우리 측 제기사항 6개 항목 전체를 건전성 규제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으나, 우리 측이 다소 성급하게 대응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해당 조치를 완전히 삭제하는 대신에 ‘투명성 목적을 위한 노트(notes for transparency purpose)’로 대체하여 기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16. 해운서비스

해운서비스 분야의 복수적 양허 요청서의 주요 내용은 [표 3-16]에 정리되어 있다.

해운서비스는 1996년에 후속 협상의 결렬로 WTO 서비스협상 분야 중 유일하게 타결에 이르지 못한 분야이다. 협상 진전의 최대 걸림돌인 미국은 겉으로는 ‘핵심적 다수의 양허(critical mass)’가 없어서라고 변명하지만,¹²⁶⁾ 실제 배경은 국내적으로 의회 등 이해관계가 근 100년간 고착되었기 때문이다.¹²⁷⁾

‘critical mass’의 부재 이외에도 그동안 미국이 자국의 양허 불가 이유로 든 사항으로는 교역상대국들의 막대한 보조금 탓에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미연방해사위원회(FMC:

126) 여기서 미국이 말하는 critical mass는 나머지 149개 WTO 회원국 전체가 양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2005년 양자협상 때 미국 수석대표가 비공식적으로 부연한 바 있다.

127) 이는 WTO 사무국 서비스국의 P 참사관이 2006년 5월 저자와의 비공식 오찬에서 밝힌 내용이다.

Federal Maritime Commission)의 일방적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국가안보적 측면 등이 있다.

표 3-16. 해운서비스 분야 복수적 양허 요청의 주요 내용

조정국 (coordinator)	동조국 (co-sponsors)	범위	주요 양허 요청 내용	
일본	호주, 캐나다, 중국, EU, 홍콩, 아이슬랜드,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나마, 스위스, 대만	국제화물운송 (카보타지 제외) (CPC 7212)	Mode 1	화물유보제 철폐
			Mode 3	외국인 지분 제한 철폐
				상업적 주재 설립 권한 관련 제한 철폐 (MA)
				이사들의 국적 요건 철폐
				기타 차별 대우 철폐(NT)
		해운보조서비스	Mode 3	외국인 지분 제한 철폐
			Mode 3	상업적 주재 설립 권한 관련 제한 철폐
			Mode 1	기술적 실행 가능성 조건하에서
			Mode 2	국경 간 공급 및 해외소비 완전 양허
		항만서비스 접근 및 이용	AC	해운 모델 양허표에 의거하여 추가적 약속(additional commitments)
		복합 운송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AC	해운 모델 양허표에 의거하여 추가적 약속
		전체		MFN 면제 조치 철폐

자료: WTO(2010), p. 3, 제18항; ESF(2006).

우선 보조금 문제는 유럽 국가들이 톤세 제도(Tonnage Tax System)¹²⁸⁾를 활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나, 이는 규범작업반(WPGR: Working Party on GATS Rules)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기존에 논의되던 관광서비스의 보조금 외에 해운서비스의 교역 왜곡 보조금 사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¹²⁹⁾

128) 톤세 제도란 해운기업의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 선박의 순 톤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개별 선박 표준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법인세를 산출하는 제도이다. 즉 해운기업의 소득을 계산할 때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을 적용하여 세금 납부 규모를 예측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의 주요 해운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NAVER 지식백과, “톤세 제도”, 검색일: 2022. 1. 29).

129) 단 우리 측이 먼저 제기하기에는 선주협회의 반대로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안보적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도 국가필수선대 제도¹³⁰⁾를 도입하여 2021년 현재 88척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GATS 제14조 bis의 안보 관련 일반적 예외에 따라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 더욱이 미국 측은 일정 선대를 유지하고자 국내 연안 무역(cabotage)에 국내에서 건조된 선박만 투입하도록 제한하는 존스법(Jones Act)¹³¹⁾을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카보타지(cabotage) 부문의 시장유보를 통해 국제 해운에 대해 수지를 보전하는 효과도 있다.

FMC의 일방적 조치와 관련해 과거 일본의 항만서비스 분야에서 일본 업계의 담합적 조치에 벌과금을 부과하고 일본이 이에 맞서 보복조치를 발동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다.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반경쟁적 관행(anti-competitive practice)에 대한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참고문서(Reference Paper)를 작성하여 채택하는 방안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교통부 산하의 정부기관인 해운행정기관(MARAD: The United States Maritime Administration) 담당자도 다자적 차원에서의 효과를 인정한 바 있으나,¹³²⁾ 참고문서에 대한 개도국들의 반발이 있어 해운프렌즈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였다.¹³³⁾

130) 국가필수선대 제도로 국가 비상사태 시 군수물자와 전략물자의 안정적인 운송을 위해 일정 규모의 국적선대를 지정하는 제도이다. 미국,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선사의 진입 제한 및 국적선사 진흥을 위해 국가필수선대 제도와 유사한 '화물유보제도,' '화물우선적취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美 전략물자 100% 국적선사 이용... 韓도 국가필수선대 확대해야」(2017. 6. 23), 검색일: 2022. 1. 29).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에 처음 30척이 도입된 이래 2020년 2월 27일에 제정된 「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 에 관한 규정」의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국가필수선박 지정 목표 척수를 88척으로 운영하고 있다.

131) 미국 「Merchant Maritime Act of 1920」의 제27조를 지칭하는 연안 무역법(Cabotage Law)이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영토 내의 지역 간 해상운송 권한을 미국에 등록하고, 미국 국적의 선원이 탑승한 미국 시민 소유의, 미국에서 건조되거나 상당 부분 개조된 선박으로 제한된다. 이로 인해 Jones Act가 선박공급을 제한하여 서비스 경쟁에 의한 운임 인하 가능성을 차단하고 미국의 경쟁력 상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형성되었다(NAVER 지식백과, "Jones Acts", 검색일: 2022. 1. 30).

132) 이에 대해서는 2005년 2월 WTO에서 개최된 해운서비스 관련 세미나 이후 WTO 카페테리아(cafeteria)에서 환담 시 MARAD 담당자가 인정한 바 있다.

133) 동 Reference Paper와 관련하여 제안서 작성에 대한 협조를 해운프렌즈 중 주도국인 일본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우리와 일본 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우리가 제안하기에 부담이 있어, 2005년 8월경 또 다른 주도국인 노르웨이 측 해운전문가에게 이메일로 타진해 보았다. 그러나 노르웨이 측에 민감한 분야인 시정각서비스에 대한 미국 측의 맞교환 요구 가능성을 우려한 탓인지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가 없었다.

해운서비스 분야에서는 그 외에도 1996년 결정에 따라 MFN 의무가 잠정적인 유보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선원증의 상호인정과 같이 GATS에서 예외가 되는 사안 이외에 회원국 간에 우리가 차별을 두는 대우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끝으로, 노르웨이 및 EU 등 유럽 국가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측의 시청각서비스 분야의 양허 요구와의 연계 가능성으로 인해 미국 측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¹³⁴⁾ 그러나 미국 측이 과거 UR 또는 해운서비스 후속 협상(NGMTS) 당시 양허안(offer)을 제출한 경우와 같이 여타 회원국으로부터 시청각서비스의 양허를 얻어 내기 위해 해운을 양허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파악된다.¹³⁵⁾ 오히려 농업과 같이 파이가 더 큰 분야와 결합하여 상호연계를 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¹³⁶⁾

17. 항공운송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복수적 양허 요청서의 주요 내용은 [표 3-17]에 정리되어 있다.

134) 실제로 해운프렌즈 회의에서 EU 측은 미국을 빼고 동남아와 중남미 등 개도국에 집중하자거나, LDC에 대해 양허 요청을 하자는 등의 언급을 공공연히 한 바 있다.

135) 이는 2006년 당시 WTO 사무국 서비스국장의 의견이기도 하다.

136) 이 경우에도 굳이 연계를 시도한다면 명시적으로 하기보다는 암묵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7. 항공운송서비스 분야 복수적 양허 요청의 주요 내용

조정국 (coordinator)	동조국 (co-sponsors)	범위	주요 양허 요청 내용	
EU	호주, 칠레, EU,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항공기 수리유지서비스 판매 및 마케팅서비스 컴퓨터예약시스템 서비스 지상조업서비스 공항운영서비스	Mode 1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완전 양허
			Mode 2	완전 양허
			Mode 3	ENT 철폐
				외국인지분참여 제한 철폐
				현지 회사와의 사전 계약 요건 철폐
				국적기 수리 제공 외국서비스공급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차별적인 조치 철폐
				항공기 수리유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거주 요건 철폐
			Mode 4	서비스공급자의 이동을 보장하도록 양허 촉구
			MFN 면제 조치의 철폐 또는 감축	

자료: WTO(2010), p. 8, 제58항; ESF(2006).

항공운송서비스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 지리적 열위에 있는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다자간 자유화를 추진하는 상황이다.

요청국들은 GATS 항공운송서비스의 부속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세 가지 분야¹³⁷⁾ 외에 지상조업 및 공항운영업 등 운수권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아웃소싱이 전개된 분야를 복수적 요청에 포함하였고, 항공운송서비스의 부속서 검토 회의를 거쳐 부속서를 개정하여 이들 서비스를 협정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요청 대상국들 중 일부는 지상조업서비스와 공항운영업의 경우 항공운송서비스의 부속서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이므로, 어떠한 양허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¹³⁸⁾

우리로서는 공항운영업 외에 지상조업서비스는 이미 개방되어 있으므로, 항공운송서비스의 부속서 검토 결과와 업계 협의 등을 거쳐 지상조업서비스에 대해서는 양허를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137) 항공기 수리 및 유지 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컴퓨터예약시스템(CRS: Computer Reservation System)서비스 등 항공운송서비스의 부속서(Annex on Air Transport Services) 제 3항에 명시된 세 가지 서비스 분야를 가리킨다.

138) WTO(2011a), p. 3, 제12항 참고.

18. 물류서비스

물류서비스(logistics) 분야의 복수적 양허 요청서의 주요 내용은 [표 3-18]에 정리되어 있다.

표 3-18. 물류서비스 분야 복수적 양허 요청의 주요 내용				
조정국 (coordinator)	동조국 (co-sponsors)	범위	주요 양허 요청 내용	
홍콩	호주, 칠레, 홍콩,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대만	핵심 화물 물류서비스 W/120 11.H. a. 화물주선서비스 b. 보관창고서비스 c. 운송대리서비스 d. 기타보조서비스	Mode 1 Mode 2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허 (신규 또는 개선)
			Mode 3	실질적 제한 없이 양허 (신규 또는 개선)
		화물물류 관련서비스 (1) 화물운송서비스 11. A. 해운서비스 11. B. 내항운송서비스 11. C. 항공운송서비스 11.E. 철도운송서비스 11.F. 도로운송서비스	Mode 1 Mode 2	신규 또는 개선된 양허
			Mode 3	실질적 제한 없이 양허 (신규 또는 개선)
		(2) 기타 물류관련서비스 1.A.e. 엔지니어링 1.A.f. 통합엔지니어링 1.F.e. 기술시험분석 2.A/B 우편/쿠리어 (특급배달 포함) 4.A. 커미션대리인 4.B. 도매서비스 4.C. 소매서비스 - 기타 지원서비스	Mode 1 Mode 2	적절한 수준에서 신규 또는 개선된 양허
			Mode 3	실질적 제한 없이 양허 (신규 또는 개선)
		비핵심 물류서비스: 컴퓨터 관련 서비스, 포장 경영컨설팅 및 관련 서비스		실행 가능한(practicable) 양허

자료: WTO(2010), p. 3, 제21항; ESF(2006).

물류서비스는 당초 주도국들이 운송 관련 서비스의 양허와 관련하여 미국을 끌어들이려는 미끼를 던지기 위해 프렌즈 그룹을 창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도국들의 예상과는 달리 미국이 운송 관련 서비스에 대한 양허를 여전히 하지 않자, 주변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화물취급(cargo handling), 보관 및 창고서비스(storage & warehouse services), 해운대리서비스(maritime agency services), 화물주선서비스(freight forwarding services) 등이 핵심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해운서비스에서 이들 서비스의 양허를 한 것 이외에는 11.H 모든 형태의 운송보조서비스(services auxiliary to all modes of transport)의 항만 이외에서의 보관창고서비스와 11.I 기타 운송서비스(other transport services)의 결합운송서비스(combined transport services)에서 철도운송주선업(Freight forwarding for rail transport)¹³⁹⁾만 양허를 하였다.

이와 관련해 스위스는 양자협상 시 해운서비스에서의 이들 서비스의 양허를 11.H에도 중복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화물운송대리업이나 복합운송주선업 등은 현재 소규모 업체가 난립해 있어, 해운 이외 분야의 양허를 위해서는 국내 이해관계자 설득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국내적으로 이미 개방은 되어 있으나, 정부에서 양허를 검토한다고 하면 언론의 과장 보도¹⁴⁰⁾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 과잉 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통관서비스의 경우에는 해운서비스에서 이미 양허가 되어 있으나, 지난 2005년 5월 수정양허안 제출을 대비하여 검토할 때 관세사협회에서 UR 당시 양허표 작성 총괄을 맡았던 재정경제부에서 관련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관세사는 자격 요건이 필요한 것으로서 이는

139) 철도운송주선업(Freight Forwarding for Rail Transport)이란 철도운송의 말단에서 수행되는 보조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컨테이너 화물수집, 철도상의 화물운송을 위해 한국철도공사(Korea Railroad Corporation)와의 계약 수행, 화물의 선적/하역(loading/unloading)과 배달(delivery) 등을 포함한다(WTO 2005b, p. 65).

140) 이미 개방되어 있는 분야의 양허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신규로 개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모호하게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규제 사항이므로 ‘투명성 목적을 위한 노트’로 기재하는 대안을 제시하였고, 관세사협회에서는 이는 오히려 관세사 자격 요건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 양허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문제 제기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단 해당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만이 회사(주로 합명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다른 전문직과는 달리 통관서비스 업무의 경우 물류회사가 국내 관세사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양허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19. 에너지서비스

에너지서비스 분야의 복수적 양허 요청서의 주요 내용은 [표 3-19]에 정리되어 있다.

에너지서비스 분야에서는 복수적 양허 요청국들이 특히 Mode 3 관련 제한, 그중에서도 외국인지분 제한의 철폐와 관련하여 개선을 추구하는데, 2011년 현재 복수적 양허 요청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에 실망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¹⁴¹⁾

에너지서비스에 관해서는 우선 분류 문제는 크게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이는 W/120, CPC, 또는 인도네시아와 같이 고유한 분류를 쓰는 것에 관계없이 결국은 관심을 두는 분야나 서비스가 포함되는지가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확인만 하면 되지 왜 그런 분류를 쓰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회원국 간에 공통적인 분류가 없는 상황에서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다.

141) WTO(2011c), p. 5, 제26항 참고.

표 3-19. 에너지서비스 분야 복수적 양허 요청의 주요 내용

조정국 (coordinator)	동조국 (co-sponsors)	범위		주요 양허 요청 내용	
		W/120	분야		
EU	호주, 캐나다, EU,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미국, 대만	1.A.e-f	엔지니어링 및 통합엔지니어링	Mode 1	MA 제한의 상당한 감축 기존 상업적 주재 요건의 철폐
		1.F.c-d	경영컨설팅	Mode 2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완전 양허
		1.F.e	기술시험분석	Mode 3	외국인 자본 제한의 철폐 또는 상당한 감축, 합작 또는 합작 운영 요건의 상당한 철폐, ENT의 철폐 또는 상당한 감축, 차별적인 면허 절차의 철폐
		1.F.h	광업부수서비스		
		1.F.m	관련 과학기술컨설팅		
		1.F.n	(금속제품, 기계 및 기구, 전기기계 등의) 유지 및 수리서비스	Mode 4	계약서비스공급자(CSS)와 독립전문가(IP)와 관련 신규 또는 양허 개선 - ENT의 철폐 또는 상당한 감축 - 규정된 체제기간과 갱신 가능성의 명시 완전 양허
		3.B	토목건설 (파이프라인 등)		기업내전근자(ICT)와 사업상방문자(BV)와 관련 신규 또는 양허 개선 - ENT의 철폐 또는 상당한 감축 - 규정된 체제기간과 갱신 가능성의 명시
		3.E	건설, 빌당해체 등을 위한 기구 관련 임대 서비스		
		4.B	고체, 액체, 기체 연료 도매서비스		
		4.C	연료, 가스, 석탄, 목재 등의 소매서비스		

자료: WTO(2010), p. 7, 제49항; ESF(2006).

한편 ‘에너지유통부수서비스(services incidental to energy distribution)’는 캐나다가 2006년 복수적 협상 때 자국의 경우 전력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어서 양허를 하기 곤란하다고 밝힌 분야이다. 다른 분야에는 전력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별도로 명시한다고 해도, 이 분야에서 양허를 하면 양쪽에서 상충적인 문제가 생기고, 결국 분쟁해결절차에 제소될 경우에 패널(panel)이 어떻게 판

정할지는 아무도 단정 지어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가 동 서비스에 대해 양허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경우 전력은 포함되지 않는 것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전력 네트워크는 제외된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GATS 양허표상 가스연료제품도소매업에 기재된 ENT는 그 이면에 사실상 한국가스공사의 도매 판매 관련 독점 문제가 있는 사항이다. 현재까지는 주요국의 상업적 이익 유무가 불분명하여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는 회원국이 없었으나, 향후 협상이 재개될 경우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이것의 철폐를 요구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2004년 7월 POSCO가 인도네시아로부터 자가소비용 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를 독자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허용한 이후 2007년 12월 21일에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하여 천연가스 수출입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¹⁴²⁾ 대형 수요업체에 자가소비용 LNG의 직도입을 점진적으로 허용하여 현재는 SK와 GS칼텍스 등이 직도입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6(자가소비용 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에 의거하여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는 수입한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도록 한 제한은 국내규제 사안으로서 양허안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향후 협상 재개 시 제2차 수정양허안을 제출할 때 교역상대국들이 양허안에 이를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경우에는 ‘투명성 목적을 위한 노트’로 기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142) 단 동법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에서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려면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수급상의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 바와 같이 ENT를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5월에 제출한 수정양허안에서 이러한 ENT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기재한 바 있다.

제4장 산하기구 회의

산하기구(Subsidiary Bodies) 회의는 크게 긴급세이프가드조치(ESM: Emergency Safeguards Measures), 보조금(Subsidies),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관련 규범 제정 작업을 논의하는 규범작업반(WPGR: Working Party on GATS Rules), 양허표 기재 방법상 기술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양허위원회(Committee on Specific Commitments), 금융서비스 분야에 특화되어 건전성 규제 등 기술적인 사안을 논의하는 금융서비스위원회(CTFS: Committee on Trade in Financial Services), 그리고 UR 타결 시 후속이행과제(built-in-agenda)로 남겨둔 것으로 GATS 제6.4조에 따라 규범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국내규제작업반(WPDR: Working Party on Domestic Regulation) 등으로 나누어진다.

1. 규범작업반

가. 긴급세이프가드조치

긴급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 우리 측은 그동안 해당 규범 제정의 바람직함(desirability)과 실행 가능성(feasibility)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미국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GATS 제10조도 협정문에 대한 협상을 개시하라고 하기보다는 비차별적 원칙에 기초하여 ESM에 대한 의문(question) 관련 협상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¹⁴³⁾

그동안 ESM 규범을 제정하자고 주장하던 주요 요구국(demandeur)인 ASEAN 4개국¹⁴⁴⁾이 ESM을 하나의 협상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는데, 결국 2007년 1월 말 WPGR 비공식회의에서 필리핀 측이 설명하였듯이 국내 규제 담당자들에게 위안(comfort)을 주려는 용도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추정된다.¹⁴⁵⁾

따라서 향후 협상이 재개될 경우에는 관계 부처에 ASEAN-4처럼 방어적이고 보호주의적 용도로 ESM의 사용을 검토하여 달라고 요청하기보다는, 우리의 해외직접투자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적으로 우리 무역위원회는 관련 법상 Mode 3도 수입으로 간주한 바 있다. 그런데 이를 근거로 최근 논의하는 것처럼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에 서비스 Mode 3도 포함하면¹⁴⁶⁾ Mode 3상 수입 급증에 대한 피해보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국내 중소기업자에게 보상책 제시로 수입 급증에 대응할 수 있어 방어적 용도로 ESM을 사용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동안 Mode 3를 배제하는 쪽으로 접근했던 이유는 ESM이 이미 양허가 이루어진 분야를 포함하여 전 분야에 걸쳐 적용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경우, 국내

143) GATS 제10조에 “There shall be multilateral negotiations on the question of emergency safeguard measures based on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라고 규정하고 있다.

144)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4개국이고, 싱가포르를 제외한다고 하여 ‘ASEAN-’ 또는 ‘ASEAN-4’라고도 칭한다.

145) 이는 특히 유통 분야의 양허 확대와 관련된 것으로, ASEAN-4가 국내 규제담당자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 선연적 문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146) 2021년 10월 19일에 개정되어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인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1조(목적)에서는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서비스 Mode 3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동법 제6조(무역조정지원 기업의 지정 등)의 제1항 제2호에서는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이나 그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한정한다)의 증가가 제1호에 따른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FTA 상대국의 수입으로 한정하고 있다.

투자유치 정책상 이를 이용할 유인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는 해외투자 진출에 문제가 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하나의 대안으로 새로 양허를 하는 분야에만 ENT를 기재하는 것으로 ESM의 효과를 대신할 수 있다는 뜻에서 2005년 11월에 ENT 관련 제안서를 제출한 것이다.¹⁴⁷⁾ 다만 명시적으로 이를 언급하는 것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당시 ENT 제안서의 제6항과 제7항에서 입증 부담(burden of proof) 문제만을 간략히 언급하였다.¹⁴⁸⁾ 미국도 ESM 제정에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면서, 기존 GATS 틀 내에서 허용하는 방안¹⁴⁹⁾을 사용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향후 DDA 서비스협상이 재개되어 국내 입장을 정해야 한다면 그때는 관계부처 대책회의에 무역위원회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는 논의가 별로 진전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관찰 위주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마무리 단계에서는 절차적 이유로 무역위원회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UR의 후속협상의제(built-in-agenda)로 협상이 진행되던 초창기인 2000년에 당시 우리 측 수석대표가 무역위원회도 포함해 입장을 정하려고 하다가, Mode 3도 ESM 대상에 포함하고 ESM 제정을 지지해야 한다는 무역위원회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었다.

따라서 무역위원회를 포함해 같이 입장을 검토하더라도 향후에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활용하면 굳이 국내시장을 방어할 목적으로 ESM 대상에 Mode 3를 포함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향후 협상이 재개될 경우 주요 요구국인 ASEAN 4개국¹⁵⁰⁾이 새로 양허를 하는 분야에만 ESM을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사실 해외직접투자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ESM이 ENT보다 유리하다. ENT는 일단 기재를 하면

147) WTO(2005m) 참고.

148) 이와 관련해 당시 WTO 사무국의 J 참사관의 조언도 참고하였다.

149) 이는 GATS의 다양한 유연성(flexibility)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50) 앞서 각주 144번 참고.

문제를 제기한 상대국에 입증 부담이 있는 반면에, ESM은 발동한 국가에 입증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Mode 1 및 Mode 2, Mode 4상의 수입 급증을 우리도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기술 발달에 따라 Mode 1 및 Mode 2의 수입에 대한 통제가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¹⁵¹⁾ 분야별 실행 가능성(feasibility)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ESM이 실행 가능한지는 차치하고 오로지 바람직한가(desirable)만 생각해 보자. 2005년 11월 ENT 제안서에 주석을 달았듯이, ESM이 바람직한가는 개별 시장마다 다를 것이고, 이 때문에 자칫하면 이해관계가 고착되어 향후 서비스교역 자유화 협상 라운드에서 삭제하는 것이 무척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해야 한다.¹⁵²⁾

요약하면 ESM과 관련하여 Mode 1 및 Mode 2, Mode 4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Mode 3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적용 기준을 명시하는 ENT가 오히려 당사국의 규제 담당자에게 부담이 적으므로 암묵적 대안으로 검토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주도국들이 국내 정치적 용도로 ESM의 제정을 고집한다면, 새로 양허를 하는 분야에 한해 입증 부담 요건을 엄격히 하는 조건으로 타협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나. 보조금

ESM과는 달리 보조금에 대해서는 GATS 제15조에서 필요한 규범을 제정하도록 지침(mandate)을 제시한다.

“Members recognize that, in certain circumstances, subsidies may have distortive effects on trade in services. **Members shall enter into negotiations with a view to developing the necessary**

151) 대표 사례로 중국의 인터넷 뉴스사이트에 대한 통제를 들 수 있다.

152) WTO(2005m), p. 2, 각주 5번 참고.

multilateral disciplines to avoid such trade-distortive effects. (중략) For the purpose of such negotiations, Members shall exchange information concerning all subsidies related to trade in services that they provide to their domestic service suppliers.”

상기와 같이 보조금의 경우 교역 왜곡의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ESM처럼 바람직함(desirability)과 관련된 논란이 없다. 스위스를 제외하고 대다수 선진국들이 이 주제를 논의하기를 주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의가 부진한 것이다.¹⁵³⁾

또한 서비스 분야 중 교육, 의료, 문화 등 공공성을 지닌 분야에 보조금이 많으므로, 미국을 중심으로 규범 제정을 꺼리는 국가들은 어떤 보조금이 교역을 왜곡하는지 우선 따져 보자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대해 홍콩이 일단 정보교환이라도 해 보자고 주장을 한 바 있다.

우리는 당초 보조금 프렌즈 그룹¹⁵⁴⁾에 속해서 활동하였으나, 2005년 중반 이후부터 프렌즈 그룹 자체가 별로 활동이 없는 상태이다. 우선 정보교환과 관련해 홍콩이 2007년 초에 5개 분야를 개별 회원국이 선택하게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우리는 당시 정보통신부가 반대해서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미국은 2007년 이전에 관광서비스 등 특정 서비스분야에 국한하여 정보교환을 하자는 ‘회의장 문서(Room Document)’ 형태의 비공식 문서를 회람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정보교환에 대비하려면 각 관계부처가 소관 분야의 보조금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하나, 2001~02년 당시 재정경제부 주도로 조사한 이후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정보교환과 맞물려서 논란이 되는 것이 보조금의 정의이다. 이에 대해서는 상품 분야에 대한 보조금상계관세협정(ASCM: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의 정의를 차용하자는 측과 상품 분야의 정

153) 선진국이 개도국보다 훨씬 많은 보조금을 주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154) 주요 요구국(demandeur)은 홍콩과 스위스이다.

의를 서비스 분야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측이 대립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보조금 성격의 규제조치인데, 이를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일부 지역협정에 나와 있듯이¹⁵⁵⁾ 포괄적인 정의를 사용하고, 특정 규제조치에 대해서는 사례별로(case-by-case)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¹⁵⁶⁾ 예컨대 감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낮춰서 많은 환자가 병원을 찾게 해 내과 의사들이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교역 왜곡의 보조금 성격이 약한 반면,¹⁵⁷⁾ 미국의 Jones Act와 같이 국제 해운 분야의 수지를 보전하는 것은 보조금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규범 제정의 방향은 전 분야에 걸쳐 엄격한 규범을 적용하는 ASCM의 소위 ‘신호등 접근방법(traffic-light approach)’¹⁵⁸⁾보다는 농업보조금처럼 분야별 특성을 감안하여 특정 분야(category)를 설정해서 감축 협상을 하는 것이 더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 분야에서 고려하여야 할 점은 서비스협상에서 각 회원국의 양허 포괄 범위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이다. 스위스가 2005년 상반기의 보조금 프렌즈그룹 회의에서 양허를 한 분야에 수출보조금을 금지하자는 제안을 했다가, 오히려 양허에 대해 위축 효과(chilling effect)가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제출조차 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¹⁵⁹⁾

ASCM 방식보다 농업보조금 방식으로 접근하자고 하는 이유는 우선 서비스

155) WTO(2003h) 참고.

156) “The Protocol on Trade in Services to the Australia-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Agreement(ANZCERTA) contains a prohibition on the introduction of new or the expansion of existing “export subsidies, export incentives and other assistance measures having a direct distorting effect on trade” between Member States(Article 11)” 참고(WTO 2003h, p. 3, 제10항).

157) 의료서비스를 개방한다고 해도 비차별적인 한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158) 이는 각 보조금을 교역 왜곡 정도에 따라 금지보조금(적색), 상계가능보조금(황색), 허용보조금(녹색)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159) 이렇게 볼 때 2006년 말경에 OECD 사무국에서 수출보조금에 대해 문서를 작성하게 한 배후국가가 스위스인 것으로 추정된다. EU 측에서 비공식적으로 지난 2007년 1월 협상 시 동 OECD 문서를 저자에게 보여 주면서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

분야의 통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조사가 어렵고, 교육, 의료 등 공공성이 큰 분야는 제외하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UR 당시 WTO 사무국에서 근무하다가 이후 World Bank로 이직한 Aaditya Mattoo는 WPGR의 세 분야 모두에서 그 진전을 부정적으로 보지만, 흑시라도 논의가 진전되어 우리 측 입장을 정해야 한다면 우선 2001~02년에 정리한 보조금 현황을 업데이트해서 분야별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¹⁶⁰⁾ 이를 근거로 하여 2005년에 각 관계 부처에 소관 분야의 보조금 현황을 제출하여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으나 소수의 부처만 회신한 바 있다. 따라서 각 관계 부처에 교역 왜곡 성격의 보조금에 대해 2001~02년에 제출한 자료 이후에 추가되거나 소멸된 부분만 제출하게 하면 그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¹⁶¹⁾

교역 왜곡 성격의 보조금 정의와 관련해 각 관계 부처에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해서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각 관계 부처가 이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주요 국제기구의 연구 분석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¹⁶²⁾

다. 정부조달

정부조달은 GATS 제13조상의 규정들에 대해 유일한 요구국인 EU와 주요 개도국 간에 해석상 격차가 너무 커서 논의의 진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EU는 정부조달 관련 NT, MA에 초점을 두고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들은 제13조 제1항에 의해 MFN과 MA, NT는 제외(carve-out)된다고 반박하는 상황을 되풀이하고 있다.¹⁶³⁾ 반면 제13조 제2항은 서비

160) 저자가 2004년에 WTO 사무국 주최로 개최된 Mode 4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Aaditya Mattoo와 의견교환을 할 기회가 있었다.

161) 이에 대해서는 특히 시청각서비스 분야와 해운서비스 분야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62) WTO(2003i) 참고.

163) GATS 제13조(정부조달)의 제1항은 다음과 같다.

1. Articles II, XVI and XVII shall not apply to laws, regulations or requirements governing the procurement by governmental agencies of services purchased for governmental

스분야의 정부조달에 대해 다자간 협상을 하도록 지침(mandate)을 제시하고 있어, 결국 MFN, NT, MA, 관련 협상의 범위가 문제가 될 것이다.¹⁶⁴⁾

추측하건대 서비스 분야별 시장접근에 관한 양허가 충분히 이루어져 더는 협상의 여지가 없을 때에야, 정부조달 관련 NT, MA 등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생길 것이다.¹⁶⁵⁾ 다만 복수국간 협정인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이 WTO의 전 회원국으로 확대되기 전에는 MFN의 적용은 GPA 때문에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 협상이 재개되어 서비스 분야의 정부조달 규범 제정 논의도 진전될 경우 EU가 WTO(2004d)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절차적 규칙(procedural rules)에 국한하여 규범을 제정하는 방안은 고려할 수 있다.¹⁶⁶⁾

결국 응찰 절차(bidding procedure) 등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를 해소해야 정부조달 시장의 교역이 활성화되므로, 주요 경제통합 협정(EIA: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상의 정부조달 규범 중 응찰(bidding)과 같은 절차적 측면의 조항을 참고하여 이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EU가 제안한 바와 같이 정부조달을 AC란에 기재하는 것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AC란에 기재한다면 EU 측이 제5열(5th column)에 기재하도록 제안한 바와 같이 주로 한겟값(threshold)이나 모드별 적용(modal application) 등을 기재해야 할 것이다.¹⁶⁷⁾ 그러나 GPA의 조항과 같이 응찰 절차(bidding procedure) 등 투명성 및 절차적 측면 같은 다른 사항에 대한 규범을 제정해야 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불분명하다.

purposes and not with a view to commercial resale or with a view to use in the supply of services for commercial sale.

164) GATS 제13조 제2항은 다음과 같다.

2. There shall be multilateral negotiations on government procurement in services under this Agreement within two years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

165) 개도국 협상가들도 할 일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그때는 EU의 제안을 검토할 유인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166) WTO(2004d), p. 6, 제26~27항 참고.

167) WTO(2004d) 참고.

이뿐만 아니라 AC란은 주로 공정무역 관행(fair trade practice)¹⁶⁸⁾이나 자격인정 관련 문제를 다루는 통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정부조달까지 포함하면 AC란이 너무 복잡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GATS에서 다자적으로 정부조달 시장을 자유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것은 복수국간 협정인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 비해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극단적으로 협상 담당자의 성과를 평가한다는 목적 외에는 서비스교역상 실질적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조달은 복수로, 또는 양자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이 아직은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칠레 FTA에서는 우리 측도 모든 서비스 분야가 포함되었다는 사무국 문서의 지적을 참고해야 한다.¹⁶⁹⁾

2. 양허위원회

양허위원회에서 신구양허표의 효력에 대한 논의를 최대 쟁점으로 다루었으나, 우리의 경우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않고, 주요국의 논의사항을 관찰해 왔다. 동 문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협상이 재개되어 논의가 활발해질 경우에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여 입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 해운의 항만서비스, 유통의 석유 도소매 관련 서비스 등과 관련한 기술적 사항은 여타 회원국의 의견을 참고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하면서 우리 입장을 조율해 나가면 될 것이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2005년 ENT 제안서와 같이 우리 측 양허안의 E기재사항에 대해 소개하는 형태로 우리 측 입장을 개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168) 우편/커리어 및 해운/항만서비스 등의 경쟁정책 관련 사항.

169) "The Republic of Korea-Chile Agreement provides that all service sectors referred to in the Services Sectoral Classification List(MTN.GNS/W/120) are covered," WTO(2004i), 제 4항 참고.

3. 금융서비스위원회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는 필리핀의 제4의정서 비준 문제와 앤티가 바부다의 제안서를 논의하였다. 이 중 앤티가 바부다가 미국에 제기한 사항이 결국에는 분쟁해결절차에 제소되어 원고인 앤티가 바부다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본래 목적이 기술적 사항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건전성 규제 및 여타 양허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의 제기 여부 및 수준을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국내규제작업반

GATS 제6.4조에 의거하여 UR 이후 후속 과제로 제정하기로 한 국내규제 규범은 GATS 제16조(시장접근: MA) 및 제17조(내국민대우: NT) 관련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된 이후 서비스교역 및 서비스협상의 핵심 사안이 될 것이다. 회계, 통신 분야에서는 자체적으로 진전된 규범이 일부 있으나, 현재는 모든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 분야에 걸친 규범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 제6.4조상의 지침(mandate)과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의 지침에 따라 DDA 타결 시까지 규범을 제정해야 하나, Mode 4 등 민감한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규제 담당자들의 규제 권한 축소에 대한 우려로 규범 제정 수준의 윤곽이 불투명한 상황이다.¹⁷⁰⁾

국내규제 규범의 주요 요구국(demandeur)으로서 인도가 Mode 4 관련 자격인정 장벽의 완화에 대해 절차적 측면뿐만 아니라 자격 및 허가요건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의 규범을 주장하면서 제일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고, 홍콩 및 우

170) 2021년에 복수국간 협정으로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이 타결되었으나, 그 주요 내용과 평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과제로 추진하고자 한다.

리나라 등 홍콩제안서 공동제안국은 서비스교역의 원활화라는 원칙적 측면에서 타협 가능한 적절한 수준의 규범제정을 지지하고 있다. 당초 홍콩제안서 공동제안국 간 최종 결과물에 대한 목표 수준은 자격 및 허가 요건에서는 인도제안서와 유사한 현 제안서보다는 낮아지고, 기술표준에서도 일부 낮아질 것을 예상하였으나, 절차 면에서는 필요성 심사 또는 이와 유사한 개념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¹⁷¹⁾

주요 반대국인 브라질은 원래 농업에 관심이 있고, 서비스협상의 진전을 꺼리는 국가이다. 따라서 국내규제 규범에서도 규제권한의 보장을 핑계로 서비스교역의 자유화 확대를 주저하는 입장이어서 낮은 수준의 규범을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한편 미국의 경우 9.11 이후 Mode 4 관련 의회의 정치적 압력과 도박(gambling) 관련 분쟁이 있었고, 이후 주 정부의 압력이 고조되는 등 이러한 복합적 요인이 규제 담당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반대하여 필요성 심사 개념의 도입을 반대하였고, 대신 자국 다국적기업은 사전 코멘트(prior comment)를 포함한 투명성 규범의 확대로 접근하려는 입장을 취하였다.

홍콩제안서 공동제안국인 우리는 공동제안국 간에 공조가 필요하고, 절차적 측면에서 필요성 심사를 도입하려는 입장이어서 캐나다와 같이 중소기업체 중심의 수출 국가들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이나 브라질이 주장하는 수준으로 규범의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질 경우, 차라리 규범 제정을 차후 협상 라운드로 미루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홍콩 각료회의의 지침에 이번 라운드인 DDA 협상 타결 시까지 규범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강력한 요구국인 인도도 낮은 수준으로 타협하느니 현 GATS 제 6.5조의 잠정 규범을 적용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2007년 1월에 열린 비공식회의에서 언급한 바 있다.

171) 이는 홍콩 대표와 비공식 협의 시 논의한 내용이다.

제5장 양자협상

양자협상(Bilaterals)은 회원국 양자간에 서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전통적인 양허 요청 및 양허(R/O: Request and Offer) 방법에 의존하여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들을 대상으로는 우리 측에서 먼저 양자협상을 제안하지 않고, 상대국에서 요청하면 수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양자협상의 내용과 관련해 전문 이외에는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저자가 그동안 주요국과의 양자협상 시 기록한 메모에 의존하여 주요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¹⁷²⁾

1. 미국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를 상대로 전 분야에 걸쳐 아무런 제한 없이¹⁷³⁾ 양허를 하라고 1차 양허 요청서(initial request)를 제출하였는데, 이런 요청을 받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다소 성의가 없다는 인상을 받았었다. 그 후 관심 있는 분야를 우선순위(priority)로 정하고 그것에 집중해 양허 요청을 해 달라고 우리 측이 요구하자, 2005년 하반기에 열린 양자협상에서 8개 분야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고 구두로 밝혔다.¹⁷⁴⁾

172) 단 주요 회원국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앞서 제2장의 [표 2-1] 참고. 주요 분야별 양허 요청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최낙균 외(2002), pp. 77~88 참고.

173)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 분야에 '제한 없음(None)'이라고 기재할 것을 요청하였다.

174) 이들 8개 분야는 법률서비스, 컴퓨터관련서비스, 통신서비스, 특급배달서비스, 환경서비스, 금융서비스, 에너지서비스, 시청각서비스 등이다[미국은 우편/쿠리어 대신에 특급배달서비스(Express Delivery Service)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별도로 양허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2006년 6월 한·미 FTA 제1차 공식협상이 개최된 이후 WTO의 DDA 서비스협상 차원 양자협상에서는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와 관련한 양허 확대 요청은 자제하면서, 국내규제 규범과 관련한 입장을 우리 측이 완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즉 미국 측은 한·미 FTA 협상의 우리 측 서비스 분과에 DDA 서비스협상에서 우리가 취하는 국내규제 규범과 관련한 입장을 한·미 FTA에서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입장을 국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한·미 FTA 협상의 우리 측 서비스 분과를 설득하여 달라는 요청이었다.¹⁷⁵⁾

향후 DDA 서비스협상이 재개될 경우 양허 확대와 관련한 미국 측 관심사항 대부분은 양자적 차원의 한·미 FTA 협정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다자적 차원에서 반영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EU

EU와 양자협상 때도 관심 사항은 미국과 유사하였는데, 그중에서도 EU 측은 특히 법률서비스, 통신서비스, 우편·쿠리어서비스, 환경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양허 확대를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영국이 관심을 가졌던 뉴스제공업 분야에도 양허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우리 측은 뉴스제공업이 포괄적 의미에서 문화서비스에 들어가므로 양허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¹⁷⁶⁾

175) 당시 한·미 FTA 협상의 우리 측 서비스 분과장은 재정경제부 소속이었고, 외교통상부에 소속된 저자와는 아무런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 사후에 DDA 서비스협상에서 우리가 취하던 입장, 특히 절차적 측면에서 필요성 심사를 도입하지는 주장이 한·미 FTA 협정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아 한·미 FTA 협상의 우리 측 서비스 분과장이 이를 하나의 협상 레버리지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176) 여기에는 당시 EU 내의 시민단체들이 문화서비스에 대해 “양허를 요청하지도 말고, 양허를 하지도 말자”라는 구호를 사용하며 문화서비스 분야의 어떠한 논의도 반대하고 있고, 협상 담당자들에게도 압력을 넣는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한 측면이 있다.

2007년 5월 한·EU FTA의 제1차 공식협상이 개시되기 이전까지 서비스협상 회기 때마다 양자협상을 개최하는 등 EU와도 협상에 활발하게 임하였다.¹⁷⁷⁾

3. 일본

일본과 정치적으로 관계가 불편하여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를 분리하여 다루고자 하기 때문에 WTO의 DDA 서비스협상 차원에서는 서로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하였다. 심지어 양자협상도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양허 확대를 공격하고 이를 방어하기보다는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우리의 최대 관심 분야인 5대 인프라 서비스 분야에 대한 입장이 같아서, 이에 관한 여타 회원국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¹⁷⁸⁾

4. 중국

중국을 대상으로는 그동안 중국이 가입 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는지 검토하느라 양자협상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았으나, 향후 협상이 재개될 경우를 대비하여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측 관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 자국의 체제 유지 측면에서 시청각서비스 분야에 대해 특히 민감하므로 우리 측이 동 분야의 양허 확대 요청 시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고,¹⁷⁹⁾ 중국 측이 우리에게 양허를 요청한 한의사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 공

177) 저자가 2007년 2월 초에 있었던 협상을 마지막으로 DDA 서비스협상 수석대표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한·EU FTA의 제1차 공식협상이 개시된 2007년 5월 이후에 DDA 서비스협상에서 이루어진 EU와 양자협상은 인지하지 못하였다.

178) 정보교환도 공식 회의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협상 회기마다 함께 한 오찬이나 카페테리아의 티타임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급과잉 및 수익률 저하를 강조하였고 침술사에 대한 국제표준의 미비를 지적한 바 있다.

5. 기타

ASEAN의 경우 한·ASEAN FTA뿐만 아니라 한·싱가포르 FTA 및 한·베트남 FTA가 이미 발효 중이고,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필리핀 FTA 등이 타결되었으며, 한·말레이시아 FTA도 현재 협상 중이다. 따라서 DDA 서비스협상에서 별도의 양자협상이 필요한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¹⁸⁰⁾

한편 중남미국가를 대상으로 지리적 여건상 적극적인 양자협상을 진행하지 않았다. 단 향후 DDA 협상이 재개될 경우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해운 같은 우리 측 관심 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양자협상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179) 중국은 WTO 가입 당시 시청각서비스 분야에 합작요건을 두고, 비디오 유통서비스와 음반 녹음 및 유통서비스 관련 양허를 한 바 있고, 지분의 49%라는 상한을 두고 영화관 건축 및 리노베이션 서비스 관련 양허를 하였다. 한편 AC란에는 연간 20편 내에서 영화 수입을 허용한다고 기재하였다. WTO 2003f, p. 21 참고.

180) 2007년 2월 초에 열렸던 양자협상에서는 본격적인 FTA 협상 이전에 기존 양허 요청(request)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

본 장에서는 DDA 서비스협상이 재개될 경우를 대비하여 제2차 수정양허안의 작성 방향을 제시하고,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경우 DDA 서비스협상 초기와는 달리 각 분야의 서비스산업이 상당히 발전한 상태이고 이미 선진국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선언하였으므로, 전향적으로 제2차 수정양허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1. 제2차 수정양허안 작성 방향

가. 수평적 양허

수평적 양허에서는 우선 2005년 5월에 제출한 수정양허안의 Mode 4에 새로 계약서비스공급자(CSS)를 포함하면서 수량적 상한(numerical ceiling)을 도입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제3장 제4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전문직 인력수급 정책상 수량적 상한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입장이므로, 배상책임보험 활성화 여부와 국내 자격인정 체계의 정착 문제와 연계하여 동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립전문가(IP) 범주를 새로 포함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주로 전문직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활성화 여부, 국내 자격인정 체계 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 분야로 수정양허안의 CSS 범주에 포함된 분야들인 건축설계서비스와 자동차설계디자인 등 5개 분야의 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ing)

등 6개 전문직 서비스 분야와 경영컨설팅서비스, 컴퓨터관련서비스, 통번역서비스를 함께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¹⁸¹⁾ 이 경우 역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입장에 따라 국내 전문직 인력수급 정책상 수량적 상한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분야별 양허

1) 법률서비스

미국 및 EU와 FTA 차원에서 이루어진 외국법자문사역(FLC: Foreign Legal Consultancy)에 대한 개방 약속(국내 법무법인과외의 합작 및 국내 변호사의 고용 관련)을 다자 차원의 DDA에 반영하는 방안을 살펴보면 국내 법률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이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또한 현재 법률서비스 분야 양허안의 Mode 4에 기재한 상업적 주재 요건은 국내에서 FLC가 활동하려면 상업적 주재를 설립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평적 양허의 Mode 4 분야에서 상업적 주재의 요건이 없는 CSS 또는 IP에 FLC를 포함하지 않으면, 이러한 상업적 주재 요건은 중복기재 사항이 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수의사 서비스

2003년 3월에 제출한 1차 양허안에서 우리나라는 새로 포함된 수의사 서비스 분야에서 Mode 4의 내국민대우 제한란에 'Unbound'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수의사 서비스의 Mode 4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른 분야에서와 같이 '수평적 조치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181) 이에 대한 더 상세한 논의는 김준동 외(2008), pp. 275~294 참고.

약속 없음(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으로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우편/쿠리어/특급배달서비스

이 분야에서는 특급배달서비스의 처리가 관건이다. 사실상 쿠리어서비스와 특급배달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동일하므로, 미국이 요청하는 바와 같이 이를 명시적으로 양허 범위에 포함해 양허를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EU의 경우 AC란에 반경쟁적 행위의 금지를 기재하기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의 회계분리 등 국내 제도개혁 상황의 진전에 맞추어 대응이 필요하다.

4) 통신서비스

앞서 제3장 제8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향후 DDA 서비스협상이 재개될 경우 협상의 최종단계에서 미국이나 EU 등이 양자적 FTA에서 약속한 것을 여타 개도국에 전시효과 내지 유도책으로 이용하기 위해 DDA 서비스협상에서도 다자적 차원으로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즉 기간통신서비스(facilities-based services) 분야에서 간접투자(Indirect ownership)에 대해 외국인투자지분 80% 상한(대주주의 경우 15%)의 철폐를 반영하도록 요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 기간통신 사업자인 KT를 제외하는 조건을 붙여서 이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시청각서비스

시청각서비스 분야에서 국내적으로 홍보 및 광고서비스(CPC 96111), 영화 및 비디오 제작과 배급 관련 기타서비스(96114)가 이미 개방된 상태이고, 영화

제작서비스(96112), 영화배급서비스(96113)의 케이블티브이(CATV) 관련 제외도 폐지된 상태이다. 따라서 향후 제2차 수정양허안 제출 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영화상영업의 경우 국내에 개방된 상태이나, 총 상영시간의 20%에 대한 콘텐츠 규제(screening time 관련 제한, 즉 스크린쿼터)가 존재한다. 향후 DDA 서비스협상이 재개되어 동 업종에 양허를 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을 받을 경우, 비록 국내 영화산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국내 영화계와 시민단체에 하나의 상징적인 조치로서 20%의 스크린쿼터는 존치하여 양허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다만 스크린쿼터가 멕시코의 양허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내국민대우(NT: National Treatment) 관련 제한인지 국내규제(DR: Domestic Regulation) 관련 사항인지가 불명확한 상태이다. 이러한 스크린쿼터를 양허표에 기재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NT란에 기재를 한다면 지속적으로 철폐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이행의무 차원에서 국내규제의 하나로서 '투명성 목적을 위한 노트'로 기재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

6) 건설서비스

우리의 경우 건설서비스에서 일반 계약업자(general contractors)에게 적용되던 하도급의무제가 2008년도에 철폐되어, 이를 제2차 수정양허안에 반영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쟁점 사항이 없다.

7) 유통서비스

유통서비스 분야에서는 중고차도소매업과 가스연료제품도소매업의 ENT 기재사항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중고차도소매업과 가스연료제품도소매업의 ENT 주요 기준을 분리하여 기재하되, GATS 제6.4조 관련

국내 규제적 사항은 구분하여 제외하고 거시경제 차원에서 수급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중 가스연료제품도소매업에 기재된 ENT는 그 이면에 사실상 과거 한국 가스공사의 도매판매 관련 독점문제가 있다. 앞서 제3장 제19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협상 재개 시 제2차 수정양허안을 제출할 때 교역상대국들이 현재 독점이 해제된 것을 양허안에 반영하기를 강력히 요청할 경우 ‘투명성 목적을 위한 노트’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교육서비스

기타교육 분야가 1차 양허안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초중등 학원서비스가 초중등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특수한 사정 때문이다. 즉 이미 국내에 개방되어 있으나, 양허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면 전교조 등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분야에서는 주요 교역상대국이 관심 있는 테스트서비스, 어학교육서비스, 무술교육서비스 등 특정 분야를 제한해서 열거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9) 환경서비스

앞서 제3장 제14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서비스 분야에서 향후 제2차 수정양허안 작성 시 기본입장은 공공부문 서비스를 양허협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며, 이를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EU의 양허표처럼 ‘contracted by private industry’라고 하는 민간 산업으로 계약된 경우만 양허 범위로 국한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병존하는 서비스(예: 폐기물, 폐수 서비스)의 경우, 양허 범위에서 공공부문을 제외함으로써 이중장치를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위생 및 유사서비스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양허 범위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

반면 토양오염복원업의 경우 하드웨어 관련 복원 부문은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국내 고용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이고, 선진 기술 이전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더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양허안에 반영하는 입장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컨설팅 부문의 경우도 국내 환경컨설팅 관련 법제에서 외국 기업의 국내시장 진출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서비스의 양허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금융서비스

우리 측은 2003년 3월 1차 양허안 제출 시 금융서비스 분야의 건전성 규제 사항들을 향후 삭제할 계획을 기재한 바 있으나, 2005년 5월 수정양허안 제출 시 이러한 계획을 철회하였다. 여기에는 주요 선진국들이 우리 측 기재 사항인 6개 항목 모두가 건전성 규제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으나, 우리 측이 다소 성급하게 대응한 점도 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들 조치들을 완전히 삭제하는 대신에, '투명성 목적을 위한 노트'로 대체하여 기재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수 있다.

11) 항공운송서비스

현재 요청국들이 양허를 요구하는 업종들 중에서 항공운송서비스 부속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세 가지 서비스 외에 공항운영업과 지상조업서비스를 살펴보면, 우리는 공항운영업을 아직 민간에 개방하지 않았지만 지상조업서비스는 이미 개방되어 있으므로, 항공운송서비스 부속서 검토결과 분석과 관련 업계와의 협의 등을 거쳐 지상조업서비스에 대해서는 양허를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

본 절에서는 협상 재개 시 제2차 수정양허안 작성 방향 외에 우리 측이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사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MFN 면제 조치

MFN 의무는 WTO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 중의 하나이고, GATS에서 그에 대한 면제는 「MFN 면제 조치에 관한 부속서」 제6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10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현재 전체 회원국에서 약 400여 개의 MFN 면제조치가 유지되고 있고, 복수적 협상의 양허 요청서는 38개 회원국을 상대로 총 165개의 특정 MFN 면제조치의 철폐를 요구하였다.

우리 측은 UR 때 유일한 MFN 면제 조치로 항공서비스 분야에서 컴퓨터예약시스템 관련 조치를 기재하였는데, 2003년 3월 말에 제출한 제1차 양허안에서 이를 삭제한 상태이므로, MFN 면제 조치에 관한 한 어느 회원국보다도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협상, 복수적 협상, 다자간 특별 세션 등 협상의 방식 또는 형태를 막론하고 우리 측은 MFN 면제 조치의 철폐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특히 우리 측에 하는 공세적인 요구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요 선진국인 미국의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상호주의에 기반한 면제 조치나, EU의 시청각서비스 분야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면제 조치에 대해서는 철폐를 요구함으로써 협상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건축설계서비스 분야의 자격인정 관련 AC

건축설계서비스 분야의 우리 측 UR 양허표에는 AC란에 한국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받은 건축설계사와 공동계약을 통해 외국의 건축설계사의 서비스 공급이 허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자격의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지 않고도 외국 건축설계사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로서 다른 회원국에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이는 캐나다 측이 복수적 협상에서 자국의 규제상황을 설명할 때 자국에서도 실제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한 사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요국을 상대로 우리 측 AC란에 기재한 자격 요건의 인정 관련 사항을 양허표에 반영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5대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 분야 양허 요청

우리 측은 WTO 서비스협상이 UR의 후속 협상의제로 개시되던 2000년에 협상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통신, 건설, 유통, 금융, 해운 등 5개 분야에 중점을 두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¹⁸²⁾

이 5개 서비스 분야를 제시한 논거로, 이들을 다른 서비스 분야나 제조업에 투입하여 생산요소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사용하는 분야의 생산성이 제고되는 소위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서비스로 대별된다는 점을 들었다. 처음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만 해도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회원국들이 차용함으로써 통용되는 개념이 되었다.

따라서 동남아 및 중남미 등 여타 개도국들과 양자협상 시 동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의 양허를 중점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남아 회원국의 경우 소매서비스의 양허에 극히 유보적이므로, 우리의 소매서비스 자유화 경험을 소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182) WTO(2000) 참고.

참고문헌

[국문자료]

- 강상인. 2022. 「환경서비스 분야 복수적 request의 분석/평가 및 향후 우리 측 수정 양허안 작성 방향」. 환경서비스 분야 전문가 간담회 발제자료. (4월 20일)
- 김준동, 강준구, 이규용, 허재준, 이승렬, 박성재, 오계택, 노용진, 주무현. 2012. 『DDA 협상 지연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12-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준동, 김종일, 강준구. 2003.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적응 지원정책』. 정책연구 03-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준동, 박순찬, 고준성, 구문모. 2002. 『DDA 서비스협상의 분야별 주요 쟁점 및 정책 대응방향: 법무·시청각·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경제사회연구회 소관기관 WTO협동연구시리즈 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준동, 서진교, 송백훈, 안덕근. 2008. 『서비스자유화 협상의 Mode 4 관련 대응방안 연구: 독립전문가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26-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준동, 정영호, 최병호, 안덕선. 2003. 『DDA 서비스협상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쟁점 및 정책과제』. 경제사회연구회 소관기관 WTO협동연구시리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서진교, 송백훈, 김준동, 송영관, 성한경, 한혜정, 정지원, 조미진, 임혜준, 윤창인, 박지현. 2007. 『DDA 협상의 전개과정과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시사점』. 연구보고서 07-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낙균, 송유철, 김준동, 강문성, 박순찬, 노재봉, 윤미경. 2002. 『DDA협상 총점검 - 2002』. 경제사회연구회 소관기관 WTO협동연구시리즈 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영문자료]

- Croome, John. 1999. *Reshaping the World Trading System: A History of the*

- Uruguay Round*. The Hague, London/Boston: Kluwer Law International.
- Gari, Gabriel. 2016. "Services Negotiations: Where Have We Been and Where Are We Heading?" Pierre Sauvé and Martin Roy eds. *Research Handbook on Trade in Services*. Edward Elgar, MA: Cheltenham, UK·Northampton.
- Kim, June Dong and Jong-Il Kim. 2000. "Korea's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its Impacts." A room document written in preparation for the assessment of trade in services to be addressed at the special session of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Financially supported by Kore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eptember)
- Leal-Arcas, Rafael. 2006. "The Death of the Doha Round: What Next for Services Trade?" bepress Legal Series Working Paper 1760. bepress Legal Repository.
- Nielson, J. and D. Taglioni. 2004. "Services Trade Liberalisation: Identifying Opportunities and Gains." OECD Trade Policy Papers No. 1. Paris: OECD Publishing.
- UNCTAD. 2006. "Trade in Services and Development Implications - Note by the UNCTAD Secretariat." TD/B/COM.1/77. (January 16)

[WTO 문건]

- WTO. 2000. "Communication from Korea: Proposals on the Negotiating Guidelines and Procedures." S/CSS/W/14. (November 29)
- _____. 2001a. "Guidelines for the Scheduling of Specific Commitments under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Adopted by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on 23 March 2001." S/L/92. (March 28)
- _____. 2001b.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the Negotiations on Trade in Services." S/L/93. (March 29)
- _____. 2001c. "Ministerial Declaration - Adopted on 14 November 2001." WT/MIN(01)/DEC/1. (November 20)
- _____. 2002a. "Communication from MERCOSUR - Economic Needs Test." S/CSS/W/139. (March 20)

- _____. 2002b. "Report of the Meeting Held on 19-22 March 2002 - Note by the Secretariat." TN/S/M/1. (June 5)
- _____. 2002c. "Communication from Cuba, Dominican Republic, Kenya, Nigeria, Pakistan, Senegal and Zambia - Assessment of Trade in Services." TN/S/W/3. (June 10)
- _____. 2002d. "Report of the Meeting Held on 5 and 6 June 2002 - Note by the Secretariat." TN/S/M/2. (July 10)
- _____. 2002e. "Communication from Thailand - Assessment of Trade in Services." TN/S/W/4. (July 22)
- _____. 2002f. "Report of the Meeting Held on 23 July 2002 - Note by the Secretariat." TN/S/M/3. (September 17)
- _____. 2002g.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 Small and Medium-Sized Services Enterprises." TN/S/W/5. (October 1)
- _____. 2002h. "Communication from Bolivia, Barbados, Columbia, Cuba, Ecuador, Nicaragua, Peru and Trinidad and Toobago - Implementation of Paragraph 15 of the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the Negotiation on Trade in Services (S/L/93)." TN/S/W/7. (October 28)
- _____. 2002i. "Communication from Peoples' Republic of China - Assessment of Trade in Services." TN/S/W/9. (December 19)
- _____. 2003a. "Report of the Meeting Held on 9 December 2002 - 13 January 2003 - Note by the Secretariat." TN/S/M/5. (February 21)
- _____. 2003b.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 An Assessment of Services Trade and Libera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Developing Economies." TN/S/W/12. (March 31)
- _____. 2003c. "Report of the Meeting Held on 3-6 March 2006." TN/S/M/6. (April 25)
- _____. 2003d. "Communication from Malaysia - Challeng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TN/S/W/17. S/FIN/W/28. (July 30)
- _____. 2003e. "Modalities for the Special Treatment for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in the Negotiations on Trade in Services - Adopted by the Special Session of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on 3 September 2003." TN/S/13. (September 5)
- _____. 2003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Initial Offer." TN/S/O/CHN. (September 15)

- _____. 2003g. "Report of the Meeting Held on 4 and 10 July and 3 September 2003 – Note by the Secretariat." TN/S/M/8. (September 29)
- _____. 2003h. "Overview of Subsidy Disciplines Relating to Trade in Services in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s – Note by the Secretariat." S/WPGR/W/46. (November 12)
- _____. 2003i. "List of Publication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lating to Subsidies in Services." S/WPGR/W/47. (November 12)
- _____. 2004a. "Report of the Meeting Held on 6 and 9 October 2003 – Note by the Secretariat." TN/S/M/9. (February 5)
- _____. 2004b. "Communication From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 Assessment of Trade in Services." TN/S/W/18. (February 26)
- _____. 2004c. "Communication from Bolivia, Brazil, Chile, China, Colombia, Cuba, Dominican Republic, Ecuador, Egypt, Guatemala, India, Indonesia, Mexico, Nicaragua, Pakistan, Peru, Philippines and Thailand – Review of Progress as established in Paragraph 15 of the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the Negotiations on Trade in Services (S/L/93)." TN/S/W/19. (March 31)
- _____. 2004d.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Communities – Government Procurement in Services." S/WPGR/W/48. (May 11)
- _____. 2004e. "Report of the Meeting Held on 2 April 2004 – Note by the Secretariat." TN/S/M/10. (May 18)
- _____. 2004f. "Doha Work Programme – Decision Adopted by the General Council on 1 August 2004." WT/L/579. (August 2)
- _____. 2004g. "Communication from Switzerland – On the Importance of improving the scheduling of GATS commitments." TN/S/W/21. (September 8)
- _____. 2004h. "Report of the Meeting Held on 27 September and 1 October 2004 – Note by the Secretariat." TN/S/M/12. (November 9)
- _____. 2004i. "Main Approaches to the Undertaking of Commitments on Government Procurement in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s: Summary Observations – Note by the Secretariat." S/WPGR/W/51. (November 11)

- _____. 2005a. "Report of the Meeting Held on 29 November and 3 December 2004 – Note by the Secretariat." TN/S/M/13. (January 28)
- _____. 2005b. "Communication from the Republic of Korea – Review of Article II (MFN) Exemptions – Questionnaire on the List of MFN Exemptions."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S/C/W/256. (February 11)
- _____. 2005c. "Communication from Argentina, Bolivia, Brazil, Chile, Colombia, India, Mexico, Pakistan, Peru, Philippines, Thailand and Uruguay – Categories of Natural Persons for Commitments under Mode 4 of GATS." TN/S/W/31. (February 18)
- _____. 2005d. "Communication from Bulgaria, Canada,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Romania – Mode 4 – A Common Approach to Scheduling." TN/S/W/32. (February 18)
- _____. 2005e. "Communication from Canada – Working to Ensure Benefits from the GATS for Members'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TN/S/W/36. (February 22)
- _____. 2005f. "Report of the Meeting Held on 21, 22 and 25 February 2005 – Note by the Secretariat." TN/S/M/14. (April 26)
- _____. 2005g. "Republic of Korea – Revised Offer on Services." TN/S/O/KOR/Rev.1. (June 14)
- _____. 2005h. "Communication from Cuba – Assessment of Services Trade and Liberalization in Underdeveloped Economies." TN/S/W/44. (June 17)
- _____. 2005i. "Report of the Meeting Held on 27 and 30 June and 1 July 2005 – Note by the Secretariat." TN/S/M/15. (September 15)
- _____. 2005j. "Communication from the Republic of Korea – A Proposal on the Complementary Negotiating Methods: The Bi-dimensional Approach."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Special Session, TN/S/W/52. (September 29)
- _____. 2005k.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Its Member States – Elements for Complementary Approaches in Services."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Special Session, TN/S/W/55. (October 27)

- _____. 2005l. "Report of the Meeting Held on 26, 29 and 30 September 2005." TN/S/M/16. (October 28)
- _____. 2005m. "Communication from the Republic of Korea - An Example of Economic Needs Tests." TN/S/W/56, S/CSC/W/49. (November 28)
- _____. 2005n. "Doha Work Programme: Ministerial Declaration - Adopted on 18 December 2005." Ministerial Conference, Sixth Session, Hong Kong, 13-18 December, WT/MIN(05)/DEC. (December 22)
- _____. 2006a. "Report of the Meeting Held on 31 October, 3 and 24 November 2005 - Note by the Secretariat." TN/S/M/17. (January 30)
- _____. 2006b. "Report of the Meeting Held on 13 and 16 February 2006 - Note by the Secretariat." TN/S/M/18. (March 3)
- _____. 2006c. "Report of the Meeting Held on 7 April 2006 - Note by the Secretariat." TN/S/M/19. (May 18)
- _____. 2006d. "Report of the Meeting Held on 14 July 2006 - Note by the Secretariat." TN/S/M/22. (November 6)
- _____. 2007a. "Communication from Albania, Australia, Canada, Chile, Colombia, Croatia, the European Communities, Hong Kong China, Japan, Mexico, Norway, Peru,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mnen and Matsu, Turkey and the United States - Understanding on the Scope of Coverage of CPC 84: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TN/S/60. S/CSC/W/52. (January 26)
- _____. 2007b. "Report of the Meeting Held on 2 March 2007 - Note by the Secretariat." TN/S/M/23. (April 5)
- _____. 2007c. "Report of the Meeting Held on 27 April 2007 - Note by the Secretariat." TN/S/M/24. (May 30)
- _____. 2007d. "Report of the Meeting Held on 13 July 2007 - Note by the Secretariat." TN/S/M/26. (September 11)
- _____. 2008. "Elements Required for the Completion of the Services Negotiations: Report by the Chairman." TN/S/34. (July 28)
- _____. 2009. "Report of the Meeting Held on 6 April 2009 - Note by the Secretariat." TN/S/M/30. (June 11)
- _____. 2010. "Report of the Meeting Held on 16 March 2010 - Note by the Secretariat." TN/S/M/35. (April 27)

- _____. 2011a. “Negotiations on Trade in Services - Report by the Chairman, Ambassador Fernando de Mateo, to the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TN/S/36. (April 21)
- _____. 2011b. “Eighth Ministerial Conference - Chairman’s Concluding Statement.” Ministerial Conference. Eighth Session. Geneva. 15-17 December. WT/MIN(11)/11. (December 17)
- _____. 2011c. “Preferential Treatment to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of Least-Developed Countries - Decision of 17 December 2011.” WT/L/847. (December 19)
- _____. 2013. “Bali Ministerial Declaration - Adopted on 7 December 2013.” Ministerial Conference. Ninth Session. Bali. 3-6 December 2013. WT/MIN(13)/DEC. (December 11)
- _____. 2014a. “Minutes of Meeting - Held in the Centre William Rappard on 7 April 2014.” Trade Negotiation Committee. 7 April 2014. TN/C/M/34. (April 16)
- _____. 2014b. “Post-Bali Work - Decision of 27 November 2014.” General Council. WT/L/941. (November 28)
- _____. 2015. “Nairobi Ministerial Declaration - Adopted on 19 December 2015.” Ministerial Conference. Tenth Session. Nairobi. 15-18 December 2015. WT/MIN(15)/DEC. (December 19)

[언론 및 보도자료]

- 「美 전략물자 100% 국적선사 이용... 韓도 국가필수선대 확대해야」. 2017. 『헤럴드 경제』. (6월 23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623000265>(검색일: 2022. 1. 29).
-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2006. 「WTO/DDA 서비스 복수적 협상 개최」. (3월 27일).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293417 (검색일: 2022. 2. 16).
- Joint Press Release by Australia *et al.* 2012. “Advancing Negotiations on Trade in Services.” (July 5). http://eeas.europa.eu/delegations/wto/press_corner/all_news/news/2012/20120705_advancing_negotiations_services.htm(검색일: 2022. 2. 11).

[온라인 자료]

- ESF. 2006. “GATS Negotiations: Collective Requests in Plurilateral Negotiations.” European Services Forum. <http://www.esf.be/003/009.html>(검색일: 2022. 2. 15).
- NAVER 지식백과. “Jones Act.” 외교통상용어 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38321&cid=42143&categoryId=42143>(검색일: 2022. 1. 30).
- NAVER 지식백과. “톤세 제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83151&cid=42329&categoryId=42329>(검색일: 2022. 1. 29).
- WTO. 2002. “Programme and Background Materials.” Symposium on Assessment of Trade in Services. (March 14–15).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serv_e/symp_assessment_serv_march02_e.htm(검색일: 2022. 2. 16).

[협정문]

-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서명 1994. 4. 15, 발효 1995. 1. 1).

[법령 자료]

- 「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시행 2020. 2. 27. 해양수산부고시 제 2020-29호, 2020. 2. 27, 제정). 제5조 제1항 제2호.
- 「도시가스사업법」(시행 2022. 2. 3. 법률 제18814호, 2022. 2. 3, 일부개정). 10조의5, 제10조의6.
-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3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1조, 제6조 제1항 제2호.
- 「Merchant Maritime Act of 1920」. 제27조.

1. 서비스교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가. 특별 세션(Special Session)

1) 서비스교역 평가(Assessment of Trade in Services)

[발언문 1]

Introduction of the Informal Paper, “Korea’s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Its Impacts”

2000-10-2

CTS-SS-Assessment

It is my privilege and honor to present the results of our study at this session. I would like to first mention that the views expressed in this paper are personal and do not reflect the views of the Korean government.

This paper aimed at evaluating the economic effects of the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on the Korean economy. Among the various economic effects, we focused on productivity, which, we believe, show changes in efficiency more effectively than any other variables.

This paper is composed of three parts. The first part summarizes the liberalization of service sectors in the 1990s and resulting increases in trade in services. The second part tabulates the changes in productivity growth rates. The last part presents experiences of two specific sub-sectors, namely, distribution services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s.

Let me introduce to you the first two parts today, leaving the last part for reading.

Since the mid-1990s, the Korean government gradually opened its service sector according to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and the OECD accession. As a result, distribution services, business services, and other personal services, among others, have been almost completely liberalized.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gave further momentum to remove market access restrictions beyond the commitments made in the WTO and OECD. The Korean government has accelerated its liberalization schedules, mainly for transportation services, financial services,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s since the crisis.

Thanks to the accelerated liberalization, Korea's trade in services increased sharply in the 1990s. Trade in services, by the three modes of supply, except commercial presence, increased from 22.8 billion dollars in 1991 to 49 billion dollars in 1998. As a proxy for the commercial presence, FDI inflows in services increased from 1.6 billion dollars in 1982-90 to 6.3 billion dollars in the last two years.

The liberalization of services is presumed to bring productivity gains in the service sectors and also in the manufacturing sectors which use liberalized services as inputs. By examining the changes in productivity of the service and manufacturing sub-sectors in 1970-97, we would like to argue that liberalization may have positively contributed to the productivity of service sub-sectors, even though it is difficult for us to strictly demonstrate the causality.

In particular, the sub-sector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showed a gain in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from 2.2 percent in 1990-95 to 4.12 percent in 1995-97. Also, the 'distribution, etc.,' which was almost completely opened in 1996, shows an improvement of TFP in the late 1990s, compared with the early 1990s. Whereas, 'finance, etc.,' which had been nearly closed until the late-1990s, showed negative TFP growth rates throughout the periods studied.

With regard to the hypothesis that liberalization of services may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the manufacturing, we examined the growth rates of productivity and the input coefficients by the manufacturing sub-sectors. Unfortunately, we cannot find a consistent pattern. However, we note that, the sub-sector of 'nonmetals,' which use the liberalized distribution services less intensively, shows poor performance, compared with other manufacturing sub-sectors.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is also presum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other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real GDP. According to another study which did a simulation using th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services liberalization in the form of a 25 percent reduction in barriers increases real GDP by almost 0.5 percent. Also, welfare gain to consumers is about 1.6 percent increase in the total utility.

Considering these positive impacts of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on domestic economy, we think it is in the interest of the Korean economy to continue its liberalization process and refrain from retreating. We raised following two points a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We feel that entry barriers have been widely removed. Having said that, most remaining obstacles are the internal barriers faced by both foreign and domestic suppliers. In particular, ambiguous laws and regulations, being subject to various interpretations, are regarded as the most serious impediment to foreign suppliers. This implies that deregulation should focus on enhancing the transparent enforcement. And also, the government should pay great attention to reducing the excessiveness of regulations for fulfilling their objectives. For instance, minimum capital requirements in financial services may act as a deterrence to small- sized investments.

Another implication is concerned with labor market flexibility. The limitations on layoffs may discourage foreign suppliers in establishing local affiliates. In this respect, it needs to establish an adequate social safety net and effective retraining programs. It is not only for enhancing labor market flexibility, but also for liberalization of mode 4.

[발언문 2]

Korea's Comment on China's Contribution on Assessment of Trade in Services

2003-3-3

CTS-SS-Assessment

We appreciate China's contribution, TN/S/W/9, which summarizes the overall efforts that China has made in implementing her commitments and the accompanying challenges. We fully recognize that the process of liberalization should be at a pace commensurate to building up regulatory capacity, and we are also sympathetic with the other challenges that China has described.

Meanwhile, regarding the proposition in para 51 that the process of liberalization and domestic reform should be mutually reinforced, we would like to note that this proposition is not limited to only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but should be applied to all services sectors.

In this regard, we want to emphasize that liberalization has the role of accelerating the domestic reform process. From our experience, committing future schedules of liberalization makes policymakers feel it imperative to initiate and implement the necessary reform process in a timely fashion.

We also acknowledge that preparing in advance for fully comprehensive adjustment policy packages may be too idealistic, or even infeasible, as we observed in the case of the liberalization of the retailing sector. Korea almost completely liberalized the retailing sector in 1996. However, our relevant Ministry has only recently implemented the adjustment policies for small retailers, including supporting store-renovation, providing training on modern marketing techniques, building networks for joint purchase, and etc., as most of these measures were mentioned in the earlier contribution by Thailand, TN/S/W/4.

Accordingly, the key lesson that can be drawn from our experience is that,

in making adjustments for liberalization, retaining a reflexive policy system is of the utmost importance, and can be a better alternative to a gradual approach.

[발언문 3]

Korea's Comment on the UNCTAD's presentation of World Investment Report 2004

2004-11-29

CTS-SS-Assessment

We thank the UNCTAD for the presentation on the World Investment Report 2004. It is highly informative on the recent trends of worldwide FDI and it also provides us with insightful policy implications and helpful contribution to the progress of the ongoing services negotiations.

Some evidence and assessment offered by the Report are in line with our experience that despite the rapid growth of Modes 1 and 2, the FDI in services, that is, mode 3, is still of vital importance.

In particular, we take note of its assessment, stated in page 23 of the Overview, that “(quote) FDI in services can spur local service providers to become more competitive through demonstration and skills diffusions, thus helping them improve efficiency(unquote).”

In this regard, we would like to make some complementary remarks based on our own experiences, in that enhancement of competition through liberalization and efficiency gains thereof can also bring a new market opportunity for domestic players, if due consideration is given to those slow adaptors.

Like the trend of the worldwide FDI, Korea is also witnessing a growing importance of services in total FDI. The share of services in total FDI inflow has been over 60 percent since 2003, in which financial services is the largest

recipient. The share of services in FDI outflow is also significant, reaching nearly 40 percent in 2003. Sectorally, distribution services has the largest share, registering more than 60 percent of the total FDI outflow in services.

Distribution services is what we would like to draw the members' attention to. After we liberalized the retail market almost completely in 1996, it now has turned into a sector of export interests. Not only have domestic retail firms successfully competed with the foreign giants like Wal Mart or Carrefour in the local market, but also started to set up their own retail stores and franchises in the overseas markets.

As a side-effect of liberalization, we did suffer displacement of small-sized stores, accompanying a certain degree of job reduction in the industry. However, we are of the view that the business failure of small-scaled retailers is attributed to their slow adjustment to changes in the market, rather than to the opening of the market itself. A survey of 370 retailers in Taegu city found that only 35 percent changed their business strategies to comply with market needs and invested in upgrading their outdated stores, among which 25 percent experienced an increase in sales by 10 percent after the change.

In order to prevent this side-effect from undermining the benefits of the liberaliza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providing various assistance programs to small-scaled retailers for better adjustment.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has been making efforts to facilitate remodeling or reconstructing facilities and improving the business environment, for those mom-and-pop stores in the traditional markets. In addition, the government also assists in the software-type innovation of management, such as modernizing commercial transactions using e-commerce, facilitating joint development of products and brands, promoting advertisement, modernizing management through education, establishing associations among the retailers in the market.

With our own experiences in mind, we will continue to constructively engage in discussions on how best the adjustment policies can be implemented

in response to the liberalization. We also acknowledge that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exact causality between the efficiency gains and liberalization due to insufficient statistics.

However, the fact that our distribution services sector has converted itself into a sector of export interests in less than 10 years since its liberalization can be a circumstantial evidence for our argument on efficiency gains, which we hope has some merits for consideration to other Members.

Thank you.

[발언문 4]

Korea's Comments on Assessment Exercise

2005-2-21

CTS-SS-Assessment

As a developing country, Korea has been placing great importance on the Assessment exercise. We understand this exercise as a helpful information exchange on, which direction we should be headed, why we should pursue that direction, and how we can get there. In this regard, we thank the Secretariat for providing us integrated insights in all of these three areas.

Since the first two areas seem to be discussed quite extensively in the past meetings, we wonder whether it is now time to change gears towards the third objective, namely, how we can reach our destination. In this regard, we think that every economic entities should try to maximize their utilities under the constraints they are faced with. In order to move forward, it's better to address those constraints first, rather than to try to change their utilities directly.

In our view, these constraints are represented by various regulatory concerns, among which are adjustment policy issues, fair trade practices, supervisory surveillance measures, and government interventions to address externalities and asymmetric information.

Today, we would like to pick up the issue of fair trade practices, since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cerns for our regulators and private business sectors in Korea. By doing so, we are not trying to revive discussion on competition policy issues such as hard-core cartels. We are just seeking to explore how best we can address unfair practices of private businesses arising from their dominant positions. These unfair practices impact not only the functioning of the market per se, but also tend to deter diversification of service supplies. For these reasons, a key issue is whether the benefits of continued trade liberalization can be nullified by the unfair trade practices of private players, as the Secretariat clearly identified in its Report.

Against this backdrop, we note that several negotiating proposals in the past contained some suggestions in this regard, particularly in such sector as tourism. We wonder whether other sectors, including construction, Distribution, and transportation, also deserve some discussion in the aspect of fair trade practices.

We would like to close our comments with one specific question on the Report. On page 161, there is a notion of atypical consumer preferences, in that a reduction in product variety arising from openness could lead to welfare losses. We wonder whether this concept encompasses the herd behavior of consumers which is often without careful assessment of risks involved, particularly with regard to on-line transactions.

In conclusion, we hope that this Assessment exercise continues to be playing the role as building bridges between regulators and trade negotiators.

Thank you.

[발언문 5]

Korea's comment on UNCTAD's presentation

2005-6-27

CTS-SS-Assessment

We thank the UNCTAD for the succinct presentation about the various issues related with development implications.

We would like to seek some information on the importance of infrastructure services. It is with regard to the argument set out in Para. 19 of page 6, that is, "The characteristic of services as inputs to other sectors of the economy is clearly demonstrated in these infrastructure services sectors."

We wonder whether there are statistics available, or collected by UNCTAD, for the input ration of these infrastructure services to other sectors of the economy, whether on average, or for specific infrastructure services sectors.

Perhaps, we presume that national Input-Output tables can be used for this purpose, and we are curious of whether there may be any commonality across countries which we can take into account in relation to the argument for the importance of the infrastructure services.

2) 자발적 자유화(Autonomous Liberalization)

[발언문 6]

Comment on the Secretariat's Checklist of Issues for Treatment of Autonomous Liberalization

2001-5-13

CTS-SS-AL

We thank the Secretariat for presenting the Annotated Checklist which informatively summarizes all the relevant issues discussed so far and raises

some points for further discussion. We wish that a special session shall be devoted to the discussion of these points.

For the time being, we would like to make the following preliminary comments on para 22 for the purpose of asking members to give further thoughts. More specifically, our comment is on the issue of binding, which is whether binding is necessary for obtaining credit for autonomous liberalization or it is an eventual second step in the process in relation to the issue of assessment in section 3 and also to the issue of a bilateral or multilateral treatment in section 5.

We are of the view that the issue of binding is closely linked to the issue of a bilateral or multilateral approach for the treatment of autonomous liberalization. This is compatible with the negotiating guidelines which state that a multilaterally agreed criteria shall be developed prior to the negotiation of specific commitments.

In this regard, we would like to give more thoughts on whether such criteria stated in the negotiating guidelines imply the same meaning as the modalities stated in Article XIX. Furthermore, we would like to ask members to give thoughts on whether the concept of credit for services needs to be similar to the case of goods in that it presupposes that measures liberalized autonomously shall be bound in further discussion.

To elaborate on this, if we can agree upon multilateral modalities for services based on formulae, we suppose that there may not b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bove two arguments on the issue of binding in terms of their end results. It is because the modalities based on formulae will yield similar outcomes, regardless of which stage of negotiation the bindings be made.

On the other hand, given the difficulty to agree upon a multilateral and quantitative approach, if we decide on a bilateral approach or a combination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eatment as proposed by Hong Kong, China in Job. 5780, we have a concern that making bindings a prerequisite for obtaining credit to autonomous liberalization may impinge on the bargaining position

on the members who seek to demand those credits. We think that it is the case, especially to those members who undertook a wide range of autonomous liberalization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In this regard, we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all the measures liberalized autonomously need not be bound. Likewise, we would like to stress that notification of measures liberalized autonomously shall be up to each individual members.

In summary, we would like to hear other members' view on whether those issues of binding, assessment of autonomous measures, and a bilateral or multilateral approach are interrelated, rather than they need to be discussed separately.

[발언문 7]

Talking Points on Autonomous Liberalization

2001-10-4

CTS-SS-AL

The Korean delegation appreciates the Secretariat's informative summary. We are of the view that the summary reflects the current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t issues regarding autonomous liberalization.

We are still in the process of preparing another proposal on the issue of evaluation, as we announced at the July meeting. We think we need to give more thoughts to this issue, using today's discussion as another input, before distributing the proposal at the next meeting.

At this moment, we would like to make one clarification in order to share our view with other members. We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constructing quantitative benchmarks or targets as we proposed using what we call an Improvement Index in Job 7634 and 7634/ Add.1 does not mean that it should be used as the only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value of a liberalization measure, for all Members in all sectors. It could be used as one of the criteria

that would serve as a basis for a qualitative assessment, along with other various criteria such as the duration of the measures, the share of trade, and the increase in foreign penetration, etc.

This quantitative index can be applied for a specific sector or for a specific mode, thereby serving as a reference for interested members to compare the relative level of liberalization with some benchmark. It may have a practical merit for helping negotiating members conduct more efficient bilateral negotiations, just like the other criteria for a qualitative assessment. To put it differently, the quantitative yardstick and the qualitative assessment are not mutually exclusive or substitutive, but they ar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Having said that, we suspect that there may be some trade-off between the inconveniency of having some kind of quantitative yardstick as one of criteria for qualitative assessment and ensuring the negotiations not being tilted to the disadvantage of developing members which have autonomously liberalized. In other words, we suppose that having a multilateral criteria for assessment with a minimal degree of quantitateness may reduce the risk or probability of the bilateral negotiation undermining the negotiating power of developing members.

Therefore,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view that it is helpful to have a combination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for assessment. How to balance these two depends upon various factors, but it could be accomplished in the due process. We admit that the quantitative method has some technical difficulties. However, we think that we can give some flexibilities to the quantitative method, instead of discarding it totally, since it can serve as an useful gauge for interested members in credit negotiation.

We would like to reiterate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very options possible and come up with some combination of these options which is meaningful, if not perfectly satisfactory, so that the outcome of this important and difficult task can lead to continuing liberalization undertaken autonomously in the future.

Keeping this as our basic understanding of this issue, and incorporating helpful discussions of today's meeting, we will prepare a proposal and present it at the next meeting.

3) 각국 제안서 논의

[발언문 8]

Questions on India's proposal on Mode 4

2001-12-4

CTS-SS

In paragraph 7 of its proposal, India rightly points out that restrictions on the entry and stay of temporary service providers originate in immigration and labor market policies of individual countries.

We suspect that this reflects the market reality. In other words, eliminating these restrictions raises the direct and indirect costs to the host countries, be they social costs or economic costs involving enforcement or implementation of immigration laws.

Accordingly, we think that it is important to give thoughts to the costs to the host countries, as well as to the costs to the service providers.

In this respect, we wonder whether India can elaborate on the concept of the "adequate in-built Safeguard mechanisms" to prevent entering into permanent labor market, which is suggested in para 18(b).

We also wonder whether the emergency safeguard mechanism which is being discussed in the Working Party on GATS Rules may have relevance to this concept of the in-built Safeguard mechanisms for temporary movement of natural persons.

We are curious of what is the appropriate remedy against the incumbent temporary service providers entering the permanent labor market without

causing too much costs to the host countries in enforcement or implementation?

[발언문 9]

Korea's Comments on Joint Statements on Liberalization of Mode 1

2004-6-28

CTS-SS

We would like to join others to thank India and cosponsors for their joint statements on liberalization of mode 1. Like the previous speakers, Korea supports that balanced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all of the four modes under the GATS.

We note that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ICT services which we are experiencing in Korea is conducive to the environment of increasing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t the same time, we acknowledge that regulations which can ensure those liberalizing environment in cross-border trade while preserving legitimate objectives are not keeping up with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s.

Having said that, we would like to echo the comment made by Argentine delegations for targeted sector-specific approach. We are of the view that, given the various regulatory implications on mode 1 across sectors, it may be useful to focus on some specific sectors of interests that can be identified through the discussions with the domestic regulators.

[발언문 10]

Korea's Intervention on Mode 4 Informal

2005-2-22

CTS-SS

The Korean delegation has been carefully following up the discourse so far over the various issues involved on this critical area of services negotiation. At this juncture,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views on the issue of common categorization and recognition.

With regard to categorization, our view is to recognize the diversity in national immigration regimes of long history across Members. We noticed that there are two distinct approaches and we think that we need to acknowledge those distinct interests,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changing market environment in certain region.

In this regard, we would like to take note of the Secretariat's argument in the Executive Summary of its World Trade Report 2004, "(quote) Difficulties of this nature would argue for lighter forms of cooperation, and persistence in searching for fuller commitments could result in coercive and unstable relationships that may have negative welfare consequences over time. (unquote)"

Having said that, we are in favor of addressing the behind- the-border barrier in a more practical way, rather than devoting too much of our time in debating over which title we should put on the border measure.

In this regard, we have been proposing a more practical way to approach the recognition issue, namely, 'partial recognition,' which is subject to the collaboration with the local license holders. This initiative was reflected in our UR schedules in architectural services and also included in the Malaysian initial offer of the same sector.

This partial recognition alleviates the problem arising from the direct competition with the local professionals of the host country. It also addresses

the concerns by the regulators on consumer protection via quality control over foreign architects by domestic professional architects. Since regulators have established long history of confidence with local architectural associations, this kind of indirect supervision may alleviate the administrative burden of the host countries. It may even more so for the developed Members who has long experience of implementing 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 and professional ethics code on local architects.

As a confessional, we must admit that, at the time of preparing for our initial offer, we could not discover the background of this partial recognition in our UR schedule. In the beginning, we suspected that it might have been a result of some kind of arm-twisting by our large trading partners. After we examined other Members' schedules and found that no other Member inscribed this AC in their schedules, this suspicion turned out to be a false alarm.

However, we think that there is a merit for consideration since this initiative is under control of the local professional license holders and we presume that there is an opportunity for mutual benefits.

[발언문 11]

Korea's comments on proposals

2005-2-25

CTS-SS

Before we move to the next item, we would like to give an integrated comment and some observations, if you allow me Mr. Chair.

Korea welcomes various proposals or reports by the Groups of Friends.

We co-sponsored the reports by Telecommunication, Maritime Transport, Computer Related services and Legal services, which we regard as infrastructure services to enhance overall efficiency of the economy.

We also support the proposal by Canada, on the importance of SMEs in

trade in services. In particular, we share the concerns on fair trade practice issues arising from reduced ability to capture gains from vertical integration, as expressed in para 7 of the paper.

In this context, we would like to follow up on the point made by Hong Kong China and Mexico, that is, to take an SME perspective and deliberation in specific sectors and to design instruments. In fact, for the past two weeks, we have been trying to identify some specific stumbling blocks on this aspect of fair trade practices, in various fora such as bilaterals, Friends Group meeting and seminars and MFN exemption Review.

These specific obstacles we have identified include concerns on code of conduct in Mode 1 of computer reservation services in air transportation which is in some way related to tourism services, unfair practices in port services in maritime transportation, concerns on fair conducts on Mode 4 of professional services, especially arising from collaboration with local professionals in legal services and architectural services, block-booking practices in film distribution, transfer pricing practices in education services, and unfair recruitment practices by dominant players in insurance services.

With regard to these various concerns on fair trade practices, we appreciated several Members and the Secretariat for providing possible solutions. Canada suggested promoting more transparent regulatory practices for SMEs and EC presented a way to address cross-subsidization concerns in Postal and Courier services. Furthermore, Mr. Mamdouh of the Secretariat pointed out a possible Reference Paper approach in maritime transportation.

In order to find more constructive solutions, while taking into account of specificities in each different services area, we think that Groups of Friends have a role in this regard.

At this moment, we wonder whether they can be more effective with some contributions from the Secretariat. We presume that there have been some ideas by Members to get Secretariat's experts participated in the Friends

Group. We wonder whether it is now the time to seek for their expertise and experiences in the architecture of our future activities. We ask whether we can now reinforce the constructive relationship with the Secretariat in designing the pragmatic solutions to address our problems.

Thank you, Mr. Chair.

[발언문 12]

Korea's introduction of a joint statement on MFN exemptions

2005-6-27

CTS Special Session

Co-sponsors of China, Hong Kong China, Japan, Korea, Mexico, and Chinese Taipei, would like to draw Members'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making substantive progress in the negotiations for elimination and reduction of MFN exemptions.

The MFN principle is the foundation of the WTO system, any departure from which derogates from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We consider the MFN exemptions as discrimination among members, constituting trade barriers to the 3rd countries. This can be confirmed by an explanation during the recent MFN exemption review in para 134 of S/C/M/76, in that those exemption measures were the favored method of penetrating new market as a tool to finance high quality products for distribution in the global market place.

Moreover, MFN is the common cause for which 148 nations got together under one institution, since they all believe in its benefit to the world economy. In our view, lack of progress in bringing those temporary exceptions into conformity is conflicting to our shared belief on this principle and is contradicting to our common cause of joining the membership.

In light of the recent review and the state of play with more than 400

exemptions still remaining, the co-sponsors express grave concern about the lack of cooperation in eliminating and reducing the existing MFN exemptions.

As stipulated in the paragraph 6 of the Annex on Article II Exemptions, that is “in principle such exemptions should not exceed a period of 10 years. In any event, they shall be subject to negotiation in subsequent trade liberalizing rounds,” we ask for Members’ attention to the negotiations of MFN exemptions if the current round is in fact to be one of the trade liberalizing rounds.

In particular, the co-sponsors call on all Members to take the following actions to move forward the negotiations of MFN exemptions as part of the overall services negotiations -

- (a) Members shall, in their services offers, offer to eliminate as many MFN exemptions as possible, especially those which are (i) no longer needed or never invoked; (ii) inconsistent with the GATS or incompatible with the principle of progressive liberalization; and (iii) already covered by other provisions in the GATS.
- (b) Members shall give consideration to establishing a quantitative target for eliminating existing MFN exemptions in the current round of services negotiations. Such a quantitative target should aim at reducing a substantial proportion of the total number of MFN exemptions.
- (c) For MFN exemptions that are continued to be maintained, Members shall further clarify, circumscribe and/or reduce the scope of the exemption measures, as well as to specify their duration.

The co-sponsors will revert with more specific proposals building upon the above ideas.

[발언문 13]

Korea's comment on the joint statement on financial services

2005-6-27

CTS Special Session

Korea appreciates the co-sponsors for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liberalization of financial services. We support the main points of the paper. In particular, we share the importance of commercial presence, and the benchmark of guaranteeing the right of establishment by eliminating any restrictions on initial entry and expansion, as well as removing discrimination to foreign suppliers such as nationality requirement for board of directors.

With regard to the cross-border (modes 1 and 2), we hope that the experiences or best practices on regulatory aspects could be shared in the broad membership in order to make appropriate commitments depending on the particular sub-sector.

As stated in the para 3, opening the financial sector to foreign participation involves strengthened regulation and supervision. It is more so for the cross-border, give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enabling transactions in these modes. Just as discussions on technical issues in the cross-border trade of financial services had better not impede the negotiations of market access, concerns or fear of regulatory aspects need to be addressed to make progress in the market access negotiations on cross-border.

In this respect, we wonder whether more efficient channel of information sharing on best practices for proper regulation should be explored, if the bilateral process is not effective to bring broader participation.

4) 협상 진전 검토

[발언문 14]

Korea's introduction of a proposal on complementary negotiating method

2005-9-29

CTS Special Session

Since we already discussed the main contents of our proposal in the informal meetings, we would rather respond to the concerns of Members than go into the details. While preparing for our proposal, we tried to focus on the reason why we need a complementary method. In our view, the major problem of the current bilateral process is its absence of a collective level of ambition. This in turn results in the lack of the political impetus for Members to come forward with high quality offers.

In our view, the complementary method is like setting up a platform composed of a collective level of ambition upon which various applications of bilateral negotiations can be supported. Without some platform of the collective level of ambition, the bilateral negotiating process has to have repeated exchanges in offers to bring a satisfactory outcome to all Members. What we are proposing is to shorten this process. Of course, we are not trying to solve all of the problems with a single instrument. We are just trying to deal with certain aspect of the problem and leave the rest to the existing bilateral request offer process. In addition, we would like to point out at this time that our idea is trying to address the problem of asymmetry in the negotiation dynamics, by asking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Members alike, for sharing the responsibilities of making new commitments.

Let me now respond to some of the concerns that Members have raised. We acknowledge that it is difficult to reach an agreement on a quantitative target multilaterally. At the same time, we were not able to find a more effective

way to widen the scope than setting a quantitative goal, if we are to have some specificity. The level of specificity in respect of the scope depends on whether we have a quantitative gauge. Having faced this dilemma we are not envisaging a hard and fast number, but a soft tool to help negotiators engage in trade-off negotiations.

With regard to the concerns on lack of flexibilities, we are trying to incorporate those flexibilities provided in the GATS structure. Members have the right to choose which subsectors to be newly committed, depending on the degree of market development for each subsectors. Developing Members have the flexibility provided in the Article XIX:2. Special priority shall be granted to LDCs as they envisage in Article IV:3. The only flexibility affected or that might be affected, we must recognize at this moment, is the flexibility with respect to the level of ambition. In this regard, we think that there is a trade-off between flexibility in this respect and the degree of progress in negotiations. However, we think that the flexibility depends on the magnitude or rigidity of specific tools to achieve that level of ambition. By adjusting those specific tools to a realistic level, we think we can accelerate the progress in negotiations while addressing the concerns on the flexibility of this nature.

As for a clarification, we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our approach does not make it mandatory for Members to open up their market which is not liberalized. We respect Members' right to liberalize at their own pace.

Concerning another issue of raising the quality of commitments in already committed subsectors including Mode 4, we would welcome any ideas to address this issue. Our idea at this stage is to leave it to the current bilateral process, possibly using the level of ambitions for each sector or mode identified by informal groups and trying to expand their adoption. With regard to Thailand's specific concern in this respect, we fully respect the voluntariness and flexibilities of each informal groups with respect to various aspects including the concept of critical mass.

Finally, we admit that time is running out. However, we would like to quote

the phrase of ‘better late than never,’ and we think that Members might give a chance to the complementary method, if it is envisaged that situations are not likely to improve in its absence.

[발언문 15]

Korea’s remarks on the revised draft text

2005-11-3

CTS Special Session

At this juncture,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appreciation for your efforts in filling in the void of your text. We think that it will give a clear message that services negotiators join others in trying to stand up against the increasing pressure from the interest groups.

Having said this, we would like to ask others to fill in the bracket with the corresponding level of ambition compared with their level of ambition in the other pillar of the negotiation, in order to secure the overall balance as well as to support our Architecture against the risks of falling apart to the interests of the anti-globalization forces.

Turning to a specific point which we forgot to respond last Friday, there was raised a question on the notions of ‘commercial meaningfulness,’ namely ‘who should decide it?’ Even though this notion is not explicitly inscribed in the Chairs’ draft, we think it is inherent in every document under this house.

In fact, we were trying to provide our own answer in paragraph 11 of Korea’s communication, W/52. We are not thinking of any other 3rd party to determine the commercial meaningfulness. What we have in mind is that it should be decided mutually, between the requesting Member and the requested Member. But it should meet the two conditions at the same time, the degree of market development of the requestee and the commercial interests of the requestor. Here, we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the requestee is expected

to comply with the requests in good faith, taking into account its market conditions.

Having said that, it is of our view that the notion of 'commercial meaningfulness' is also a relative concept. It has a continuous spectrum, across sectors, across Members, and across time. Accordingly, we think that our Architecture provides the flexibility in determining the commercial meaningfulness. At the same time, our Architecture places the authority and requirement on us to determine it on our own, as it contains the word, 'commercial' in its title of 'OMC.'

5) LDC Modalities

[발언문 16]

Korea's Comments on the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LDCs

2003-5-19

CTS-SS-LDC Modalities

Korea appreciates the efforts made by the LDC Members for their submission of the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the special treatment for LDCs. We think that this revised draft signifies the willingness of LDC Member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services negotiations. At this stage, we would like to make some preliminary comments. We will further reflect on each element of the revised draft modalities before the next meeting.

Firstly, we support the provision that more flexibility shall be given to LDCs in undertaking commitments, with their development needs taken into account. We think that this can be accepted by all Members. However, we have one reservation that the full denial of offering national treatment as in para 5 may undermine the value of the commitments by LDCs.

Regarding para 6-10, which describes the obligations on the part of

non-LDCs, we share some of the concerns raised by other Members about the prescriptive nature of these provisions, and we also notice that some elements seem to fall outside of the scope of the GATS.

In particular, as many Members have pointed out, investment decisions depend on various factors including the growth potential and overall business-friendliness of the host economy. Making commitments in services negotiations is just one of these necessary conditions. But, it is not the sufficient condition for investment.

Concerning the temporary movement of natural persons, para 10 of the revised draft modalities specify LDCs' priorities to unskilled and semi-skilled persons. In this regard, we are of the view that the movement of service suppliers per se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the mobility of labor as a factor of production. Distinguishing between these two types of mobility becomes more difficult, when it comes to unskilled and semi-skilled persons. Having said this, we would like to note that according to para 2 of the Annex on the Movement of Natural Persons, the GATS shall not apply to measures affecting natural persons seeking access to the employment market of a Member. We think that this holds regardless of the development stage of a Member.

Another point we would like to clarify is regarding para 11, which says that LDCs shall be granted maximum credit for autonomous liberalization measures without binding them. According to para 4(i) of the adopted modalities for the treatment of autonomous liberalization, one of the criteria for assessing the value of an autonomous liberalization measure is whether the measure in question has already been scheduled and, if not, whether the liberalizing Member is willing to do so. We wonder whether para 11 is not in conflict with the adopted modalities for the treatment of autonomous liberalization in that non-LDC Members should give the same legal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to the unbound measures as to the measures being scheduled. Meanwhile, we think that para 14 of the modalities for the treatment of autonomous liberalization, which stipulates that special

consideration shall be given to the LDC Members, is flexible enough for LDCs.

Regarding the provision on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Korea shares LDCs' keen interest in this area, as we have been providing technical assistance to LDCs by hosting various training seminars. We will make further efforts in this respect and will explore how LDC's concerns and interests can best be addressed.

나. 정례 세션(Regular Session)

[발언문 17]

Korea's Interventions on MFN Exemptions

2005-2-22

CTS-Regular Session

Before we discussing on the date of the further review, we would like to give some preliminary observations that may have a merit for consideration in discussions on our future work, (if you allow me, Madame Chair).

The Korean delegation thanks those Members who explained their current situations. They clearly enhance our understanding in this regard.

We acknowledge that GATS is younger than other international arrangements, whether it is based on geographical proximities or historical relationships.

At the same time, we have our question on whether the GATS should remain as a compilation of multiple bilateral or regional relationships, or as a collection of exceptions. By being multilateral, we wonder whether we have a common goal of the global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with a common instrument of MFN obligation.

We would like to share the systematic concern as set out in the report of the Consultative Board on WTO reforms that if matters are left without

improving the international trading climate and functioning of this trade body, the MFN-based system will soon turn into a 'least-favored-nation framework.'

Against this backdrop, we noted that some Members have mentioned that deletion of the MFN exemption measures depends on the outcome of the DDA negotiations,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 market access negotiations. Likewise, we would like to put it into question whether the lack of progress in this area of the foremost importance may have a negative implication for the market access negotiations, to the opposite of the original thinking. We wonder whether the debate on the applicability of future measures such as BITs also has some bearing in this respect.

While we were reviewing the Minutes of the last couple of Special Sessions, we found that many Members stressed the importance of negotiations based on rules. We would like to question ourselves whether we are in fact negotiating on the basis of principle, when we see various exceptions on the principle of paramount importance.

With regard to the issue of duration, we presume that when the negotiators in the Uruguay Round agreed on the para six of the Annex on Article II, they had an understanding that those exceptional measures could be brought into conformity in 10 years. In this respect, we would like to ask whether there is an aspect of implementation of the existing rules rather than negotiation of further liberalization.

Finally, Madame Chair, it struck me that some Member explained the need for differential treatment, particularly on the code of conduct in the area of computer reservation services. We wonder whether this lack of trust towards private business sector is one of the important obstacles or constraints that we are faced with. Unfortunately, we have no particular solution to this problem at this moment. We just wonder whether there is any GATS-consistent way to address these concerns.

Thank you, Madame Chair.

2. 복수적 협상(Plurilaterals)

[발언문 18]

Korea's statement on the plurilateral process

2006-2-16

CTS Special Session

We appreciate chair's efforts in preparation for the Hong Kong Ministerial text, in particular, the Annex C. We are of the view that this was driven by Members' evaluation of the current status and reflects Members' wishes in the current round of negotiation.

With regard to the paragraph 7 on the plurilateral process, we supported this because we think it will help sectoral experts get together. However, we recognize that some Members have expressed their concerns on this paragraph. We do not think that it is because they regard it as a win-and-lose situation. Rather, we understand that their apprehension comes from the concerns on their regulatory capacities.

In this regard, we noted that some Members made their evaluation that there had not been a real negotiation in services. We are of the view that real negotiation starts with deepened communication and exchanges of ideas to address those regulatory concerns as a two-way process. Setting up a platform for this two-way communication among experts will help jump-start the real negotiation.

Furthermore, the plurilateral process is not totally unprecedented, since we already experienced it with the LDC groups. We think that a couple of meetings that we had with the LDC groups last year clearly gave a chance for better communication.

While we place great importance on the merit of better communication among experts, we see another merit in the respect of Members' collective

efforts. As we expand the coverage of the offer, we enter the stage of touching upon those areas where domestic stakeholders have built quite strong interest relations. Some of these interest relations seem to be so difficult to overcome on an individual basis without Members' support in concert.

As for an example from our experience, we eliminated the restric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large retail stores in 1996 as an outcome of the UR. Since then, we have been under constant pressure to re-introduce ENT-type entry restrictions to protect the small-sized stores. If we didn't inscribe the phased-in commitments and lift the restrictions as scheduled, we might be forced to depend on the easiest way to shield the domestic incumbents, instead of trying to develop more constructive and market-friendly policy measures to assist their adjustment.

We think that this experience is not the case for the developing members alone. From outsiders' viewpoint, some of the developed members seem to have their own domestic stakeholders who have the temptation to resort to the unilateral actions, or who have the fear of the foreign dominance as for the diversity in their economic activities.

Having said that, we are of the view that the plurilateral process will help experts exchange constructive ideas to move forward the negotiations, while addressing the concerns on regulatory aspects and thus overcoming the difficult domestic conditions. Combined with the conventional bilateral process, we expect that plurilateral meetings among experts will lead to the meaningful market access opportunities in this negotiation.

[발언문 19]

Some observations on MFN exemptions

2006-4-5

MFN Plurilateral

We would like also to give some initial observations. With regard to the importance of the MFN in the GATS, we fully support what Switzerland has explained. We note that some Member put it in parallel with MA and NT. From our understanding, MA and NT are in the specific commitment part of the GATS, while the MFN is in the general obligation part of the GATS. Having said, in our view, lack of cooperation in bringing those temporary exceptions into conformity with this principle is conflicting to our shared belief to join this membership, as China just emphasized.

Secondly, concerning the reciprocity-based MFN exemptions, we echo what Hong Kong, China has explained in that those exemptions could become an impediment to the market access negotiations, since those members have scheduled either ‘unbound’ or ‘NT limitations’ in their specific commitments. Having said that, we wonder whether maintaining those exemptions is in fact considered as a hurdle to the market access negotiations.

Lastly, we came into this plurilateral as a negotiating session rather than an information session. In fact, we note the paragraph 6 of the Annex on Article II Exemptions, that is “In any event, they shall be subject to negotiation in subsequent trade liberalizing rounds,” we’d like to ask Members whether the current round can indeed be one of the trade liberalizing rounds, if there is no substantial progress in the area of MFN exemptions.

3. 산하기구(Subsidiary Bodies) 회의

가. 규범작업반(WPGR)

[발언문 20]

Comments on Venezuela's submission on injury criteria

2001-5-9

WPGR-ESM

1. In regard to para 14 which suggests that indents (iii) and (iv) of para 4(b) in ADA Article III be combined into an one indent of “evolution and fundamental changes in the price structure,” we basically agree with this suggestion, given that losses and changes in prices are closely linked.

However, since the term “price structure” has a wide range of meaning which is now well-defined, we wonder whether we need to clarify this terminology. Furthermore, we suspect that the data on “price structure” may include those of trade-secret of each firm or industry which is hardly available.

Accordingly, we would like to consider more narrowed-down and readily accessible term such as “margin ratios” instead of “price structure.”

2. Regarding para 16 which is related to productivity, we would like to draw attention to the fact that, unlike manufacturing, productivities of service sectors contain measurement problems. How to measure accurate productivities of each service sectors is still a controversial issue in academics.

Therefore, we would propose that a more cautious approach be taken in using productivity as one of the injury criteria.

3. With regard to para 17 which recommends that wages be deleted from the list of injury criteria on the reasoning that wages can be affected by a range of other factors that cannot be attributed to imports. We think that this concern should be left over to the establishment of a causal relationship which is stated

in the para 4(c) of ADA Article III. We are of the view that wages should not be excluded a priori, since it is the price of mode 4.

4. Lastly, we believe that ESM should not lend itself to protectionist application. And an effective way of preventing it is the burden of proof of injury. Having said that, with respect to para 21 which suggests deleting the sentence in para 4(c) on the obligation to evaluate other known factors whose effect cannot be attributed to the increase in supply, we are afraid that deleting such obligation might lead to the abusive use of ESM.

나. 금융서비스위원회

[발언문 21]

Comment on the communication of the Norway

2004-9-28

CTFS

We thank the Norwegian delegation for the interesting communication on cross-border trade in marine and energy insurance. We would like to take up one element on the regulatory aspect of these cross-border trade.

We think that the sophisticated-ness of consumers varies across countries as well as across sectors. Even though the consumers of the marine and energy insurance tend to be more sophisticated than those of the other sectors, it may be the case that maritime and energy service provider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may have limited resources to reach for expertise in this ever-innovating world of financial technologies.

In this respect, the regulator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have a reason to be careful in liberalizing the cross-border trade. Having this in mind, we would like to ask a specific question in regard to para 16 of the Norwegian communication. It appears to suggest that supervision of foreign insurance

companies in their home countries be recognized by the host countries. We wonder whether there is any effort by the Norwegian authority to coordinate with the supervisory authorities of other countries in this regard. We are also curious of whether there is any recognition arrangements with foreign regulators for their authorization of foreign insurance providers or brokers. Thank you.

다. 국내규제작업반(WPDR)

[발언문 22]

Korea's intervention on necessity test

2007-1-24

WPDR

Thank you, Mr. Chair,

At the outset, we appreciate your efforts and devotion to the area of domestic regulation which, we believe, is the core of the trade in services and will be at the center stage of negotiations in the near future, when we sufficiently accomplish our task on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As we are all aware, trade in services continues to be expanding, both globally and regionally. It will gain its importance, in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Members alike, in contributing to the efficiency of the economy and the livelihood of its constituencies. Accordingly, it will surpass agriculture and NAMA in terms of public attention, in the successive rounds of negotiations, if we have a proper institutional framework to govern it. In this respect, we are of the view that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s only a tip of the iceberg of the services trade, and most of its substance lies in the area of domestic regulation.

Having said that, it is our view that its discipline, being negotiated at this

moment, will determine the future universe of trade in services and subsequently the scope and quality of any negotiations that our successors will engage in. Hence, any attempt to dispose of its substance to the level similar to a declaration undermines our role as negotiators, in the history of services negotiations. It may be viewed in the future as such that the DDA services negotiators, under the leadership of our distinguished Chair, failed to respect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succumbing to the unjustified inflexibilities of the regulators to cooperate or their unwarranted fear regarding the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to the effect of giving misleading implications and making them more solidified.

Against this backdrop, it is to our great regret that the concept of necessity test has disappeared in your text, concerning the procedural aspects such as qualification and licensing procedures. It is a mechanism to induce the regulators to self-restraint their power to regulate in a reasonable manner not to impose disguised or circumventing restrictions in its abuse with respect to the procedures.

Taking advantage of the informal mode, let me elaborate further on this point, from my observations in the process of internal negotiations. It seems to me that the internal negotiating power, falls disproportionately in favor onto the regulators, vis-à-vis service suppliers or trade negotiators. In particular, I cannot erase my impression that regulators seem to be subject to the ever-lasting temptation to use the licensing and qualification procedures as a convenient instrument to discourage or deter the service suppliers, particularly in case for any protectionist purposes. This temptation often reveals itself in the form of cumbersome documents and procedures or unreasonable delay in the qualification and licensing process. Furthermore, regulators have the legitimate authority not to reflect any prior comments into those burdensome procedures.

Accordingly, we are of the view that the concept of a necessity test concerning the procedural aspects is a helpful treatment for this syndrome

which regulators cannot cure by themselves, even with the requirement for prior comments. In other words, it will provide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regulators to think twice and test themselves, before transferring the entire burden to the service suppliers, for their convenience.

Respecting the right to regulate in the licensing and qualification requirements *per se*, while incorporating this self-testing mechanism to the regulators in the procedural aspects, can thus achieve the balance between the right to regulate and facilitation of trade in services. We think that this leads us to the equilibrium for the tensions between the regulators and service suppliers that we can apply horizontally, while acknowledging that there may be multiple sector-specific equilibrium for these tensions with respect to the licensing and qualification requirements *per se*, which are difficult to arrive at across the board.

In this regard, we also think that it will particularly benefit SME service suppliers, in developed and developing Members alike. Unlike large multinationals which have abundant resources to collect information and provide prior comments to their interests, small and medium sized service suppliers often face overly complex procedures and documents as a deterring factor to their activities, considering that they lack resources for prior comments. A necessity test regarding the procedural aspects is thus a way of achieving another equilibrium between large multinationals and SME service suppliers.

Before concluding, we would like to make it clear that we are not trying to impede on or disrespect regulators' right to regulate. We are just trying to deliver our message that GATS is not such a formidable monster as to be alienated and that there is a way to work it out with a compromise in order to move towards our, I mean, negotiators and regulators alike, shared mutual goal of a more prosperous global economy. And we are of the view that it is our role as negotiators to continue our efforts to better communicate with the regulators and deliver this message precisely. Otherwise, it hardly makes

sense if we expect more political attention to services in the future rounds of negotiations, once we are trying to settle down to an improper level of discipline in a collusive manner.

We will come back with specific suggestions to your text at a later stage, Mr. Chair.

Thank you, for your indulgence.

Major Issues of DDA Services Negotiations and Implications for Korea

June Dong Kim

This study seeks to stock-take and assess major issues of Doha Development Agenda (DDA) services negotiations. Unlike previous studies in this area,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plurilateral negotiations based on several plurilateral requests which were leaked on the internet.

As the major issues at the multilateral level addressed at the Special Session of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ree areas, that is, the assessment of trade in services, the review of negotiation progress, and the modalities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With regard to the plurilateral negotiations, among the total of 22 services sectors where plurilateral requests have been exchanged, this study aims to assess 19 services sectors, including 15 sectors whose plurilateral requests were leaked on the internet.

As for the discussions at the subsidiary bodies, this study seeks to assess those conducted at the Working Party on GATS Rules, Committee on Trade in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on Specific Commitments, and Working Party on Domestic Regulations.

As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suggests a pro-active position with regard to the second revised offer, considering the fact that in most of the service sectors, Korea has been experiencing remarkable developments.

In addition, with regard to the other negotiation strategies, this study recommends for Korea to request the removal of MFN exemption

measures, incorporation of additional commitment in architectural services related to qualification requirements as in Korea's UR schedule, and request of improving offers in the five infrastructure services of telecommunication, construction, distribution services, financial services, and maritime services.

〈책임〉

김준동

미국 University of Chicago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선임연구위원
(現, E-mail: jdkim@kiep.go.kr)

저서 및 논문

『DDA 협상 지연 요인의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공저, 2012)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공저, 2021) 외

KIEP 연구자료 발간자료 목록

■ 2022년

- 22-01 일본 디지털전환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 김규판
- 22-02 주요 선진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변화와 시사점 / 정형곤·이아라
- 22-03 Global Supply Chains in a Post-Covid Multipolar World: Korea's Options / Shahid Yusuf and Danny Leipziger
- 22-04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평가와 시사점 / 김준동

■ 2021년

- 21-01 유럽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분석과 시사점: e-모빌리티를 중심으로 / 이현진·이철원·윤형준
- 21-02 디지털전환 시대의 국경 간 전자조달 논의동향과 시사점 / 박지현
- 21-03 미·중 마찰의 주요 쟁점과 한·중 경제협력 방향 / 양평섭·최지원
- 21-04 북한 대외 채무의 쟁점과 과제: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 최유정·한하린
- 21-05 미국의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 원인 분석 및 평가 / 조동희·오테현·이현진
- 21-06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연구 / 박혜리·박지현
- 21-07 코로나19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 박순찬
- 21-08 미국과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정책 시사점 / 서진교
- 21-09 유럽 주요국 녹색당의 성공 및 실패 요인 분석 / 조동희·장영욱·이현진·윤형준
- 21-10 인도네시아 탄소 중립 대응 정책과 한국의 그린뉴딜과의 협력 방안 / 이재호

■ 2020년

- 20-01 중국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구축과 사례연구 / 김홍원·김주혜
- 20-02 일본의 개방형 혁신전략: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 정성춘
- 20-03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연구 / 박민숙·이효진
- 20-04 디지털세 논의에 관한 경제학적 고찰 / 이규엽·김현수
- 20-05 EU GDPR 위반사례의 분석과 시사점 / 이규엽·엄준현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 등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기획성과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gh@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과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비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개 인 회 원 <input type="checkbox"/>		
연 구 자 회 원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



Major Issues of DDA Services Negotiations and Implications for Korea

June Dong Kim

본 연구에서는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을 정리 및 평가하고, 저자가 수석대표로서 활동하면서 취득한 공식·비공식 정보를 기록하는 한편, 이에 기초하여 향후 협상 재개 시 우리나라의 제2차 수정 양허안의 작성 방향과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의 경우 DDA 서비스협상 초기와 달리 이제는 각 분야별 서비스산업이 상당히 발전한 상태이고 이미 선진국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선언하였으므로, 전향적으로 제2차 수정 양허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통신, 건설, 유통, 금융, 해운 등 5대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들 서비스 분야에서의 양허 개선을 주요 회원국들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ISBN 978-89-322-2486-2
978-89-322-2064-2(세트)

정가 7,000원